

본 보고서는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으로,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라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대한민국 만들기

Better Together: Building a Resilient and Inclusive Korea

2027 년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 제출용

2026. 9.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본 보고서는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으로,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라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론 (Introduction)

3.1. 배경과 목적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는 각국이 이행 현황을 자발적·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발적 국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는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각국은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성과와 과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 년 첫 VNR 을 제출하여 국가 이행체계와 주요 정책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였으며, 이번 보고서는 이후 11 년 만에 제출하는 두 번째 VNR 이다.

2030 년 목표 시한이 다가오고 있으나, 전 세계의 SDG 이행 수준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보고서 2026'에 따르면 세부목표의 36%만이 2030 년까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49%는 진전이 미흡하거나 정체되어 있고, 15%는 2015 년 기준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민국의 두 번째 VNR 은 첫째, 지난 10 년간의 SDGs 이행성과와 남은 격차를 데이터와 정책 경험에 근거하여 점검하고, 둘째, 2030 년까지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대한민국의 이행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2. 제 1 차 VNR 이후 10 년: 무엇이 달라졌는가

제 1 차 VNR 을 제출한 2016 년 이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에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18 년에는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마련하였고, 2022 년에는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을 확대·개편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등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와 지방의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24 년에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출범하고 국무조정실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두어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2025 년에는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개편되면서 국가통계 기능과 함께 범정부 통계·데이터의 총괄·조정 및 연계·활용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는 향후 다양한 행정·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지난 10 년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은 법·제도, 추진체계와 데이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한편 지난 10 년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여건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여건과 평생학습 참여 등 여러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집중호우 등은 사회·경제·환경 전반의 회복력 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또한 2024 년 말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헌정질서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민주적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이행 여건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 지난 10 년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점검하고, 2030 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방향을 살펴본다.

3.3. 보고서의 범위와 구성

본 보고서는 17 개 지속가능발전목표 전체를 검토 범위로 한다. 제 6 장에서는 각 목표별로 지난 10 년간의 주요 변화와 이행성과, 남은 과제, 주요 정책과 향후 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개별 목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목표와 정책 간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보고서의 서술 시기는 크게 두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제 5 장과 제 6 장에서는 2016 년부터 2026 년까지의 제도적 변화와 목표별 이행성과 및 남은 과제를 점검하였다. 제 8 장과 제 9 장에서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2030 년까지 SDGs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와 향후 이행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10 년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30 년까지의 주요 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3.4. 서술 원칙

본 보고서는 다음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다.

첫째, 정책과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지난 10 년간의 이행성과와 남은 과제를 함께 살펴보았다. 성과가 나타난 분야뿐 아니라 목표 달성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제약요인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가능한 범위에서 성별·연령·지역·소득 등으로 지표를 세분화하여 국가 평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집단 간 격차와 취약계층의 여건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 LNOB)'는 원칙을 보고서 전반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셋째,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와 정책 전환 과정에서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지 살펴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응과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넷째, 개별 목표를 독립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목표 간 상호연계성과 정책 간 영향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한 분야의 정책이 다른 목표의 이행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 4 장. 작성 방법론 및 절차 (Methodology & Process)

4.1. 보고서 작성 추진체계

이번 보고서는 기획, 집필, 의견수렴 및 발표준비의 전 과정에 관계부처·국책연구기관·전문가·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점검 과정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엔이 강조하는 사회 전체의 참여(Whole-of-Society Approach)를 보고서 작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VNR 작성과 발표 준비 전반을 총괄하고 관계부처 및 참여기관 간 협의·조정을 담당한다. 한국환경연구원은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연구진과 협력하여 보고서 집필을 총괄한다. 사회혁신연구소는 숙의공론 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시민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승인통계, 글로벌 지표, 국제비교 자료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 활용되는 통계를 검토하고, 관계부처 및 국제기구 자료와의 정합성을 점검한다.

이와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해 정부 중심의 보고서 작성에서 벗어나 연구기관의 전문성, 시민사회의 현장 경험, 통계기관의 데이터 역량을 함께 활용하고, 작성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구분	주요 역할	주요 업무
국무조정실	보고서 작성 총괄 및 범정부 조정	관계부처 등 이해관계자 협의, 일정·범위 관리, 유엔 제출 및 발표 준비
한국환경연구원	보고서 집필 실무 주관	원고 취합 조정, 보고서 전체 구성과 논리 검토, 국·영문 보고서 내용 정합성 관리
국책연구기관 목표별 집필진	17 개 목표별 원고 작성	목표별 원고 작성
사회혁신연구소	숙의·공론 설계	숙의공론장, 이해관계자협의회 운영
분야별 핵심 이해관계자 집단	숙의공론 참여	숙의공론장 논의 결과물 도출
국가데이터처	데이터 품질 관리	보고서에 활용된 통계 검증

4.2. 국민,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보고서 작성 과정에는 다음 세가지 방식으로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첫째, 작성과정에 대한 협의와 자문이다. 관계부처·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보고서 협의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작성기준 마련, 원고 작성, 초안 검토 등 주요 단계마다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공론과 의견수렴이다. 지역, 청년,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숙의공론장을 운영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의 배분, 미래세대가 중요하게 보는 과제, 주요 이슈의 해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논의 결과는 관계부처 등의 검토를 거쳐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셋째, 국가보고서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이다. 시민사회는 정부 VNR 과 별도로 독립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청년단체도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입장문을 마련하고 있다. 각 문서는 작성 주체와 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작성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은 정부 VNR 작성 과정에서 검토·참고할 계획이다.

분야	대상·구성	방식
① 일반 국민	전 국민(일반 국민 누구나)	지속가능발전포털 온라인 의견수렴 (2026 년 9 월~11 월)
② 지역(5 권역)	전북/광주전남/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충남/충북/세종 서울/경기/인천	보고서 초안 검토 및 토론을 통해 권역별 자문 의견서 도출 (2026 년 10 월~11 월)
③ 이해관계자(MGoS)	여성, 장애인 등 최대 14 개 그룹	보고서 초안에 대해 그룹별 진행자가 자발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그룹별 입장문을 도출 (2026 년 10 월~11 월)
④ 청년·미래세대	SDG 활동 청년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종합토론을 통해 청년의견서 도출 (2026 년 10 월~11 월)

4.3. 데이터와 진단의 방법

지표와 데이터는 국제 비교 가능성과 국내 이행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활용하였다. 우선 유엔 세계지표체계(Global Indicator Framework, GIF)의 Tier I-II 지표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와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제 4 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K-SDGs 목표·세부목표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지속가능발전 이행상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가데이터처의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에 수록된 지표들을 시계열, 인구·지역 등 세분화 자료와 국제 비교 결과를 목표별 이행상황을 진단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하였다.

지표에 대한 진단에는 두 가지 분석 틀을 함께 적용하였다. 하나는 2024 년 국가지속가능성평가에서 활용한 4 단계 날씨 진단(맑음·구름조금·흐림·뇌우)으로 국내 시계열의 추세를 진단하였다. 다른 하나는 OECD 평균 대비 수준과 최근 추세를 결합한 4 분면 진단으로 국제 비교상 위치와 변화 방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4 분면 진단에서는 OECD 평균 대비 수준과 최근 국내 추세를 기준으로 지표를 **양호·개선, 개선 중, 유지 노력, 개선 필요**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양호·개선’은 OECD 평균 대비 수준이 높고 최근 추세도 개선되는 경우, ‘개선 중’은 현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개선 추세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지 노력’은 현재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최근 추세가 정체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이며, ‘개선 필요’는 현재 수준이 낮고 최근 추세도 정체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국제 비교 수준과 변화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현재 성과가 양호하면서 개선이 지속되는 영역, 아직 국제 비교 수준은 낮지만 개선되고 있는 영역,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한 영역,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해당 진단은 개별 지표에 대한 성과를 단순히 등급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SDGs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진전과 남은 과제를 균형 있게 파악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목표별 주요 성과와 취약 영역을 확인하고, 그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향을 검토하였다.

4.4. 목표별 서술 구조와 공통 관점

[그림 4-1] 제 2 차 VNR 서술 체계



제 6 장의 17 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각 목표의 이행상황을 일관된 기준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공통된 서술 구조에 따라 작성하였다. 각 목표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적·사회적 맥락을 먼저 제시하고, 지표를 통한 진단과 주요 성과, 남은 과제를 차례로 살펴본 뒤,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과 다른 목표와의 연계, 국제적 기여 및 향후 방향까지 함께 다루었다. 이에 따라 목표별 원고는 A. 한국적 맥락, B. 핵심 진단, C. 양적 성과, D. 질적 성과, E. 남은 과제,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LNOB), G. 목표 간 연계성, H. 국제 기여, I. 향후 방향(~2030)의 아홉 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각 목표가 우리나라에서 갖는 의미와 현재의 이행 수준을 먼저 살펴보고, 지난 10 년간 나타난 주요 성과와 남은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취약계층과 집단 간 격차,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2030 년까지 필요한 정책방향을 함께 다룸으로써 목표별 성과를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표별 서술에는 두 가지 공통 관점을 적용하였다. 첫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 LNOB)'는 원칙에 따라 국가 평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성별·연령·지역·소득 등에 따른 격차와 취약계층의 여건을 가능한 범위에서 살펴보았다. 둘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관점에서 기후·에너지·산업·디지털·인구구조 등 주요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정책 사각지대, 그 영향이 계층·지역·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고려하였다.

보고서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 메시지로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대한민국 만들기(Better Together: Building a Resilient and Inclusive Korea)」를 설정하였다. '함께하는'은 포용과 협력을, '더 나은 미래'는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발전 방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통 메시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① AI·디지털 포용, ② 기후·사회 회복력, ③ 민주적 협치, ④ 국제적 책임과 파트너십의 네 가지 주요 주제를 설정하였다. AI·디지털 포용은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기회와 격차를, 기후·사회 회복력은 기후·환경 변화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을, 민주적 협치는 시민 참여와 공론 및 제도의 포용성을, 국제적 책임과 파트너십은 국제협력과 경험 공유를 통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살펴본다.

4.5. 분석의 범위와 제약

보고서는 국가승인통계와 행정자료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상황을 분석하였으나, 자료의 가용성과 분석 방법 측면에서 일부 제약이 있었다.

첫째, 성별·연령·장애·이주배경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분야가 있어 일부 목표에서는 집단 간 격차와 취약계층의 여건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활용 가능한 세분화 통계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정량적 분석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조사와 사례 등 정성적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이 여러 목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러한 목표 간 상승효과와 상충관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와 분석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여러 목표와 연계되는 주요 정책·사업은 가능한 별도 사례로 제시하고, 각 목표의 연계성 항목을 통해 다른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약은 향후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단별·지역별 세분화 통계를 확충하고, 목표 간 연계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등 데이터와 분석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정책 및 이행기반 (Policy & Enabling Environment)

5.1. 2030 의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대한민국은 지속가능발전을 국가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법률, 국가·지방 차원의 전략과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2022 년 1 월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을 확대·개편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제도화하였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 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5 년마다 재검토·정비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전략의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이행상황을 2 년마다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이 국가기본전략과 관련된 198 개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개별 정책과 계획에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대한민국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현재 제 4 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17 개 목표, 119 개 세부목표와 236 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이행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목표체계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유엔 글로벌 지표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가 지속가능성보고서가 2 년마다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8 차례의 국가 지속가능성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지방 차원의 제도적 기반도 확대되어 왔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16 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27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99 곳(87.6%)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2025 년 출범한 현 정부는 123 대 국정과제 가운데 제 15 번 과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을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5.2. 국가 추진체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가위원회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광역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국가·지역·민간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국가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중앙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며, 현재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이 국가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며 관계부처 간 협의와 정책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고 전담 조직을 둬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이 상호 연계된 과제에 대한 범정부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정책의 전문적·과학적 지원 기반도 강화하였다. 2026년 2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한국환경연구원(KEI)을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담 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연구센터는 국가·지방 기본전략 수립 지원, 지속가능성 평가, 행정계획 검토,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 및 국제협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정책 수립과 이행점검을 지원한다. 향후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적 연구·분석과 정책지원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K-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를 소관 정책과 사업을 통해 이행하고, 국가위원회는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과제를 조정하며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관련 정책의 보완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5.3. 지방 추진체계

지방 차원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민관협력체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에는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공무원이 참여하며, 지방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등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심의·자문한다.

지역의 시민참여와 실천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지역 단위의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등 전국 단위의 교류와 확산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도 지방정부 간 정책 경험 공유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5.4.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제도와 이행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은 사회보장, 접근성 개선, 차별과 배제로부터의 보호 등 여러 정책영역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첫째, 사회보장 범위가 확대되었다. 빈곤가구 가구의 공적이전소득급여 지급률은 2016 년 47.8%에서 2024 년 65.8%로 상승하였고, 장애인은 67.9%에서 78.0%로, 여성은 20.8%에서 31.5%로 높아졌다. 소득 1 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도 같은 기간 380 만원에서 679 만원으로 78.7% 증가하였다.

둘째, 생활서비스와 이동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상수도 보급의 도농 격차가 완화되고 저상버스 도입률이 44.4%에 이르는 등 물리적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셋째, 차별과 배제로부터의 제도적 보호도 확대되고 있다. 차별 경험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고 인신매매 방지 법제 도입 등 보호체계도 보완되었다. 다만 여성, 노인 등 일부 집단에서는 빈곤, 접근성, 사회적 배제 등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적 보호의 범위뿐 아니라 실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별·연령·장애·이주배경·소득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취약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평균적인 지표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격차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5.5. 데이터 관리체계와 이행 기반

데이터는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의 성과와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다. 2022 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데이터처는 SDGs 관련 통계의 생산·관리와 국제 비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 년부터 매년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하여 국내 SDGs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AI 활용을 고려한 메타데이터 구축과 데이터 기본법 제정 등 변화된 데이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활동과 환경 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환경경제통합계정(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SEEA)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보호지출과 환경조세 계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 계정과 생태계 계정 구축을 위한 연구를 통해 경제와 환경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제 6 장. 17 개 목표별 이행현황 (Progress on Goals and Targets)

목표	해당 5P	관련 부제
SDG 1 빈곤 종식	People (사람)	② 기후·사회 회복력 · ④ 글로벌 책임과 파트너십
SDG 2 기아 종식	People (사람)	② 기후·사회 회복력 · ④ 글로벌 책임과 파트너십
SDG 3 건강과 웰빙	People (사람)	② 기후·사회 회복력 · ① AI·디지털 포용
SDG 4 양질의 교육*	People (사람)	① AI·디지털 포용 · ② 기후·사회 회복력
SDG 5 성평등	People (사람)	② 기후·사회 회복력 · ① AI·디지털 포용
SDG 6 물과 위생	Planet (지구) · People (사람)	② 기후·사회 회복력 · ④ 글로벌 책임과 파트너십
SDG 7 에너지	Prosperity (번영)	② 기후·사회 회복력 · ① AI·디지털 포용
SDG 8 양질의 일자리·경제성장	Prosperity (번영)	① AI·디지털 포용 · ② 기후·사회 회복력
SDG 9 산업·혁신·인프라	Prosperity (번영)	① AI·디지털 포용 · ④ 글로벌 책임과 파트너십
SDG 10 불평등 완화*	Prosperity (번영)	② 기후·사회 회복력 · ④ 글로벌 책임과 파트너십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Prosperity (번영)	② 기후·사회 회복력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Planet (지구)	② 기후·사회 회복력
SDG 13 기후행동	Planet (지구)	② 기후·사회 회복력
SDG 14 해양생태계	Planet (지구)	② 기후·사회 회복력
SDG 15 육상생태계*	Planet (지구)	② 기후·사회 회복력 · ④ 글로벌 책임과 파트너십
SDG 16 평화·정의·제도	Peace (평화)	③ 민주적 거버넌스 · ① AI·디지털 포용
SDG 17 파트너십*	Partnership (파트너십)	④ 글로벌 책임과 파트너십 · ① AI·디지털 포용

* 2027 HLPF 심층검토 대상 · 관통축(정의로운 전환 · LNOB)은 17 개 목표 공통 적용

■ SDG 1 :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Goal 1 : 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한국은 지난 반세기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1953 년 66.5 달러에 불과했던 1 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5 년 36,963.4 달러에 이른다(한국은행, 국민계정, 2026). 절대 빈곤을 벗어난 한국은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해가면서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을 1990 년 2.5%에서 2016 년 9.2%, 2024 년 15.3%까지 확대하였다(OECD, SOCX, 2026). 한국은 지난 10 년간(2016~2026) 경제성장의 성과를 재분배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시기 한국은 아동수당 도입, 노인 대상 기초연금 급여 인상, 빈곤층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 공적 소득보장의 외연을 꾸준히 넓혔고, 코로나 19 팬데믹 국면에서는 재난지원금으로 고용위기, 소득 감소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하며 고령층 소득 기반도 서서히 두터워지고 있다.

그렇지만 기여 기반 노후소득보장 제도로부터 배제된 후기 고령층의 빈곤율은 여전히 매우 높고, 은퇴연령인구(66 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도 개선되다가 2022 년 이후 악화하는 신호가 나타났다. 빈곤율의 성별 격차는 높은 여성 노인 빈곤에 기인하며, 장애인 빈곤율(35.4%, 2024)도 비장애인 빈곤율(14.2%, 2024)의 2.5 배에 이른다.

이 목표의 과제는 사회안전망의 보장 범위를 취약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B. 핵심 진단 : 4 분면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이상(빈곤율 낮음)	OECD/국제평균 미만(빈곤율 높음)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근로연령인구(18~65 세) 상대적 빈곤율	[^] 개선중 영역 ← 상대적 빈곤율 · 66~75 세 상대적 빈곤율, 공적연금 수급률, 사회지출, GDP 대비 현금 사회지출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 GNI 대비 빈곤감소 목적 ODA 비중	[X] 개선필요 영역 ← 76 세 이상 빈곤율, 은퇴연령(66 세 이상) 여성 빈곤율, 장애인 빈곤율

[+] 양호·개선 영역으로 한국의 근로연령 인구(18~65 세)의 상대적 빈곤율(처분가능소득 중위 50% 기준)은 2011 년 13.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22 년 10.0%를 보이는데, 같은 시기 OECD 국가 평균을 미세하게 하회한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2022)로 OECD 37 개국 중 9 번째로 높고, 특히 은퇴연령 인구(66 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202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1 년 이후 빈곤율은 개선되는 경향 속에 있었지만, 최근 다시 소폭 악화하였다. 특히, [^] 개선중 영역으로 66~75 세 인구의 빈곤율은 2011 년 43.6%에서 2024 년 26.6%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것은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공적소득비례연금 지급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또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빈곤 대응 목적의 현금 급여는 2011 년 2.98%에서 2020 년 6.74%까지 증가하였고, 특히 코로나 19 유행 시기에는 재난지원금을 이용하여 빈곤에 대응하였다. [!] **유지노력 영역**으로 한국은 개발협력 역사에서 45 년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을 이룬 바 있는데, 수원국 빈곤감소를 위해 지출한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0 년 0.010%에서 2023 년 0.017%로 OECD 34 개 국 중 17 위에 해당하였는데, 2024 년에는 이 비율이 0.010%로 감소하였다. [x] **개선필요 영역**으로 **만 76 세 이상 인구 빈곤율**은 2011 년 55.5%에서 2021 년 51.9%로 개선되었다가, 2024 년 53.8%로 다시 악화하였다. 이렇듯 한국의 빈곤율은 2021 년을 저점으로 개선세가 꺾이는 것이 확인되는데, 공적소득이전의 빈곤 감소 영향이 축소되고 있는 점은 경고 신호다. 한편, 은퇴연령 여성인구 빈곤율은 2011 년 51.1%에서 2024 년 42.7%로 낮아졌지만, 2024 년 은퇴연령 남성인구 빈곤율 31.3%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장애인 빈곤율은 2016 년 37.5%에서 2024 년 35.4%로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다.

종합하면 근로연령층의 빈곤 지표는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후기 고령층·여성 노인·장애 인구에 빈곤이 집중되어 있어, 정책 과제는 평균적 빈곤율의 개선에서 남아 있는 집단별 격차의 해소로 이동하고 있다.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상대적 빈곤율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 년 18.5%에서 2021 년 14.8%로 꾸준히 하락한 뒤, 2022~2023 년 14.9%로 정체하고 2024 년 15.3%로 악화되었다. 전체 인구의 평균 빈곤 격차도 2011 년 37.0%에서 2020 년 30.1%까지 감소 추세였지만, 2021 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여 2024 년 31.8%를 보였다. 연령 집단별로는 50 세 이하 전 연령집단의 빈곤율이 한 자릿수(8.0~9.5%)를 보이고, 51~65 세는 13.1%, 66~75 세는 26.6%, 76 세 이상은 53.8%로 두 자릿수 이상이다. 근로연령 인구(18~65 세)의 빈곤율은 2011 년 13.9%에서 2023 년 9.8%까지 감소하였다가, 2024 년 10.3%로 다시 소폭 악화하였다[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25].

② 공적소득비례연금 지급률 65 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한 소득비례연금 지급률은 2016 년 42.3%에서 2023 년 56.1%까지로 증가하였다(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 만 59 세 이하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지역가입자 포함)도 2011 년 74.3%에서 2024 년 88.3%까지 증가하여, 노후 빈곤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③ 노인 빈곤율의 이중 구조 공적연금 성숙과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힘입어 66~75 세 인구 빈곤율은 2011 년 43.6%에서 2024 년 26.6%로 17.0%p 개선되었지만, 76 세 이상 인구 빈곤율은 2011 년 55.5%에서 2024 년 53.8%로 13 년간 1.7%p 개선에 그쳤다. 2024 년에는 대부분 연령집단의 빈곤율이 악화·정체한 가운데 66~75 세 인구 집단에서만 큰 폭(-2.8%p)의 빈곤율 감소가 나타났다.

④ **사회보호의 확대** 빈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공적소득이전급여 수급률이 2016~2024 년 사이 모두 10%p 이상 상승했다— 여성 가구원 20.8%→31.5%(+10.7%p), 빈곤가구 가구원 47.8%→65.8%(+18.0%p), 장애인 가구원 67.9%→78.0%(+10.1%p)의 순서로 공적소득이전 급여 수급률이 높았다.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포함할 때, 2021 년 이들의 공적이전급여 수급률은 각각 79.0%, 87.6%, 95.4%에 이르렀다. 저소득 1 분위 가구(5 분위 중) 가구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은 2016 년 380 만 원에서 2024 년 679 만 원으로 78.7% 증가하여 가구 경상소득의 43.8%를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여, 저소득층 소득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가계금융복지조사]. OECD 사회지출(socx) 하위 항목 중 노령, 유족, 장애, 가족, 실업, 기타사회정책 영역에서 현금 급여 지출은 2011 년 GDP 대비 2.98%에서 2020 년 6.74%까지로 증가하였다. 노령 영역 지출은 같은 기간 1.74%에서 3.25%로, 실업 영역 지출도 0.26%에서 0.78%로 증가하였고, 코로나 19 대응 과정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기타사회정책 영역의 현금급여도 2011 년 0.32%, 2019 년 0.59%로 큰 변화가 없다가 2020 년에는 1.48%로 증가하였다.

⑤ **GNI 대비 빈곤감소 목적 ODA 비중** 한국의 빈곤감소 목적 ODA 총액이 GNI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0 년 0.010%에서 2019 년 0.009%로 큰 변화가 없다가, 2020 년 0.015%로 증가하여 2022 년 0.018%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 년 0.017%, 2024 년 0.010%로 다시 감소 추세에 있다.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위기 앞에서 작동한 안전망 — 코로나 19 재난지원과 저소득 가구의 회복

배경: 2020 년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은 저소득 가구에 가장 깊은 충격을 남겼다. 소득 1 분위 가구의 저축액은 2020 년 1,710 만 원으로 이전 해에 비해 11.2% 줄어(전체 가구 -3.1%), 저소득 가구가 가진 자산을 털어 생계를 지탱했음을 보여준다.

활동: 정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위기 가구의 소득을 직접 보전했다. 2021 년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공적소득이전급여 수급률은 빈곤가구 가구원 87.6%, 장애인 가구원 95.4%, 여성 가구원 79.0%에 달했다.

변화: 소득 1 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2019 년 1,168 만 원에서 2020 년 1,314 만원으로 급증하여 가구소득의 47.4%를 차지할 정도로 재난 위험에 방어선으로 작동하였다.

시사점: 위기 시 신속한 공적 이전이 저소득 가구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실제로 복원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경험으로, 사회 회복력을 보여주는 한국적 사례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개선세의 반전.** 공적이전급여의 확대 추세에 따라 개선되던 상대적 빈곤율은 2021 년 14.8%를 저점으로 다시 상승하여 2022 년 14.9%로 증가하였으며, 2024 년에는 15.3%까지 증가하였다. 2024 년 연령집단별 빈곤율은 2021 년 이후 저점 대비 0~17 세(+1.0%p), 18~25 세(+0.9%p), 26~40 세(+1.0%p), 51~65 세(+0.8%p)로 악화가 나타나, 지난 10 여년 간의 빈곤 개선 추세의 지속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 **OECD 최상위권 노인 빈곤.** 한국의 근로연령 인구(18~65 세)의 빈곤율은 2022 년 10.0%로 OECD 국가 평균 10.1%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지만, 은퇴연령 인구(66 세 이상)의 빈곤율은 39.7%로 가장 높다. 은퇴연령 인구 빈곤율도 연령에 따라 격차가 큰데, 2024 년 은퇴연령인구 빈곤율은 37.7%이며, 이중 66~75 세 인구 빈곤율은 26.6%이지만, 76 세 이상 인구 빈곤율은 53.8%로 그 차이가 27.2%p 에 이른다.
- **여성 노년의 이중 격차.** 근로연령(18~65 세)의 성별 빈곤율은 2024 년 남성이 10.3%, 여성이 10.4%로 빈곤 격차는 0.1%p 까지 좁혀졌으나, 은퇴연령 인구의 성별 빈곤율은 남성이 31.3%, 여성이 42.7%로 빈곤 격차가 11.4%p 로 나타난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2011 년 7.8%p 에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고령 노인의 노동시장 접근성과 일자리의 질에서의 성별 격차, 공적 소득보장 제도의 확대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 노인의 어려움이 수치로 확인된다.
- **장애 인구의 정체된 빈곤.** 장애 인구 빈곤율은 35.4%(2024)로 비장애 인구(14.2%)의 2.5 배이며, 2022 년 이후 35%대에서 정체하고 있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대상은 확대된 사회보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집단이다. 76 세 이상 인구는 두 명 중 한 명 이상(53.8%)이 빈곤 상태이며, 66~75 세 인구의 빈곤율 개선 영향(-17.0%p)도 이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1.7%p). **은퇴연령(66 세 이상) 여성**의 빈곤율은 42.7%로, 해당 연령 남성보다 11.4%p 높고 남성 노인의 빈곤율 개선에 비해 여성 노인의 빈곤율 개선은 더더 격차는 확대 중이다. **장애 인구**도 그간 빈곤율이 소폭 개선되는데 그쳐 공적이전소득의 확대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격차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제도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확대와 더불어 이들 취약층에 일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다.

"사회보장 확대에 따른 빈곤 개선 효과는 76 세 이상 인구,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 충분히 미치지 못하였다 — 76 세 이상 인구의 53.8%, 여성 노인의 42.7%, 장애인의 35.4%가 빈곤 상태에 있다(2024 년 기준)."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경제성장이 곧 빈곤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 년의 빈곤율 개선은 상당 부분 공적이전의 확대에 기반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소외된 후기 고령층·여성(SDG 5)·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빈곤층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SDG 8)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산업·디지털 전환(SDG 7·8·9)의 비용이 저소득·여성·준고령 가구에 전가되면 빈곤 정책의 성과가 상쇄될 수 있으므로, 전환 정책의 설계 단계에서 분배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폭염·호우 등 기후재난의 피해는 주거와 자산이 취약한 빈곤층에 집중된다(세부목표 1.5). 빈곤층의 재난 회복력을 높이는 정책은 SDG 1 과 SDG 13(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진전시키는 교차점이며, 도시

재난 대응 체계(SDG 11)와 사회보장(SDG 10)의 연계 설계가 그 수단이 된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한국의 2024 년 ODA 지원액은 40.3 억 달러로 GNI 대비 0.21%를 차지하며, 이중 빈곤감소 목적 ODA 가 GNI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10%로 UN 이 정한 목표인 0.7%에 크게 부족하다(OECD, ODA & 국가데이터처, 2025]. 기본교육·기본보건·급수와 위생·개발 식량원조·빈곤층 통합서비스의 5 대 분야를 중심으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자국의 경험을 나누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4 년 인도적 지원(+336%)과 긴급대응(+400%)의 급증은 위기에 처한 취약국 주민에게 먼저 닿는 원조로의 전환을 보여준다(SDG 17 연계).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후기 고령인구 빈곤에 대한 표적 대응.** 빈곤 상태 개선이 정체된 후기 고령인구, 여성 노인의 소득 보장을 빈곤 대응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초연금의 취약노인 대상 보장성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확대를 추진한다.
- **빈곤율 반등의 원인 규명과 대응.** 2022 년 이후 빈곤율 정체·악화의 구조적 원인(근로·사업 소득,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을 분석하고, 빈곤 확대를 막는 고용·소득 정책을 병행한다.
- **전환기 준고령층의 소득 공백 완화.** 생애 주된 일자리의 조기 은퇴, 노동시장 정년·연금 수급연령 간 공백, 산업 전환기 고용 충격이 미래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취업·재고용, 정년 연장, 점진적 은퇴 수단을 동원한다(Just Transition 약속).
- **장애 인구 빈곤의 구조 개선.** 장애인구 고용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비장애 간 빈곤율 격차 구조를 점차 해소한다.

참고문헌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소득분배지표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국가데이터처, 2025,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국가데이터처, 연금통계(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N_006&conn_path=I3)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 한국의 공여국별 GNI 대비 빈곤감소 ODA 총액 비율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s://data-explorer.oecd.org>, 2025.12.22. 인출)

OEC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https://www.oecd.org/en/data/insights/data-explainers/2026/04/a-historic-decline-in-foreign-aid-preliminary-2025-oda-data.html>)

UN, SDG Indicators Database (<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 SDG 2 :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Goal 2 : 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절대적 기아에서 벗어났으나, 현재 SDG 2의 과제는 '풍요 속의 결핍'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식량과 식품의 공급은 충분하지만, 지난 10년(2014~2024) 사이 영양섭취가 부족한 사람의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 1인 가구의 확산과 사회적 고립, 과도한 다이어트, 부실한 식사 등 생활양식의 변화가 청년과 노인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코로나 19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을 한층 어렵게 했다. 이 시기 정부와 지자체는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과 지역 먹거리 정책을 통해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을 확대하였다.

공급 측면에서는 농업의 구조 전환이 진행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농촌 고령화 속에 농업 노동생산성이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기후위기는 식량 생산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이 목표의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확보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위기 아래에서 식량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농업의 회복력 확보다.

B. 핵심 진단 : 4분면 (Core Diagn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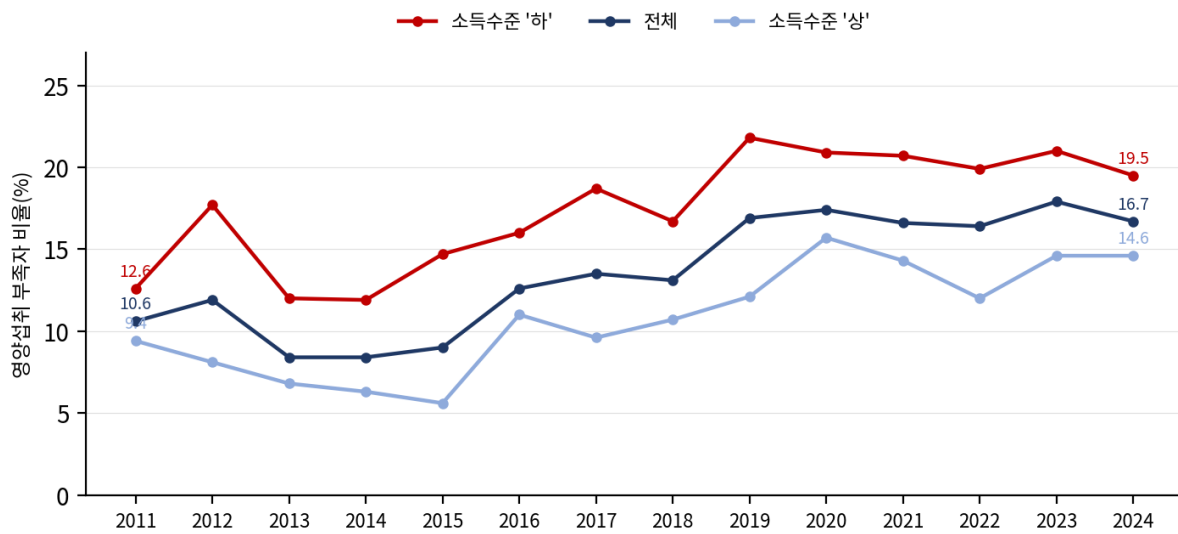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개선중 영역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 여성 빈혈(2.2.3)	[X] 개선필요 영역 ← 가축 유전 다양성(2.5.2)

SDG 2는 국제 위치와 국내 추세가 엇갈리는 목표다. **[!] 유지노력** 영역으로 **여성 빈혈 유병률**은 5~49세 기준 15.7%(2023)로 OECD 평균(17.5%)보다 낮은 중위권이지만, 국내 추세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소폭 악화되었다. **[X] 개선필요** 영역으로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은 94%(2025)로 OECD 34개국 중 8번째로 높고, 2023년 이후 90%대로 올라섰다. 한편, 국내 기준 지표인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13~2014년 8.4%를 저점으로 2023년 17.9%(2010년대 최고)까지 악화된 뒤 2024년 16.7%로 소폭 개선되었다. 방향 전환의 신호인지 일시적 반등인지 주시가 필요하다[국민건강영양조사; UN SDG Indicators Database].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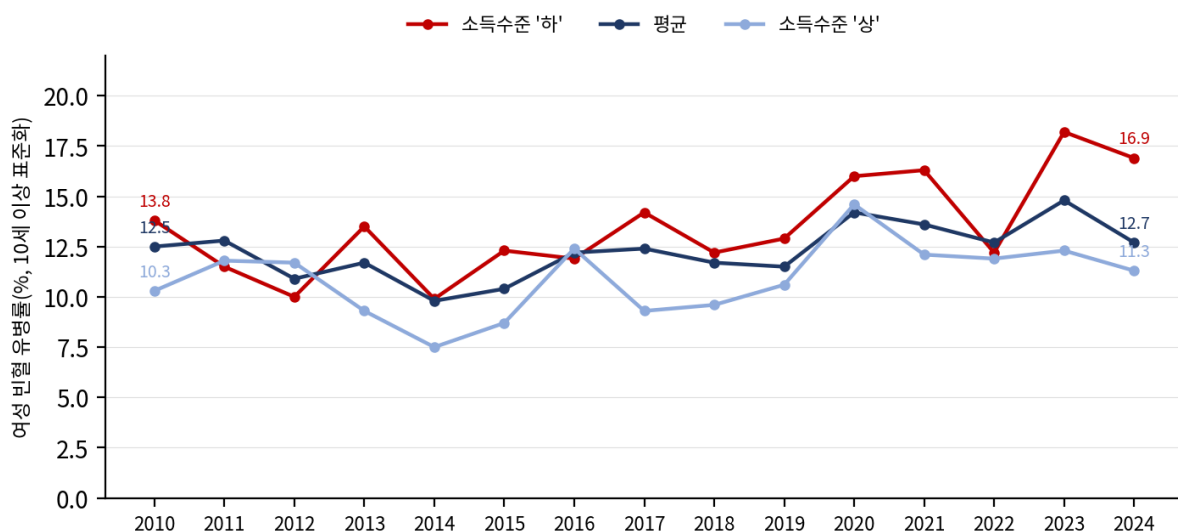
핵심 국내 보완지표 ①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글로벌 세무목표 2.1 관련). 에너지 섭취가 필요량의 75% 미만인면서 칼슘·철·비타민 A·리보플라빈 섭취가 평균 필요량에 못 미치는 인구의 비율은 2024년 16.7%로 전년 대비 1.2%p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비율이 19.5%로 1.5%p 줄어들며 소득 상·하위 간 격차가 4.9%p로 좁혀졌는데, 이는 2011년(3.2%p)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40~50대와 70세

이상에서 전년 대비 2%p 이상씩 개선되어 중장년·노년층의 영양 상태가 나아졌다[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6].



[그림] 소득수준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2011~2024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6.3.5. 인출).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 소득수준은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5분위(상/중상/중/중하/하)로 분류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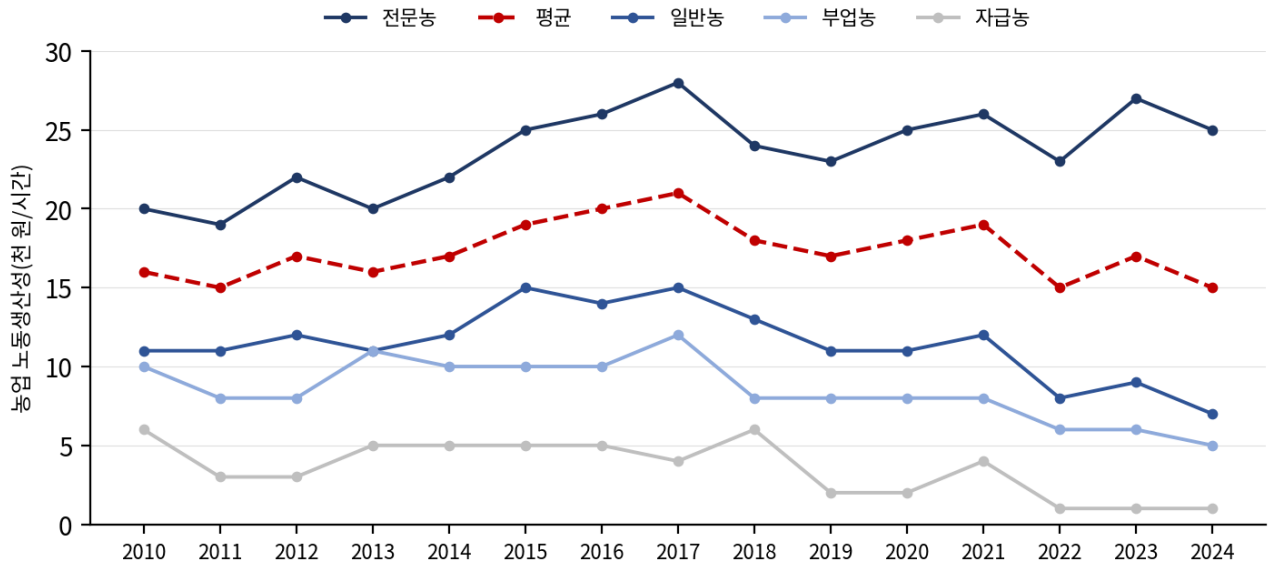
핵심 지표 ② 여성 빈혈 유병률(2.2.3). 국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10세 이상 여성연령표준화 빈혈 유병률은 2024년 12.7%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제 비교(15~49세) 기준 15.7%(2023)는 OECD 평균 17.5%보다 낮으며, 최저는 호주(11.1%)·뉴질랜드(12.4%), 최고는 튀르키예(29.3%)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19.7%)과 40대(19.3%)에서 특히 높다.



[그림] 소득수준별 여성 빈혈 유병률(2010~2024년)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5.8.26. 인출).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 소득수준은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5분위(상/중상/중/중하/하)로 분류한 값.

핵심 지표 ③ 농업 노동생산성(2.3.1)과 유전자원(2.5.2). 농업 노동생산성은 1980년 시간당

1,220 원에서 2017 년 21,444 원까지 성장한 뒤 하락세로 돌아서 2024 년 15,496 원이다. 농가 유형별 격차가 크다 — 전문농은 시간당 약 2 만 5 천 원인 반면, 일반농 7 천 원, 부업농 5 천 원, 자급농 1 천 원 수준이며, 2011 년 대비 격차가 확대되었다[농가경제조사].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비율은 94%(2025)로, 재래 가축의 사육 규모가 매우 작은 현실과 정교한 데이터 관리가 함께 반영된 결과다.



[그림] 농가 유형별 농업 노동생산성(2010~2024 년, 천 원/시간) — 출처: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 주: 주업농가(경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 만 원 이상)이면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큰 농가)는 전문농가(경지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0 만 원 이상)와 일반농가로, 부업농가는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작은 농가, 자급농가는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이면서 농업총수입 200 만 원 미만인 농가.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취약계층 영양 지원과 지역 농업의 연계 — 농식품바우처

배경: 소득이 낮을수록 신선식품 섭취가 어려워 영양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확인되었다. 저소득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고소득층보다 5%p 안팎 높게 유지해 왔다.

활동: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채소·과일·우유 등 신선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을 거쳐 본사업으로 확대하였다. 농식품바우처는 국산 농산물 구매와 연계되어,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지역 농업의 판로 확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변화: 2024 년 저소득층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1.5%p 하락하여 소득계층 간 격차가 4.9%p 로 좁혀졌다 — 2011 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시사점: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면서 국내산 농산물 소비도 확대하는 목적형 식품복지제도이다. 수요(영양)와 공급(농업)을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한 접근은 '필요 속 결핍'을 겪는 다른 고소득 국가들과의 동료학습 소재가 된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10 년에 걸친 영양 지표의 후퇴.**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2013~2014 년 8.4%에서 2019 년 이후 16%대로 두 배가 되었고, 2015 년과 비교하면 10 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5%p 이상 증가했다. 2024 년의 개선(-1.2%p)에도 불구하고 10 년 전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 **청년·청소년의 결식.**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인이 아니라 20 대(22.3%)와 10 대(21.0%)다. 성장기와 청년기의 영양 부족은 생애 전반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 **성별 격차.** 여성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높으며(2024 년 격차 4.4%p), 여성 빈혈 유병률도 2010 년대 중반 이후 완만히 악화되어 왔다. 저소득층 여성의 빈혈 유병률(16.9%)은 소득 상위층보다 5.6%p 높다.
- **농업 생산 기반의 약화.** 농업 노동생산성이 2017 년 이후 하락세이고, 전문농과 소규모 농가 간 노동생산성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지역 가축품종의 멸종위험 94%는 식량 시스템의 유전적 회복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대상은 식품 공급이 충분한 사회에서도 영양이 부족한 집단이다. 20 대의 22.3%가 영양 부족 상태이며, 1 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불규칙한 식사가 그 배경이다. 독거노인(70 세 이상 19.4%)과 저소득 가구(19.5%)의 영양 상태도 개선되지 않았고, 저소득 여성은 빈혈 유병률이 16.9%로 이중의 부담을 진다. 공급 측에서는 시간당 1 천~7 천 원의 생산성에 머무는 **소규모·고령 농가**는 농업구조 전환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 이들을 배제한 규모화는 정의로운 전환에 부합하지 않는다. '영양 부족' 지표가 결식과 간편식 의존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측정의 한계도 함께 기록할 사항이다.

"20 대의 22.3%, 저소득층의 19.5%가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 — 기아의 종식이 영양의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농업의 규모화·스마트화는 생산성 제고(SDG 8.9)에 기여하지만, 소규모·고령 농가가 전환에서 배제될 경우 농촌의 소득 격차(SDG 10)를 확대할 수 있다. 구조 전환 정책은 소농의 참여 경로와 기후 적응 비용의 분담 설계를 함께 갖출 때 생산성과 포용성을 동시에 진전시킬 수 있다.

식생활 영역에서는 저소득층의 먹거리 접근(SDG 1), 영양과 건강(SDG 3), 여성 빈혈(SDG 5)이 하나의 정책망으로 연결되며, 음식물 폐기물 감축(세부목표 12.3)은 식량 시스템의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SDG 13)을 함께 개선하는 지점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의 변동성(SDG 13)은 식량안보 정책이 기후 적응 정책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한국은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식량을 나누는 나라가 되었다. 개발 식량원조는 한국의 빈곤감소 목적 ODA의 5대 핵심 분야 중 하나이며(SDG 1 연계), 쌀 등 식량의 인도적 지원과 함께 자국의 농업 발전 경험 — 종자 개량, 농촌 개발, 관개 기술 — 을 개도국과 나누는 농업 ODA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벼 종자와 재배 기술을 지원하는 협력은 '받은 경험을 나누는' 한국형 기여의 대표 사례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생애주기 영양 정책의 재설계.** 청년(1인 가구)·노인(단독가구)의 결식과 영양 불균형에 대응하는 생애주기·가구특성별 영양 정책을 강화하고, 영양 교육과 정보 제공 등 예방적 접근을 확대한다.
-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의 제도화.** 농식품바우처지원제도 등 취약계층 신선식품 지원을 확대하여 소득계층 간 영양 격차(4.9%p)의 축소 추세를 정착시키고, 저소득 여성 빈혈 예방을 병행한다.
- **농업의 정의로운 전환.** 전문농의 경영 역량·규모화를 지원하되, 일반농·부업농·자급농에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여 전환에서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한다.
- **식량 시스템의 유전적 회복력.** 토종 가축·종자 유전자원의 보전과 활용 체계를 강화하여 멸종위험 비율(94%)의 개선을 도모한다.

참고문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6.3.5. 인출)

국가데이터처, 농가경제조사(<https://kosis.kr>, 2025.8.26. 인출)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3.6. 인출)

FAO, Domestic Animal Diversity Information System(DAD-IS)

■ SDG 3 : 모든 연령층의 모두를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Goal 3 :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전국민건강보험에 기반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그간 보편적건강보장(UHC) 지수를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올렸다. 이러한 가운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에 도달했다[국가데이터처, 2025 고령자 통계(2025)]. 고령자는 1 인당 평균 2.2 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3 개 이상 보유한 비율도 35.9%에 이르며, 11.3%는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년 노인실태조사(2024)]. 고령인구는 주로 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전체 인구의 50.8%는 수도권에 거주하며[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2020 년 역전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도 수도권·대도시에 편중되어 인구당 기준으로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진다 —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는 특·광역시 3.4 명, 도 지역 2.1 명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2026.1.2. 인출)]. 이 목표의 과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모든 지역과 집단에 고르게 보장하는 것이다.

B. 핵심 진단 : 4 부문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보편적 건강보장(3.8.1)	[^] 개선중 영역 ← 보건의료 인력(3.c.1)·흡연율(3.a.1)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 전자담배 사용률(3.a)·여성 음주율(3.5)	[X] 개선필요 영역 ← 자살률(3.4.2)

[+] **양호·개선 영역**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UHC SCI)**는 2021 년 89 점으로 OECD 에서 두 번째로 높고, 2010 년(82 점) 이래 7 점이 올랐다. [^] **개선중 영역**으로 **보건의료 인력**과 **흡연율**로 주요 보건의료 인력 밀도는 인구 1,000 명당 9.3 명(2023)으로 2011 년(5.5 명) 대비 크게 늘었으나 OECD 평균(14.4 명)에 못 미친다. 15 세 이상 매일 흡연율(15.3%, 2023)은 OECD 평균(14.9%)을 소폭 웃돌지만 2011 년 대비 7.9%p 하락했다. UHC 세부 영역 중 비감염성 질환 영역(76 점: 흡연 70 점·고혈압 71 점)이 기준선(80 점)에 못 미친다는 점은 새로운 과제이다. [!] **유지노력 영역**은 전자담배 사용률과 여성 음주율 증가이다. 전자담배 사용률이 2024 년 12.1%로 급증하고, 여성 연간음주율 및 고위험 음주율이 증가했다. [X] **개선필요 영역**은 **자살률**로 2011~2017 년 감소세이던 자살률이 최근 반등했다. [WHO·IBRD, 2023; OECD, OECD Data Explorer(2026.1.15. 인출);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2026.1.15. 인출); 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2026.7.31. 인출)]

종합하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는 갖추어졌지만 이를 지탱하는 자원은 지역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 나타나거나 다시 악화되는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 과제는 보장의 확대에서 자원 배분의 형평과 신·구 건강위험의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보편적 건강보장 지수(3.8.1). 한국의 UHC 서비스 보장 지수는 2010 년 82 점에서 2019 년 87 점, 2021 년 89 점으로 아이슬란드와 함께 OECD 38 개국 중 공동 2 위에 올랐으며, 사회보험체계를

운용하는 독일(88 점)·벨기에(86 점)·프랑스(85 점)·일본(83 점)과 비교해도 우수하다. 모자·아동 건강, 감염병, 서비스 역량·접근성 영역은 기준치(80 점)를 넘겼으나 비감염성 질환 영역은 예외다[WHO·IBRD, 2023]. 전 국민 건강보험이 이 성취의 토대다.

핵심 지표 ② 건강위험 요인의 감소(3.a.1/3.5.2). 성인(만 19 세 이상) 현재흡연율은 2011 년 27.1%에서 2024 년 16.7%로 감소했다. 남성은 47.3%에서 28.5%로 낮아졌고, 여성은 4.2%로 2011 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1 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2011 년 8.9 리터로 OECD 평균 수준이었으나 2023 년에는 7.8 리터로 OECD 평균(8.5 리터)보다 낮아졌다[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2026.1.15. 인출); OECD, OECD Data Explorer(2025.9.22. 인출)].

핵심 지표 ③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3.c.1). 의사(한 의사 포함)·간호사·약사·치과의사를 합한 주요 보건의료 인력 밀도는 2011 년 인구 1,000 명당 5.5 명에서 2023 년 9.3 명으로 늘었다. 다만 OECD 평균(14.4 명)과의 격차가 남아 있으며, 특히 의사(2.7 명 vs 3.9 명)와 간호사(5.2 명 vs 8.8 명)에서 차이가 크다. 국가 간 제도 차이로 이 비교에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간호 인력의 45.3%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있다. 이는 앞의 5.2 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력이다 [OECD, OECD Data Explorer(2025.9.23. 인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25);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2026.1.2. 인출)]. 국가데이터처, 사망 원인통계(<https://kosis.kr>, 2026.7.31. 인출)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흡연율을 움직인 정책 조합 — 담배와의 싸움

배경: 2011 년 한국 성인 남성 둘 중 하나(47.3%)가 흡연자였다. 흡연은 비감염성 질환의 최대 위험 요인이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요구하는 국가적 대응 과제였다.

활동: 한국은 가격 정책(2015 년 담뭍값 대폭 인상)과 비가격 정책(경고그림 의무화, 금연구역 전면 확대, 보건소·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을 결합한 종합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변화: 성인 흡연율은 27.1%(2011)에서 16.7%(2024)로 10.4%p 하락했고, 남성 흡연율은 18.8%p 떨어졌다. 매일 흡연율의 감소 폭(-7.9%p)은 OECD 전반의 하락 흐름 속에서도 큰 편에 속한다.

시사점: 한국은 2005 년 FCTC 비준을 완료했고, 2012 년 제 5 차 당사국총회(COP5)를 개최함으로써 협약 최초의 의정서 채택에 기여하였다. 국내적으로는 협약 이행을 위한 포괄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어가며 흡연율의 지속적 감소를 이끌었다. 다만 전자담배로의 이동(E)은 이 성과의 다음 장을 결정할 변수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전자담배의 확산.** 액상형·궤련형을 합한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3 년 1.1%에서 2024 년 12.1%로 증가하여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랜 기간 담배의 정의가 연초 앞 기반이어서 신종 담배 제품이 규제 범위 밖에 있었으나, 2026 년 4 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정의가

니코틴까지 확대되어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장치는 마련되었다. 다만, 청소년의 접근 차단과 모니터링 체계 강화는 남은 과제다.

- **성별 음주 격차의 변화.**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2011 년 23.2%에서 2024 년 18.6%로 감소한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4.9%에서 8.6%로 증가하였다. 다만 절대 수준으로는 남성의 고위험음주율이 여전히 여성의 2 배 이상으로 높아, 성별을 고려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 **비감염성 질환의 벽.** 높은 총점의 이면에서 비감염성 질환 영역은 76 점(흡연 70 점, 고혈압 71 점)으로 기준선(80 점)에 못 미친다.
- **자살률의 반동.** 2023 년 자살률은 인구 10 만명당 24.8 명으로 OECD 평균 10.9 명보다 두 배 이상이며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국내 발표된 조사망률은 2011 년 이후 감소해 2017 년 24.3 명으로 낮아졌으나,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24 년 29.1 명이 되었다. 한편 15~19 세는 2010 년 8.3 명에서 2024 년 12.6 명으로 증가하였다[국가데이터처, 사망원인통계(2026.7.31. 인출); OECD Data Explorer(2026.7. 갱신)]. 정부는 지역 단위 대응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전국 243 개 광역·기초 지자체 부단체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고 전담 공무원 293 명을 배치하여, 보건소 중심에서 전담조직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6].
- **의료 인력의 지리적 불균형.**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는 특·광역시 3.4 명, 도 지역 2.1 명이다. 간호사는 각각 6.4 명, 4.3 명이다. 인접 지역 간에도 격차가 크다. 예를 들어 대구는 의사 3.2 명, 간호사 6.9 명인 데 반해 경북은 각각 1.8 명, 4.2 명에 그친다. 2025 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7 년부터 직종별로 순차적으로 지역 단위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국가 단위 추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OECD 상위권의 보건의료체계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도 지역·농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은 대도시의 3 분의 2 수준이며, 이들은 의료 이용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부담한다. **고령층**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비대면 진료에 제약이 있다. **여성**은 음주율 증가가 나타나는 새로운 건강위험 집단이고, **청소년·청년**은 규제 이후에도 신유형 담배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이 취약하다.

"도 지역의 인구 1,000 명당 의사 수는 2.1 명으로 특·광역시(3.4 명)의 3 분의 2 수준이다 —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 접근성 격차의 해소가 이 목표의 과제로 남아 있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인구와 보건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의료자원과 이용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SDG 11)과 맞물린 문제로, 보건의료 정책만으로는 풀 수 없고 인구·지역 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이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고령층은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므로(SDG 10), 비대면 진료의 확대와 디지털 역량 지원은 병행되어야 한다. 건강행태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성별 건강 격차는 성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다(SDG 5) — 최근 여성의 음주 증가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과 사망의 증가(SDG 13)는 기후 적응 정책과 공중보건 체계의 연계 수준이 건강 성과를 좌우함을 보여준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기본보건의 한국 빈곤감소 목적 ODA 의 5 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감염병 예방과 기초 의료 서비스를 통해 개도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SDG 1). 코로나 19 국면에서 축적한 검사·역학·백신접종 운영 경험은 감염병 대응 역량(3.d) 협력의 자산이 되었다. 한국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이행해 흡연율을 낮춰 왔으며, 2012 년 서울에서 제 5 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협약 최초의 의정서 채택에 기여했다. 소외열대질환(NTD)은 국내 발생이 거의 없음에도 질병관리청이 법정감염병으로 상시 감시하고 있으며, 빈곤 지역 취약계층에 부담이 집중되는 NTD 를 퇴치하기 위한 협력에 동참한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지역의료 격차의 구조적 해소.** 의료 인력의 지역 배치 유인과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광역시-도 지역 간 인력 격차를 축소한다
- **비감염성 질환·정신건강의 집중 관리.** UHC 취약 항목인 흡연·고혈압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건강정책의 중심에 둔다.
- **신유형 건강위험 대응.**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하고, 여성 음주 증가에 대해 성별을 고려한 분석과 개입을 추진한다.
- **디지털 헬스의 포용적 활용.** AI 진단·원격 건강관리를 지역 의료 보완 수단으로 확대하되, 고령층·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함께 보장한다.

참고문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https://kosis.kr>, 2026.1.15. 인출)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발생보고(<https://kosis.kr>, 2026.1.18. 인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https://kosis.kr>, 2026.1.2. 인출)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5.9.22.; 2025.9.23.; 2026.1.15.; 2026.7.31. 인출)

WHO-IBRD, 2023, Track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2023 Global Monitoring Report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9.20. 인출)

국가데이터처(2025), 2025 고령자 통계

보건복지부(2026), 「“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

보도자료(2026.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4), 2023 년도 노인실태조사

행정안전부(2024), 주민등록인구현황

■ SDG 4 :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Goal 4 :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교육은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국가 발전의 주요 기반이다. 지난 10 년(2016~2026) 한국 교육은 학교 교육과 성인 학습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학교 교육은 코로나 19 에 따른 전 지구적 학습 손실 국면에서도 세계 최상위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유지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는 성인기 역량의 하락이 확인되었다.

AI 가 산업 구조와 직무 역량을 빠르게 재편하는 상황에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에까지 우리 교육의 수월성(excellence)과 적실성(relevance)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전환 역량과 직결된다. 2027 년 HLPF 심층검토 대상인 이 목표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유할 논점은 학교 교육의 성과가 평생학습 체제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과 그 대응이다.

B. 핵심 진단 : 4 부문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유지	[+] 양호·개선 영역 ← 학생 학업성취(4.1), ICT 활용역량(4.4)	[^] 개선중 영역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X] 개선필요 영역 ← 성인 문해력(4.6), ICT 안전역량(4.4)

SDG 4 지표에 대한 개선 성과는 연령대와 세부 영역에 따라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 양호·개선 영역**으로 **학교 교육에서의 학업성취율과 ICT 활용 역량**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PISA 2025 에서 OECD 회원국 중 모든 영역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또한 ITU 가 제시한 ICT 역량의 국가 간 비교에서는 기초 수준 이상의 역량을 보유한 인구의 비율이 5 개 영역 중 4 개에서 1 위부터 4 위 이내를 기록했다. 반면 **[X] 개선필요 영역**은 **성인 문해력과 ICT 역량 중 안전 영역**이다. PIAAC 언어능력은 2012 년 273 점(OECD 평균과 동일)에서 2023 년 249 점으로 급락하며 OECD 평균(260 점)에 뒤처졌고, ICT '안전' 영역의 기초 이상 역량 보유율은 25.1%로 자료가 가용한 OECD 11 개국 중 10 위였다 [OECD PISA-PIAAC; ITU].

종합하면 학령기 교육의 성취는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인기 역량은 후퇴하고 있어, 이 목표의 과제는 학교 교육의 질 관리에서 전 생애에 걸친 역량의 유지·회복으로 확장되고 있다.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팬데믹 학력 충격의 방어(4.1.1). PISA 2022 에서 참여국 대부분은 평균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음에도 한국은 모든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PISA 2025 에서는 모든 영역에서의 평균점수가 OECD 와 한국 모두 하락하였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 원격수업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과 교육 체계의 복원력이 전 지구적 학습 손실 국면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지켜냈다[OECD, 2023].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2024 년 고 2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4.0%p 감소(12.6%)하는 등 회복 신호가 나타났다.

핵심 지표 ② 세계 최상위의 디지털 활용 역량(4.4.1). 5 개 역량 영역별 '기초 이상(above basic)' ICT 역량 보유율은 2023 년 조사에서 정보·데이터 문해력 90.1%, 디지털 콘텐츠 창작 79.4%로 두 영역 모두 OECD 21 개국 중 1 위를 기록했고, 문제해결(82.2%)은 2 위, 소통·협력(82.0%)은 4 위였다. 세부 역량별로는 '파일 첨부 이메일 전송' 보유율이 2017 년 57.4%에서 2024 년 97.3%로 상승해 사실상 전 국민의 기본 역량이 되었다[UN SDG Indicators Database; ITU DataHub; 국가데이터처, 2026].

핵심 지표 ③ 평생학습 참여의 회복(4.3.1). 만 25~79 세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팬데믹 저점(2022 년 28.5%)에서 2 년 연속 상승해 2024 년 33.1%에 이르렀다. 특히 '중졸 이하' 인구의 참여가 회복기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며 '대졸 이상'과의 격차가 팬데믹 시기 최대치인 24.7%p(2021 년)에서 2024 년 17.8%p 로 좁혀졌다[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배경: 압축 성장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세대, 특히 고령 여성이 존재한다. 문해력 부족은 금융·의료·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이용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활동: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지자체·야학·복지관이 함께하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초·중등 학력 인정 과정과 생활 문해(디지털·금융·건강) 교육을 전국 문해교실에서 제공해 왔다.

변화: 성인 문해교육을 통해 기초 문해력을 갖추고 초·중등 학력을 인정받는 학습자가 매년 배출되고 있다.

시사점: 성인 문해교육은 LNOB 원칙의 적용 사례이자 고령사회 평생학습 정책의 기초 영역이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성인 역량의 후퇴.** PIAAC 에서 언어능력은 273 점(2012)에서 249 점(2023)으로, 수리력은 263 점(2012)에서 253 점(2023)으로 하락했다. '1 수준' 또는 '1 수준 이하'의 하위 수준(low performer) 비율도 2023 년 조사에서 언어 30.8%, 수리 27.6%로 OECD 평균(26.1%, 24.8%)을

웃돈다. 학교 교육에서의 학업성취도 세계 최상위 수준의 국가가 성인기 역량 평가에서는 평균 이하로 반전되는 구조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예산에서 평생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 **평생학습의 미완 회복.**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 참여율 33.1%는 팬데믹 이전 최고치(2019 년 41.7%)에 크게 못 미치며,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 참여율(2024 년 14.5%)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제 비교에서도 OECD 가 성인역량조사(PIAAC 2023) 자료로 분석한 성인의 직업 관련 학습(형식·비형식) 참여율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31 개국 중 최하위(13%, OECD 평균 약 40%)를 기록했다 — AI 전환기에 필요한 직업 관련 학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OECD, 2025].
- **국어 성취 하락 추세.** 2025 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1 수준 학생 비율은 중 3 국어 10.8%, 고 2 10.4%로 전년대비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이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디지털 안전의 사각.** ICT '안전' 영역에서 기초 이상 역량 보유율은 25.1%로, ICT '활용'과 관련된 다수의 세부 역량에서 세계 1 위를 차지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안전 영역의 세부 역량인 '개인정보 설정 변경'(36.8%)과 '보안 조치 설정'(48.3%)의 보유율은 절반에 못 미치며, 정보·데이터 문해력 영역에 속하는 '온라인 정보 신뢰성 검증'(30.9%)도 30%대에 그친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대상은 저학력·고령 성인이다. 중졸 이하 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대졸 이상의 절반 수준(22.6% vs 40.4%)이고, 성인 문해력 취약층도 저학력·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비문해 노인, 특히 과거 교육 기회에서 배제되었던 고령 여성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문자와 디지털 양쪽에서 이중의 격차에 놓인다.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며[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코로나 19 에 따른 학습 손실의 영향도 크다. **디지털 안전 취약층**(아동·고령층)은 세계 최정상급 연결성 속에서 사기·개인정보 침해에 가장 먼저 노출된다.

"한국 성인의 30.8%(PIAAC 2023)가 하위 문해 수준에 있으며, 중졸 이하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22.6%)은 대졸 이상(40.4%)의 절반 수준이다 — 학교 교육 이후의 학습 기회 확대가 과제로 남아 있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성인 역량의 후퇴는 교육 목표를 넘어 산업·AI 전환(SDG 8·9)의 인적 기반을 제약한다. 전환기의 재교육·직업훈련은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이행 수단이므로, 직업 관련 평생학습 참여의 부진은 노동시장 정책(SDG 8)의 성과에도 부담이 된다. 반대로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투자는 교육 격차가 소득 격차로, 다시 다음 세대의 교육 격차로 이전되는 고리(SDG 10)를 끊는 지점이 된다. 여성의 학습·연구 기회 확대(SDG 5)와 생태전환교육(SDG 13)은 교육이 다른 목표의 이행 역량을 기르는 통로임을 보여준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기본교육은 한국 빈곤감소 목적 ODA 의 5 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모든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고 읽고 쓸 수 있도록 개도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협력을 확대해 왔다(SDG 1 연계). 교육을 통한 발전이라는 자국의 경험은 교육 ODA 의 주요 근거이며, 원격교육 인프라와 디지털 교육 콘텐츠 협력은 코로나 19 이후 개도국 학습 손실 회복을 지원하는 새 영역이 되었다. 교사 역량 협력(4.c)과 장학 지원(4.b)을 포함한 교육 파트너십은 이 목표의 대외적 실천이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성인 역량 회복의 국가 전략화.** PIAAC 이 드러낸 성인 문해·수리력 하락 원인을 규명하고, 성인 기초역량 진단-학습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평생학습 참여율을 팬데믹 이전 수준(41.7%) 이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2030 목표로 명시한다. 취약계층의 학습 접근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수혜자는 2018 년 5,361 명에서 2025 년 93,587 명으로 약 17 배 늘었고, 2025 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선정률은 각각 88.8%·70.1%, 수혜자 중 여성 비율은 약 70%로 취약계층과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기초역량 진단-학습 연계 체계의 재정 수단으로 확대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5].
- **정의로운 전환의 학습 인프라.** 직업 관련 비형식교육의 부진을 반전시켜, 산업·AI 전환기 노동자 — 특히 중졸 이하·중고령 — 의 재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디지털 시민 역량의 균형.** 세계 1 위의 활용 역량에 걸맞은 안전 역량(개인정보 보호·보안 설정)과 정보 판별 역량(정보·데이터 문해력 영역) 교육을 학교와 평생교육 전반에 내재화한다.
- **기초학력 안전망.** 국어와 기초학력 미달 증가에 대응해 진단-맞춤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 손실 회복을 우선 지원한다.

참고문헌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https://kess.kedi.re.kr>, 2025.8.25. 인출)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ITU, DataHub(<https://datahub.itu.int>, 2025.12.16. 인출)
OECD, 2023, PISA 2022 Results; 2024, PIAAC 2nd Cycle Results(Survey of Adult Skills 2023); 2025, Trends in Adult Learning: New Data from the 2023 Survey of Adult Skills(<https://doi.org/10.1787/ec0624a6-en>)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5), 2025 년 평생교육이용권 성과분석
연구(<https://nile.or.kr/usr/wap/detail.do?app=11526&seq=2173503&lang=ko>)
서민희·김완수·김미림·한정아·손윤희(2020), 201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고등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05024&otpSeq=0)

■ SDG 5 :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Goal 5 :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1948 년 제헌 헌법의 성차별 금지 조항에서 출발한 한국의 성평등 제도는, 여성발전기본법(1995)을 거쳐 지난 10 년(2016~2026) 사이 양성평등기본법(20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9) 등으로 이어지는 법적 골격을 완성해 왔다. 이 시기에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직장과 일상의 규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고,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2023~2027)과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20) 등 제도적 응답이 뒤따랐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024 년 제 9 차 심의에서 이러한 입법·계획 수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이 곧 실질적 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며 성별 임금격차도 가장 큰 편에 속한다. 이런 현실에는 돌봄과 가사노동의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산과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 여성 비정규직 집중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구조적 문제는 기업의 고위관리직과 낮은 여성 임원 비율등 노동시장 성평등의 구조적 과제로 지적된다. 그 뿐만 아니라 AI/AX 등 디지털 공간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 한부모 여성·이주여성·장애여성 등 다양한 집단 간 불평등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B. 핵심 진단 : 4 분면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법적 기반·공적 생활(5.1.1)	[^] 개선중 영역 ← 무급 가사노동 격차(5.4.1)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X] 개선필요 영역 ← 고용·경제적 권리(5.1.1 제 3 영역)

유엔 여성기구의 법제도 평가 4 개 영역에서 한국의 위치는 갈린다. **[+] 양호·개선 영역**으로 **법적 기반·공적 생활**은 90 점으로 OECD 38 개국 중 만점 5 개국 다음의 상위권이며, 결혼·가정 영역도 90.9 점으로 중상위권이다. 반면 **[X] 개선필요 영역**인 **고용·경제적 권리**는 70 점으로 만점 22 개국이 준비한 가운데 일본·이스라엘과 함께 OECD 최하위다. 특히 세부평가 항목인 **성별직종분리현상**의 심각성은 해당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 개선중 영역**인 **무급 가사노동 격차**는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의 2.8 배(2024)로 자료가 있는 OECD 14 개국 중 일본(3.9 배)·콜롬비아(3.4 배)에 이어 세 번째로 불평등하지만, 1999 년 7.0 배에서 꾸준히 좁혀져 온 개선 추세가 있다[UN Women; World Bank; 생활시간조사].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여성 관리자의 확대(5.5.2). 국가공무원 관리자급(4 급 이상) 여성 비율은 2011 년 7.4%에서 2024 년 26.3%로 세 배 이상 늘었고, 지방자치단체 관리자급(5 급 이상)은 9.2%에서 34.7%로 — 특히 2020 년부터 매년 3%p 이상씩 — 가파르게 상승했다. 행정부 전체 국가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48.8%, 지자체는 54.3%로 성별 균형에 도달했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도 13.9%(2014)에서 25.4%(2024)로 늘었다[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핵심 지표 ② 직장 내 성희롱의 감소(5.2.2). 지난 6 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2018 년 8.1%에서 2024 년 4.3%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2 차 피해 경험률도 27.8%에서 12.3%로 절반 넘게 줄었다. 미투 이후의 인식 변화와 조직문화·정책 대응이 맞물린 결과다[성평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

핵심 지표 ③ 가사노동 부담의 완화(5.4.1). 여성이 하루 중 가사·돌봄에 쓰는 시간 비중은 1999 년 14.1%에서 2024 년 11.5%로 줄고 남성은 2.1%에서 4.0%로 늘어, 성별 격차가 7.0 배에서 2.8 배로 좁혀졌다. 전통적 성역할 인식의 약화가 25 년에 걸친 시계열로 확인된다[국가데이터처, 생활시간조사].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제도가 숫자를 움직이다 —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

배경: 2011 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급(5 급 이상) 여성은 열 명 중 한 명(9.2%)에 못 미쳤다.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정책의 수혜자인 여성이 없다는 대표성의 공백이 지적되어 왔다.

활동: 적극적 고용개선조치(2006~)와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2023~2027)은 채용·승진 목표 관리를 통해 공공부문의 인사 관행을 바꾸는 제도적 장치를 축적해 왔다.

변화: 지자체 관리자급 여성 비율은 2020 년부터 매년 3%p 이상씩 올라 2024 년 34.7%에 이르렀고, 국가공무원 관리자급도 26.3%로 세 배가 되었다 — 제도 설계가 대표성의 숫자를 실제로 움직인 궤적이다.

시사점: 목표 관리형 제도가 공공부문에서 작동함을 보여준 이 경험은, 아직 정체 중인 민간 부문(E)으로 확장하는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된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고용·경제적 권리 — OECD 최하위.** 유엔 여성기구 평가에서 고용·경제적 권리 영역은 70 점으로 일본·이스라엘과 함께 최하위다. 해당 지표가 다른 지표에 비해 열악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음의 세부지표에 한국의 성과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에 기초한 성별임금격차의 해소, 고용차별금지, 산업별·직업별 직종분리 해소 등의 성과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다. 현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공공보육등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사용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현실을 해소하는 것이다. 셋째,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운영하는 것이다.

- **유리천장.** 여성 임원 비율(근로자 1,000 명 이상)은 민간기업 13.4%, 공공기관 6% 안팎, 지방공기업 5% 미만에 그친다. 민간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도 19.2%(2014)에서 22.7%(2024)로 증가 폭이 제한적이며, 여성 고용 비율 자체가 37%대에 정체를 이룬다. 특히 민간에서의 성과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희롱·성폭력** — 회식 자리 성희롱은 43.7%에서 28.6%로 줄었지만 사무실 발생 비중은 36.8%에서 46.8%로 늘었고, 2024 년 조사에서 온라인 성희롱이 7.8%로 새 유형으로 등장했다. 2 차 피해 경험률 12.3%는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과제를 남긴다.
- **가사노동 부담의 성별 격차.** 맞벌이 가구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편의 2.9 배이며, 아내가 홀로 버는 가구에서조차 아내(2 시간 40 분)가 남편(1 시간 46 분) 보다 여성이 더 긴 시간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CEDAW 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 입법의 부재, 그리고 성평등 분야의 데이터 가용률 취약(SDG 5 는 데이터 취약 3 개 목표 중 하나)도 함께 기록할 한계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대상은 제도의 효과가 늦게 미치는 집단이다. 민간기업·지방공기업의 여성 임원 비중은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내가 홀로 버는 가구의 여성은 생계와 가사의 이중 부담을 진다. **온라인 성희롱·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규제가 따라잡지 못한 새 위험에 노출된 집단이며, **한부모 가족**과 노년 여성(빈곤율 42.7%, SDG 1)의 빈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 2 차 피해를 겪는 성희롱 피해자(12.3%)의 존재는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이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가사노동의 성별 격차는 7.0 배에서 2.8 배로 줄어졌으나 여전히 OECD 에서 세 번째로 크며, 여성 임원 비율은 공공기관 6%·지방공기업 5% 미만에 머물러 있다 — 제도 개선의 효과가 아직 미치지 못한 영역이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가사·돌봄 부담의 성별 불균형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임금 격차(SDG 8)의 구조적 배경이자, 저출생과 돌봄 위기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의 사회화와 부담 구조의 개선은 성평등 정책인 동시에 노동 공급과 사회 지속가능성의 정책이다.

산업 전환의 고용 충격은 여성 제조업 노동자에게 먼저 도달하며(SDG 9), 전환기 재교육 기회에 성별 격차가 존재하면 전환은 새로운 불평등을 만든다. 디지털 전환은 온라인 성희롱·디지털 성범죄라는 새로운 위험을 낳고 있어(SDG 9-16), 기술 정책과 폭력 대응 정책의 연계가 요구된다. 노년 여성의 빈곤(SDG 1)과 여성의 낮은 정치 효능감(SDG 16)은 성별 격차가 생애주기와 제도 전반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한국은 CEDAW 정기 보고와 베이징 행동강령 이행 점검에 성실히 참여하며 국제 성평등 규범의 국내 이행을 국제사회와 검증해 왔다. 개발협력에서는 성인지적 개발전략(SDG 1.b 연계)에 따라 여성과 여아를 위한 교육·보건·경제적 권한 강화 사업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확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한국이 먼저 겪고 제도화한 경험은 같은 과제에 직면한 국가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성평등 파트너십은 이 목표의 대외적 실천이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고용·경제적 권리의 집중 개선.** OECD 최하위(70 점) 영역을 2030년까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임금 격차 축소와 경력단절 예방·복귀 추진한다.
- **유리천장의 민간 확장.** 공공부문에서 작동이 입증된 목표 관리형 제도(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민간·지방공기업의 관리자·임원 단계로 실효성 있게 확장한다. 한편 기업의 성평등 공시제(현 정부 국정과제)추진과 성과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불평등을 기업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신유형 폭력 대응 체계.** 온라인 성희롱·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신고-피해자 보호의 전 주기 체계를 정비하고, 2 차 피해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 **돌봄의 사회적 분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가사·돌봄 분담 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성별 분리통계 생산을 확대하여 데이터 취약을 해소한다(CEDAW 권고 후속 논의 포함).

참고문헌

성평등가족부, 성희롱실태조사(www.kosis.kr, 2025.12.20. 인출)

국가데이터처, 생활시간조사(www.kosis.kr, 2025.12.21. 인출)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인사혁신처, 2025, 인사혁신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남녀근로자현황 분석보고서

UN Women, Women Data Hub(<https://data.unwomen.org/data-portal>, 2025.12.21. 인출)

World Bank, Gender Data Portal(<https://genderdata.worldbank.org>, 2026.1.14. 인출)

■ SDG 6 :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Goal 6 :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수십 년에 걸친 인프라 투자로 한국은 안전한 물의 **보편적 접근**을 사실상 달성한 나라가 되었다. 지난 10 년(2016~2026)의 과제는 그 다음이었다 — 보급률 통계의 마지막 구간에 남은 도농 격차를 좁히는 일,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와 제 1 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통해 공급 중심의 물 정책을 수질·수량·수생태를 아우르는 통합 물관리로 전환하는 일이다. 2022 년 국가수도기본계획은 급수 취약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로 정책의 시선을 옮겼다.

동시에 기후위기는 물 관리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다. 반복되는 가뭄과 집중호우로 물 정책의 과제가 공급 확대에서 순환과 절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목표의 과제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아직 남아 있는 물 복지의 공백 해소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물 순환의 회복력 확보다.

B. 핵심 진단 : 4 분면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수질(6.3.2)·하수도 보급(6.3.1)	[^] 개선중 영역 ← 물 이용 효율성(6.4.1)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X] 개선필요 영역 ← 농업 부문 물 효율(6.4.1)

[+] 양호·개선 영역은 '좋은 수질' 수계 비율이다. 좋은 수질 수계비율은 93.6%(2023)로 OECD 37 개국 중 노르웨이(100%)에 이은 2 위이다. 다만 이 지표(SDG 6.3.2)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정한 수질 목표값 대비 달성률을 측정하는 target-based 지표로, UNEP 도 국가마다 다른 목표값을 적용하면 실제 수질이 비슷해도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를 방법론에서 직접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순위는 절대적인 수질 서열이라기보다, 측정 항목과 판정 절차(핵심 5 개 항목·80% 달성 규칙)가 표준화된 상태에서 각국이 자국 기준을 얼마나 지키는지를 비교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하수도 보급률(95.4%, 2023) 역시 OECD 31 개국 평균(85.5%)을 크게 웃도는 8 위다. **[^] 개선중 영역**은 **물 이용 효율성**이다. 물 이용 효율성은 58.27 달러/㎥(2022)로 OECD 38 개국 중 21 위, OECD 평균(134.89 달러/㎥)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2011 년 대비 1.36 배 개선되어 OECD 평균의 개선 속도(1.32 배)를 앞서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X] 개선필요 영역**은 **농업 부문 물 효율**이다. 농업부문 물 효율은 1.01 달러/㎥(2022)로 공업(120.80)·서비스업(153.51)과 현격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2011 년 수준(1.02)조차 밀돌고 있어, 이 목표 전체에서 유일하게 개선필요 영역으로 분류된다[UN SDG Indicators Database; OECD; FAO].

종합하면 수질과 공급의 보편적 성과는 확고하나 물 이용 효율, 특히 농업 부문의 효율이 정체되어 있어, 정책 과제는 보편적 공급의 유지에서 부문별 효율 개선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상수도 보급의 마지막 구간(6.1.1). 전국 상수도 보급률(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포함)은 2024 년 99.5%에 도달했다. 농어촌(면 지역) 보급률도 2015 년 92.3%¹에서 2024 년 96.5%로 올라, 지난 10 년 간 도시와의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었다. 지방·광역상수도 기준 농어촌 보급률은 같은 기간 상승해, 도농 간 물 접근 격차 해소가 지난 10 년 수도 정책의 실질적 성과였음을 보여준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4 년 상수도통계].

핵심 지표 ② 하수 처리와 재이용(6.3.1). 하수도 보급률은 2015 년 92.9%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5 년 95.8%로 높아졌다. 2025 년 하수처리수 74.3 억 톤 중 15.8%(11.7 억 톤)가 재이용되었는데, 그 중 5.1 억 톤은 세척수 등 시설 안에서 쓰이고 나머지 6.6 억 톤이 하천유지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시설 밖에 공급된다. 재이용량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하천유지용수가 약 41%, 공업용수가 12.9%를 차지한다. 제 2 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21~2030)은 이 장외 재이용량을 2025 년 6.6 억 톤에서 2030 년 15.8 억 톤으로 두 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도통계].

핵심 지표 ③ 세계 최상위권 수질(6.3.2). 하천의 목표수질(BOD) 달성 권역 비율은 2018 년 69.6%에서 2024 년 88.7%로 상승했고, 지하수 수질기준 적합률은 96~98%를 유지한다. UNEP 기준 '좋은 수질' 수계 비율 93.6%(하천 86.3%·개방수역 92.5%·지하수 95.2%)는 OECD 평균(53.8%)을 크게 웃돌아, 이 목표에서 한국이 내세울수 있는 성과 가운데 하나다. 다만 SDG 6.3.2 는 각국이 자체 설정한 수질 목표값 대비 달성률을 측정하는 지표여서, 목표값의 엄격성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UNEP, 2023).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부분은 5 개 핵심 항목(용존산소·전기전도도·질소·인·pH)의 측정 방식과 80% 달성 시 ' 좋음'으로 판정하는 절차이며,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국가가 직접 정하므로, 이 93.6%라는 수치는 절대적인 국제 순위라기보다 '동일한 절차로 평가한 자국 기준 달성률'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한국의 목표수질 기준이 국제적으로 어느 수준의 엄격성을 갖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UN SDG Indicators Database].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마지막 몇 퍼센트를 위한 물 복지 — 소규모 수도시설의 재발견

배경: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도서·산간에는 지방·광역상수도를 놓기 어려운 마을들이 남아 있다. 2024 년에도

¹ 2015 년 상수도통계는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이용 인구를 "미급수 인구"로 분류하여 이 때 발표된 면 지역 보급률(92.3%)은 사실상 지방·광역상수도만 반영된 수치임

농어촌 인구의 12.0%가 마을상수도과 소규모 급수시설로 물을 얻는다 — 보급률 99.5% 통계의 바깥이 아니라 그 '마지막 구간'이다.

활동: 2022 년 국가수도기본계획은 대규모 시설 확충 중심이던 수도 정책의 방향을 틀어, 소규모 수도시설의 시설 개선과 수질·유지관리 체계 확립을 급수 취약 지역 물 복지의 축으로 삼았다.

변화: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96.5%까지 올랐고 전국과의 격차는 3.0%p 로 줄었다. 그동안 관리의 사각에 있던 마을 단위 물 공급이 국가 계획의 관리 대상으로 들어왔다.

시사점: 보편적 접근의 완성은 대형 인프라보다 소규모 시설의 관리 수준에 좌우된다. 보급률이 이미 포화 단계에 들어선 국가들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구간' 정책의 사례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농업 물 효율의 후퇴.** 농업 부문 물 이용 효율성(1.01 달러/㎥)은 2011 년(1.02)을 밑돌며, 2019 년 0.97 까지 떨어졌다가 일시 회복 후 다시 하락했다. 국가 전체 물 사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의 효율 정체는 전체 물 이용 효율(OECD 21 위, 평균의 절반 이하)을 끌어내리는 구조적 요인이다.
- **하수도의 도농 격차.** 전국 평균 95.6% 이면에는 도시(97.2%)와 농어촌 읍·면(78.8%) 사이의 20%p 에 가까운 격차가 있다. 시·도 단위로 보아도 서울(100.0%)과 특·광역시 평균을 웃도는 반면 전남(84.8%)·충남(85.3%)·경북(86.1%)은 90%에 못 미친다. 물 인프라의 '마지막 구간' 격차는 상수도보다 하수도 부문에 더 뚜렷하게 남아 있다.
- **재이용률의 정체.** 하수 재이용률은 2016 년 15.6%에 도달한 이래 9 년째 15%대에 머물러 있다(2025 년 15.8%). 기후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에 비해 확대가 더디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대상은 보급률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집단이다.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는 농어촌 주민(농어촌 인구의 12.0%)은 시설 노후와 수질 관리 미흡에 먼저 노출되고,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 특히 보급률이 78.8%에 그치는 농어촌 읍·면 주민은 위생 서비스의 격차 속에 있다. 가뭄 피해를 먼저 받는 농민, 물 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가구, 도서·산간의 고령 주민도 물 복지의 사각에 놓이기 쉽다. 보편적 접근을 달성한 이후의 과제는 시설 관리와 수질의 형평성이다.

"상수도 보급률 99.5% 아래에서도 농어촌 인구의 12.0%는 마을상수도과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한다 — 보편적 접근 이후의 과제는 소규모 시설의 관리와 수질 확보에 있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물 정책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농업 부문의 물 효율(SDG 2)은 관개 현대화와 물 절약형 영농으로 개선될 수 있으나, 그 비용이 고령화된 농가에 전가되면 이행이 지연된다. 물-에너지-식량 넥서스의

관점에서 부문 간 물 배분과 비용 분담을 조율하는 것이 전환기 물 정책의 핵심이다. 가뭄과 홍수가 교차하는 기후 여건(SDG 13)에서 하수 재이용과 통합 물관리는 물 안보와 기후 적응을 함께 진전시키며, 수질 관리는 하천·연안 생태계(SDG 14-15)의 건강성과, 도시의 물순환 인프라(SDG 11)는 도시 침수 대응과 직결된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급수와 위생은 한국 빈곤감소 목적 ODA 의 5 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22 억 명(2022~2024 년 기준)이라는 세계적 과제에 대한 한국의 응답이다(SDG 1 연계). 상·하수도를 단기간에 보편화한 인프라 구축 경험과 통합 물관리로의 정책 전환 경험은 개도국 물 협력의 실용적 자산이며, 2015 년 제 7 차 세계물포럼(대구·경북)을 개최하는 등 국제 물 논의의 장에도 기여해 왔다. 물 파트너십은 이 목표의 대외적 실천이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농업 물 이용의 전환.** 관개 시설 현대화와 물 절약형 영농 확산으로 농업 부문 물 효율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되, 비용이 소규모·고령 농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지원을 병행한다(SDG 2 연계).
- **재이용 목표의 이행.** 제 2 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장외 재이용량을 2030 년 13.2 억 톤으로 확대하고, 공업용수·하천유지용수 중심의 수요처를 다변화하여 9 년째 정체된 재이용률을 끌어올린다.
- **하수도 격차의 해소.** 90% 미만 3 개 도를 중심으로 농어촌 하수도 보급과 노후 시설 개선을 우선 투자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유지관리 체계를 정착시킨다.
- **스마트 물관리의 확산.** AI 기반 누수 감지·수질 예측 등 지능형 물관리를 확대하여 인프라 효율과 기후 대응력을 함께 높인다.

참고문헌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수도통계(<https://www.waternow.go.kr>, 2026.2.6. 인출); 2024 하수도통계(<https://hasudoinfo.or.kr>, 2026.7.30. 인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결과; 지하수조사연보 2025
환경부, 2021, 제 1 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제 2 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2021~2030); 2026, 국가수도기본계획(정책편)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FAO, FAOSTAT(<https://www.fao.org/faostat>, 2026.2.6. 인출)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6.2.6. 인출)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2.24. 인출)
WHO/UNICEF, Joint Monitoring Programme (JMP), Progress on household drinking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2000–2024(<https://washdata.org>, 2026.8.11. 인출)

■ SDG 7 :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Goal 7 :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에너지 부존자원이 없지만 제조업 기반 산업국가로 성장한 한국은 과거의 약 15 년(2011~2024) 동안 **에너지 전환을 본격 추진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100 확산이 맞물리며 재생에너지 생산은 다섯 배 가까이 늘었고, 2024 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2%를 기록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다만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전력소비 중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며,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효율 개선의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화 수요와 함께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전력 수요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은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와의 정합이라는 새로운 조율 과제를 던진다. SDG 7 은 2027 년 HLPF 주제인 정의로운 전환과 직접 연결되는 목표다. 이 목표의 과제는 전환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개발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B. 핵심 진단 : 4 분면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개선중 영역 ← 재생에너지 비중(7.2.1)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X] 개선필요 영역 ← 에너지원단위(7.3.1)

[^] **개선중 영역은 재생에너지 비중**이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4.7%(2022)로 OECD 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은 약 2.9 배(2015→2024) 증가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5%(2015)에서 9.2%(2024)로 증가했다. 반면, [X] **개선필요 영역**으로 국내 에너지원단위는 국제통계 기준으로 0.106TOE/1,000 달러(2023)로 OECD 38 개국 중 세 번째로 높으며, 최근 2 년(2023~24 년)에는 개선이 멈췄으며(0.133TOE/100 만 원, 전년과 동일), 2010~2023 년 연평균 개선율(2.1%)도 영국(5.2%)·독일(4.5%)·OECD 평균(3.1%)에 크게 못 미친다[UN SDG Indicators Database; World Bank; 에너지통계월보].

종합하면 에너지 접근의 보편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재생에너지 비중과 에너지 효율의 개선 속도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목표의 과제는 공급의 안정에서 전환의 속도로 옮겨 가 있다.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재생에너지의 세 배 성장(7.2.1). 1 차에너지 기준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15 년 565 만 TOE(1.97%)에서 2024 년 1,675 만 TOE(5.51%)로 3 배 늘었고, 신에너지를 합한 신·재생에너지는 588 만 TOE 에서 1,881 만 TOE(6.19%)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5 년 2.48%에서 2024 년 9.18%로, 신·재생에너지는 10.69%로 올라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태양광이 신·재생 생산의 42.8%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2015 년 14.46%)[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핵심 지표 ② 제도가 만드는 시장(RPS). 보급의무자는 2025 년 총발전량의 15.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의무 비중은 2030 년 2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공공중심으로 가속화하고 전환비용의 감소를 위해 2027 년부터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을 정부 주도 경쟁입찰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공공발전사에게는 용량기준으로 보급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시장의 선정 사업자에게 20 년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여, 에너지전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핵심 지표 ③ 에너지 효율의 장기 개선(7.3.1). GDP 대비 1 차에너지 공급량으로 정의되는 에너지원단위는 1993 년 0.200TOE/100 만 원을 정점으로 2024 년 0.133 까지 개선되어 왔다. 같은 기간 GDP 가 4.6 배로 성장하는 동안 1 차에너지 공급은 3.4 배에 그쳐, 성장과 에너지 소비의 부분적 탈동조화가 진행되었다[에너지경제연구원].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가장 많이 쓰는 기업들과 맺은 약속 —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

배경: 산업 부문은 한국 최종에너지 소비의 61.6%(2024)를 차지하며, 제조업의 GDP 비중(26.6%)은 영국(8.0%)·독일(18.0%)·일본(20.6%)을 크게 웃돈다. 국가 에너지 효율의 열쇠를 소수의 다소비 기업이 쥐고 있는 구조다.

활동: 정부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 만 TOE 이상인 30 대 핵심 기업과 자발적 협약인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KEEP30)을 맺어, 기업별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 설정과 컨설팅·인센티브를 결합했다.

변화: KEEP30 참여 30 대 기업은 2024 년 기업당 평균 2.6%의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했고, 6 대 우수 기업의 개선율은 평균 8%에 달했다 — 국가 전체 개선세가 정체된 해에 만들어 낸 성과다.

시사점: 규제 대신 목표 관리형 파트너십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제약에 대응한 사례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국가들과의 동료학습 소재가 된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OECD 최하위의 재생에너지 위치.** 빠른 성장에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4.1%)은 OECD 최하위이고 발전 비중(수력 제외 5.5%)은 뒤에서 세 번째다. 2030 년 국제 흐름과의 간극을 좁히기에는 현재의 속도로도 부족하다.
- **멈춰 선 효율 개선.** 에너지원단위는 2024 년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에 머물며 개선세가 정체되었다. 2010~2023 년 연평균 개선율 2.1%는 주요국(3.3~5.2%)의 절반 수준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 **태양광 편중과 풍력의 정체.** 태양광이 신·재생 생산의 42.8%로 성장하는 동안 풍력은 4.2%에 머물러 있다. 원별 다변화 없이는 계통 안정성과 확장 여력 모두 제약된다.
- **AI 전력 수요라는 새 압력.**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의 전력 수요 급증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계획과의 정합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후목표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변수다 — 경제-환경 조율이 필요한 대표 지점으로 종합 파트(목차 5·8)에서 다룬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대상은 전환의 비용이 집중되는 집단이다. 석탄발전 지역의 노동자와 지역사회는 탈석탄에 따른 고용·경제적 충격을 직접 받고, 저소득 가구는 폭염과 한파 시 냉난방 비용 부담이 커 에너지 복지의 사각에 놓인다. **소규모 사업장**은 효율 투자 여력이 없어 KEEP30 같은 대기업 중심 성과의 바깥에 있으며, **재생에너지 입지 지역 주민**은 이익 공유가 전제되지 않은 설비 확대 과정에서 갈등의 당사자가 되기 쉽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의 속도와 함께 비용·편익의 배분 설계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처음 10%를 넘었으나 전환의 비용과 편익은 아직 고르게 배분되지 않았다 — 석탄발전 지역의 노동자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 대한 대응이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에너지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SDG 13)의 핵심 수단인 동시에 고용과 지역경제(SDG 8)에 조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석탄발전 지역의 노동자·협력업체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SDG 1)가 전환 비용을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할 수 있으므로, 지역산업 전환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가 전환 정책의 구성 요소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한편 AI·데이터센터의 확대(SDG 9)는 전력 수요를 늘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데이터센터 투자와 재생에너지 공급·전력망 확충을 함께 검토하는 조정이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접점에서 요구되며, AI 기반 전력망 관리는 반대로 전환을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한국은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협력(7.a)을 확대해 왔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해 개도국 기후·에너지 재원의 국제 거점을 제공하고 있으며(SDG 17 상호참조), 그린 EDCF 를 통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지원과 P4G 등 다자 플랫폼 참여로 에너지 전환의 경험과 재원을 나누고 있다. 재생에너지 제도(RPS·경쟁입찰) 및 배출권거래제시장을 구축한 경험은 전환 초기 단계 국가들과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2030 재생에너지 목표의 이행.** 재생에너지보급 100GW 와 경쟁입찰 제도 안착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를 높이고, 풍력 등 원별 다변화로 태양광 편중을 완화한다.(NDC 연계).
- **효율 정체의 반전.** KEEP30 형 목표 관리 파트너십을 중견·중소 사업장으로 확장하고, 산업구조개편 및 공정혁신과 연계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으로 개선율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 **AI 수요와 청정 공급의 통합 설계.**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입지와 통합해 설계한다.
-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화.** 석탄 지역의 고용·경제 전환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확충, 주민참여·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산을 전환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한다.

참고문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https://www.knrec.or.kr>, 2025.12.31. 인출)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에너지통계연보; 2026, 2026/1 에너지통계월보(<https://kesis.keei.re.kr>)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1.30. 인출)

World Bank Group, World Bank Open Data; Data 360(2026.1.31. 인출)

■ SDG 8 :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Goal 8 :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수출 주도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지난 10 년(2016~2026)은 위기 대응력과 저성장 추세가 함께 확인된 시기였다. 팬데믹의 충격에서 주요국보다 빠르게 회복해 낮은 실업률과 양호한 성장을 지켜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전통적인 임금근로자 밖으로 넓히는 등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1인당 성장률은 과거의 2~3%대에서 1%대로 내려앉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앞으로 성장률의 장기 하락이 예고되고 있다 — 한국개발연구원은 1인당 GDP 성장률이 2030년대 1.0%, 2040년대 0.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KDI, 2025].

AI가 일자리 구조를 바꾸는 전환기에 이 목표의 과제는 저성장 국면에서 포용적인 일자리를 유지·확대하는 것이다.

B. 핵심 진단 : 4분면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실업률·고용(8.5.2)	[^] 개선중 영역 ← 시간당 임금 수준(8.5.1)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 성장률 장기 전망(8.1.1)	[X] 개선필요 영역

[+] 양호·개선 영역으로 실업률 2.8%(2024)는 프랑스(7.4%)·영국(4.4%)·미국(4.0%)·독일(3.4%)보다 월등히 낮고, 확장 실업 개념의 보조지표들도 팬데믹 이후 빠르게 하락했다(보조지표 2: 2020년 10.0%→2025년 6.2%). **[^] 개선중 영역**으로 임금 수준은 시간당 임금 27.3 달러(PPP, 2024)는 독일(52.1)·미국(46.2)·일본(30.6)보다 낮지만, 2011년 대비 상승률(33.9%)은 비교 주요국 중 가장 높다. **[X] 개선필요 영역**으로 성장률의 장기 전망은 2024년 1.9%는 역성장한 독일·영국 대비 양호하지만 과거(2013~2018년 2.4~3.1%)에 못 미치며,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둔화가 전망된다[한국은행; OECD; ILO].

종합하면 고용의 양적 지표는 안정적이나 임금 수준의 추격이 더디고 장기 성장 전망이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정책 과제는 고용률의 관리에서 일자리의 질과 생산성 제고로 이동하고 있다.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낮은 실업률과 회복된 고용(8.5.2). 실업률은 2022~2025년 2.7~2.9%의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2025년 2.8%), 고용률은 62.9%(2025)로 2010년대 중후반보다 높다. 청년(20대) 실업률은 6.1%로 가장 높지만 2020년 이후 2.9%p 하락하며 개선세가 뚜렷하고, 60세 이상 고용률은 2011년 이래 팬데믹에도 꺾이지 않고 상승 중이다[경제활동인구조사].

핵심 지표 ② 임금의 상승과 격차의 완화(8.5.1). 시간당 임금은 2011년 1만 3,769원에서 2024년 2만 5,156원으로 올랐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70.9%로 2011년(62.8%) 대비 8.1%p 개선되었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상대 임금도 72.5%에서 82.1%로 상승했다. 저임금 직종인 서비스직(54.0→60.1%)과 단순노무직(56.7→63.6%)의 상대 임금도 개선되어 하위 직종의 격차가 완화되었다[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핵심 지표 ③ 산업재해 사망의 감소(8.8.1).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2011 년 0.79‰에서 2024 년 0.39‰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전체 사망만인율(0.98‰)도 감소세다. 같은 기간 재해율이 0.48%(2017)에서 0.67%(2024)로 오른 것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보호받는 노동의 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통계적 결과로, 그 자체가 제도 발전의 지표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산재보험 적용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배경: 플랫폼·특수형태 노동의 확산으로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재해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취업자가 늘었다. 고용 형태의 전환이 사회보험의 사각을 만들어 낸 것이다.

활동: 2018 년 보험가입자 확인제 도입과 산재 추정 원칙 명시로 사업주 승인 없는 산재 신청이 가능해졌고, 2021 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2023 년에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해 적용 직종을 대폭 넓혔다. 이는 산재보험을 뒤따르던 고용보험이 2021 년과 2022 년에 급격히 보호범위를 확대하면서 산재보험이 다시 고용보험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결과이다.

변화: 재해율 수치가 0.48%에서 0.67%로 '오른' 것은 통계 대상에 들어온 노동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 같은 기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계속 낮아졌다. 지표상의 상승이 보호 범위 확대에 따른 결과임을 보여준다.

시사점: 고용 형태의 전환에 사회보험 제도가 단계적으로 응답해 온 궤적은, 플랫폼 노동의 보호라는 공통 과제를 안은 국가들과의 동료학습 소재가 된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고령 노동자에게 집중된 산업재해.** 60 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2024 년 전체 재해자의 38.2%, 재해 사망자의 52.8%를 차지한다. 고령자의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은 노동시장의 고령화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가 산업현장의 변화를 잘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 **청년 임금과 고용률의 상대적 정체.** 30 대의 상대 임금은 2011 년 107.5%에서 2024 년 103.1%로 하락했고, 20 대 고용률은 2025 년 전년 대비 0.8%p 떨어졌다. 이는 청년의 노동시장 안착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여전히 큰 성별 임금 격차.** 여성 임금 70.9%는 개선 추세임에도 OECD 에서 성별 격차가 심한 편에 속한다(SDG 5 상호참조). 관리직의 상대 임금이 243.0%에서 314.7%로 벌어진 것도 임금 분포 상단의 격차 확대를 보여준다.
- **고용 없는 회복.** 관광산업 매출은 2024 년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종사자 수는 2019 년의 79.5%에 그친다. 매출과 고용의 회복 속도가 어긋나는 부문의 일자리 재편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대상은 낮은 실업률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집단이다. 고령 노동자는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산재 위험과 제도의 사각이 겹치는 조건에 있다. 플랫폼·특수형태 노동자는 최근에야 제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 여성(상대임금 70.9%), 상대임금이 정체된 청년, 매출 회복에도 고용이 회복되지 않은 관광업 종사자에게는 회복의 효과가 고르게 미치지 않았다. AI 전환은 이러한 구조에 추가적인 재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52.8%가 60세 이상 노동자다 — 고령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의 개선이 양질의 일자리 과제의 핵심이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고용 정책의 향후 부담은 상당 부분 다른 목표의 전환에서 온다. 제조업 재편(SDG 9)과 탈탄소 전환(SDG 7)의 고용 충격을 받아내는 것이 이 목표의 몫이며, 전환기 재교육(SDG 4)과 고용 안전망이 그 수단이다. AI에 따른 일자리 재편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저성장 국면의 생산성 돌파구인 동시에 고용 형태와 보호 제도를 다시 설계하게 하는 요인으로, 기술 정책(SDG 9)과 노동 정책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 성별 임금 격차(SDG 5)와 노동소득의 분배(SDG 10)는 일자리의 질이 분배 성과로 이어지는 통로이며, 안정적 고용은 근로빈곤의 예방(SDG 1)과 직결된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한국은 개도국의 무역 역량을 지원하는 무역원조(Aid for Trade, 8.a)와 산업 인력 양성 협력을 통해 '무역으로 성장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압축적으로 구축하고 새 고용형태로 확장해 온 제도 경험은 공식화(formalization)와 노동자 보호라는 개도국 공통 과제에 실용적 참조가 되며, ILO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의제 이행에도 참여하고 있다. 일자리 파트너십은 이 목표의 대외적 실천이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취약 노동의 안전 최우선.** 고령 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예방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사고성 사망 감소세가 가장 취약한 곳에 먼저 닿게 한다.
- **전환기 고용 안전망.** 산업·AI 전환의 고용 충격에 대비한 재교육·전직·소득 지원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노무제공자 보호 제도를 완성한다.
-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질.** 청년 상대 임금 정체와 성별 임금 격차(70.9%)를 노동시장 정책의 명시적 개선 목표로 설정한다(SDG 5 연계).
- **저성장 시대의 생산성.** AI 활용 확산과 산업 혁신으로 생산성 기반의 성장 경로를 마련하되, 그 성과가 임금과 고용의 질로 이어지는 분배 구조를 함께 설계한다.

참고문헌

한국은행, 국민계정(<https://kosis.kr>, 2025.8.28. 인출)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https://kosis.kr>, 2025.8.28. 인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산업재해현황(<https://www.index.go.kr>, 2025.10.20.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조사(<https://know.tour.go.kr>, 2026.2.3. 인출)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한국개발연구원(KDI), 2025 (1 인당 GDP 성장률 장기 전망)

OECD, OECD Data Explorer; ILO, ILOSTAT(2025.9.19. 인출)

■ SDG 9 :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Goal 9 :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제조업과 기술 혁신은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기반이다. 지난 10 년(2016~2026)은 그 기반 위에서 **산업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전환의 10 년**이었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성장을 견인하는 사이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은 2015 년 17.6%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의 생산방식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AI 3 대 강국' 도약을 국가 전략으로 내걸고 AI 기본법 제정과 AI 액션플랜 수립으로 기술 발전과 책임성의 균형을 제도화하는 한편, AI 인프라(데이터센터) 확충이 요구하는 에너지·자원과의 조화라는 새로운 과제도 마주하고 있다.

이 전환의 시기에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의 연구개발(R&D) 투자·인력 기반을 유지해 왔다. 이 목표의 과제는 이러한 혁신 역량의 성과가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여성 연구원과 여성 제조업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다.

B. 핵심 진단 : 4 분면 (Core Diagn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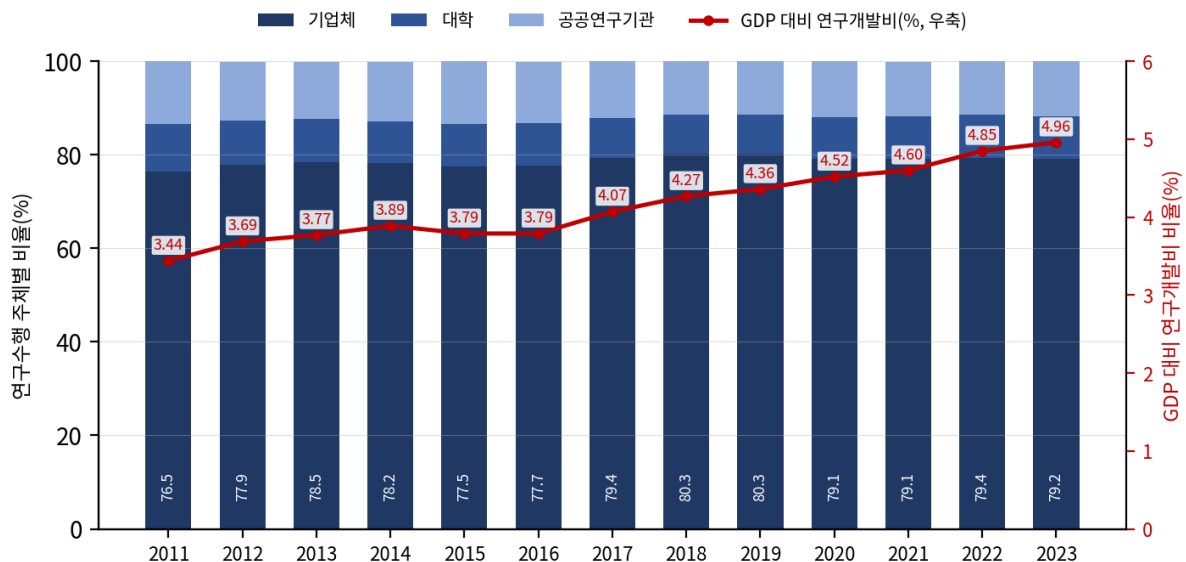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R&D 투자·인력(9.5)	[^] 개선중 영역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 제조업 고용(9.2)	[X] 개선필요 영역 ← 소규모 산업 비중(9.3)

SDG 9 는 지표군별로 상반된 위치에 있다 **[+] 양호·개선 영역**으로 **R&D(9.5)**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5.0%(2023)로 OECD 34 개국 중 이스라엘에 이은 2 위, 연구인력 밀도(인구 1,000 명당 9.5 명)는 OECD 30 개국 중 1 위이며 장기 상승 추세다. 반면 **[!] 유지노력 영역**으로 **제조업 고용(9.2)**은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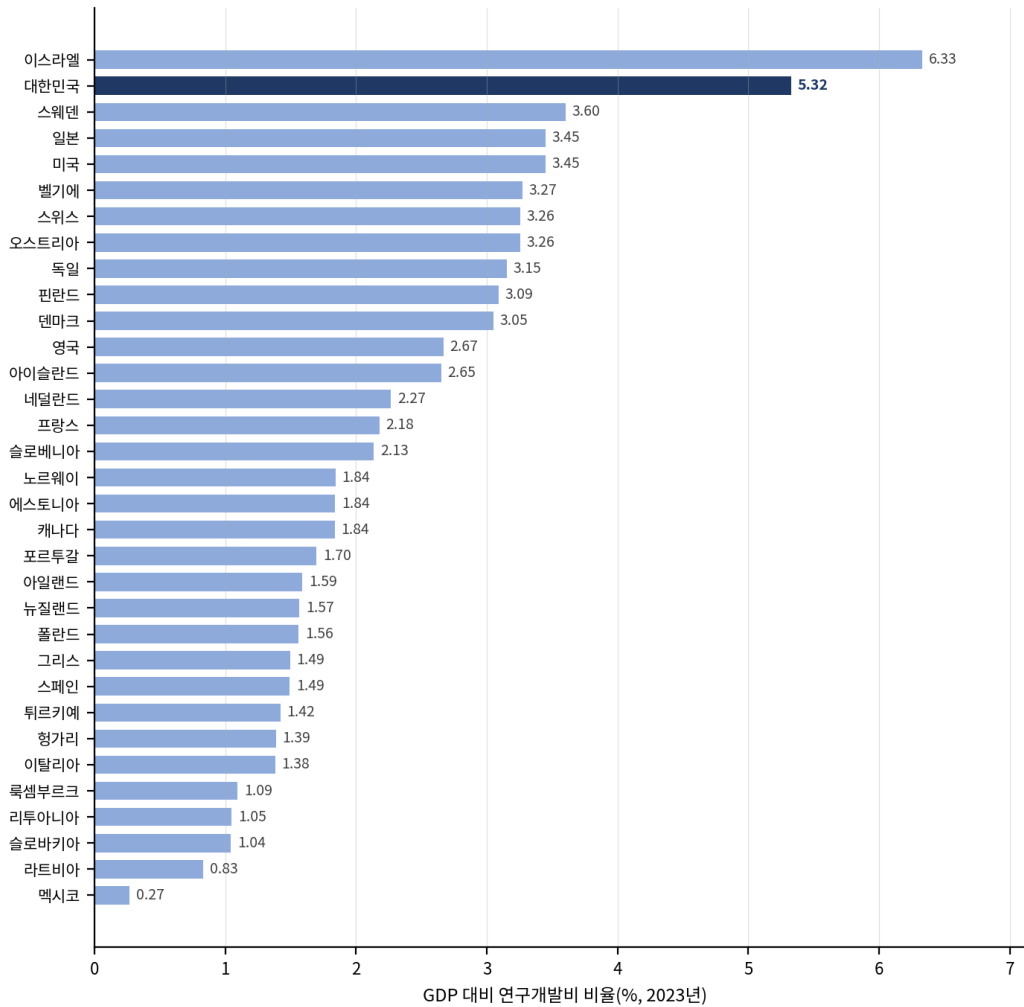
평균(13.0%)보다 높은 15.2%(2025)이지만 10 년째 감소 중이고 순위도 하락했다(12 위, 전년 11 위). **[X] 개선필요 영역으로 규모 산업(9.3)**은 제조업 부가가치 중 비중 7.9%(2022)로 OECD 22 개국 중 15 위에 그치며 2 년 연속 감소했다[UN SDG Indicators Database; 국가데이터처, 2026].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R&D 투자와 인력(9.5.1/9.5.2).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2011 년 49.9 조 원에서 2023 년 119.1 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GDP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3.4%에서 5.0%로 상승해 OECD 2 위(1 위 이스라엘 6.3%, 3 위 스웨덴 3.6%)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 1,000 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2011 년 5.8 명에서 2023 년 9.5 명으로 늘어 OECD 30 개국 중 가장 높다(2 위 스웨덴 8.9 명). 재원의 76.1%를 민간이 부담하고 수행의 79.2%를 기업이 담당하는, 민간·산업 주도의 혁신 생태계가 특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그림]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연구수행 주체별 비율(%), 2011~2023 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https://kosis.kr>, 2025.8.27. 인출)



[그림] OECD 국가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2023 년) — 출처: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2024-sept

핵심 지표 ② 제조업 고용 비율(9.2.2).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은 2015 년 17.6%를 정점으로 매년 낮아져 2025 년 15.2%에 이른다. OECD 평균(13.0%, 2023)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제조업 고용은 학력·경력이 낮은 노동자에게도 중산층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 충격의 완충재 역할을 해 온 일자리라는 점에서[길은선, 2021], 감소세 자체가 산업 전환기 고용정책의 핵심 모니터링 대상이다.

핵심 지표 ③ 소규모 산업의 자리(9.3.1). 제조업 총매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15 년 36.6%에서 2023 년 32.1%로, 소상공인 비중은 2019 년에 9.6%까지 증가했으나 2023 년 8.6%로 다시 낮아졌다. UNIDO 기준 소규모 산업(평균 고용 20 명 미만)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도 7.9%(2022)로 2 년 연속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OECD, 2024]. 혁신 기반의 저변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책임성 공백을 메우다 — AI 기본법과 AI 액션플랜

배경: AI가 산업·고용·일상을 빠르게 재편하는 동안,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책임성 공백(accountability gap)'이 SDG 이행의 새로운 위험으로 지적되어 왔다.

활동: 한국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함께 규정한 포괄적 AI 법제(「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2026.1.22. 시행)」)을 마련하고, 포용성 측면의 국내 정책과 대외협력을 명시한 AI 액션플랜을 수립하였다. 기술 촉진과 위험 관리, 국내 정책과 국제 협력을 하나의 제도 틀에 담은 접근이다.

변화: 규율 공백 속에 진행되던 AI 전환에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이 마련되었고, 'AI 3대 강국' 전략이 산업 진흥을 넘어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의 언어로 확장되었다.

시사점: 성장 단계에서 제도를 병행 설계한 한국의 경험은 AI 전환기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동료학습(peer learning) 소재가 된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혁신 인력의 성별 불균형.** 여성 연구원 비중은 2011년 17.3%에서 2023년 23.7%로 꾸준히 늘었으나 여전히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 1위의 연구인력 밀도와 대비되는 격차다.
- **고용 없는 성장 현실화.** 한국 경제의 성장과 경기 충격의 완충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해 온 제조업의 고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2015년 17.6% → 2025년 15.2%). AI가 고용의 재편을 가속화하는 산업 전환 시대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
- **여성에게 먼저 닿는 제조업 고용 감소.** 여성 취업자의 제조업 고용 비율은 2015년 12.1%에서 2025년 9.5%로 2.7%p 감소해 남성(21.5%→19.9%, -1.7%p)보다 감소 폭이 크다. 산업 전환의 고용 충격이 성별로 비대칭적이다.
- **도로에 집중된 운송 구조(9.1.2).** 2023년 승객 운송의 79.8%, 화물 운송의 92.7%가 도로에 의존한다. 승객 운송량은 코로나 19 이전 수준(5,278억 명·km)을 회복했으나, 탄소·안전·운수 노동자 노동환경 측면의 지속가능성 과제가 남아 있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대상은 혁신 지표에 드러나지 않는 집단이다. 여성 연구원 비중은 세계 1위의 연구인력 밀도에도 불구하고 23.7%에 그치며, 여성 제조업 노동자는 산업 전환의 고용 충격을 먼저, 더 크게 받는다.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은 가치사슬 참여와 금융 접근(9.3)에서 제약을 받으며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에 놓여 있고, 화물의 92.7%를 실어 나르는 운수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도로 중심 운송 구조의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AI 전환은 디지털 전환에서 뒤쳐지는 중소 제조업체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격차를 더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연구인력 밀도는 세계 1 위이나 여성 연구원 비중은 23.7%에 그치며, 산업 전환의 고용 충격은 여성 제조업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먼저 나타난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AI 데이터센터의 확대는 디지털 혁신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전력 수요 증가를 통해 에너지 전환(SDG 7)과 온실가스 감축(SDG 13)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공급·전력망 확충을 함께 검토하는 정책 조정이 이 목표와 에너지·기후 목표 사이의 대표적인 상충 관리 지점이다.

제조업 고용의 감소와 지역 주력산업의 재편은 그 충격이 고용(SDG 8)과 지역 간 격차(SDG 10)로 이어지므로, 산업 정책은 전환기 재교육(SDG 4)·고용 안전망과 연계될 때 전환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확충(SDG 5)은 혁신 기반을 넓히는 과제이며, 과학기술·인프라 ODA(세부목표 9.a)는 개도국 기술 격차 완화(SDG 17)로 연결된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한국의 2024 년 양자원조 중 경제 기반시설·서비스 부문은 25.5 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9% 증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OECD, 2025]. 개도국의 회복력 있는 인프라 구축(9.a)을 지원하는 이 흐름은, 도로·교량에서 디지털 인프라로 협력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26 년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의 AI 기능을 통합하고 인프라와 역량을 공유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구축하여 AI 분야 국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AI 액션플랜에 명시된 대외협력 방향과 개발경험공유사업(KSP)의 산업화 경험 전수는 개도국의 기술 개발·혁신(9.b)과 AI 격차 완화를 지원하는 한국형 기여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포용적 혁신 생태계.** 여성 연구인력 확대와 소규모 사업장·중소기업의 혁신 접근성 제고를 통해, 세계 최상위 R&D 역량의 저변을 넓힌다.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완화를 산업 정책의 명시적 목표로 삼는다.
- **정의로운 산업 전환.** 제조업 고용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전환기 노동자(특히 여성·중고령·위기 지역 및 산업 종사자) 재교육·전직 지원을 제도화한다.
- **책임 있는 AI 전환.** AI 기본법·AI 액션플랜의 이행과 함께, AI 인프라 확충을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과 통합 설계한다(경제-환경 조율).
- **운송의 전환.** 도로 집중 완화를 위한 철도·해운 분담 확대, 친환경 차량 보급, 운수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병행한다.

참고문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2025, 2025 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경제활동인구조사
국토교통부,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길은선, 2021, 제조업 고용의 특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망업종 검토,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OECD, 2024; 2025,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
UN, SDG Indicators Database (<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 SDG 10 :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Goal 10 :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주요 정책 과제로 다뤄져 왔다. 지난 10 년(2016~2026)은 재분배 제도의 확충으로 이에 대응한 시기다. 공적 이전 제도가 단계적으로 확충되며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성장의 성과를 제도를 통해 재분배한다는 정책 기조가 이 기간에 유지되었다. 그 결과 소득 하위 40%의 소득 성장률이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 목표는 새로운 여건 변화 위에 놓여 있다. 고령화로 은퇴연령 인구의 비중이 늘면서, 소득 분위의 개선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노년층 빈곤이 재분배 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떠올랐다. 산업·에너지·디지털 전환은 전환 비용이 저소득층과 취약 노동에 전가될 위험을 동반하며, 성장의 배분 문제였던 이 목표에 전환의 배분 문제라는 새 층위를 더하고 있다.

2027 년 HLPF 심층검토 대상인 이 목표는 성과 확인을 넘어서는 검토를 요구한다. 소득 분위별 성장률이 수렴하는 동안에도 소득의 원천과 소비 여력의 격차는 남아 있다. 난민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보호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 이 목표의 검토는 평균과 총량의 개선에 더하여 분포와 집단 간 격차를 함께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B. 핵심 진단 : 4 부문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하위 40% 소득 성장(10.1.1)·노동소득 비율(10.4.1)	[^] 개선중 영역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 집단 간 격차(노인·장애·성별)	[X] 개선필요 영역

[+] **양호·개선 영역으로 소득 분배의 흐름**은 2016~2024 년 소득 1·2 분위의 실질소득 성장률(28.0%·15.9%)이 전체 평균(12.9%)을 웃돌아 세부목표 10.1 이 구현되었고,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59.4%, 2024)은 OECD 평균(54.8%)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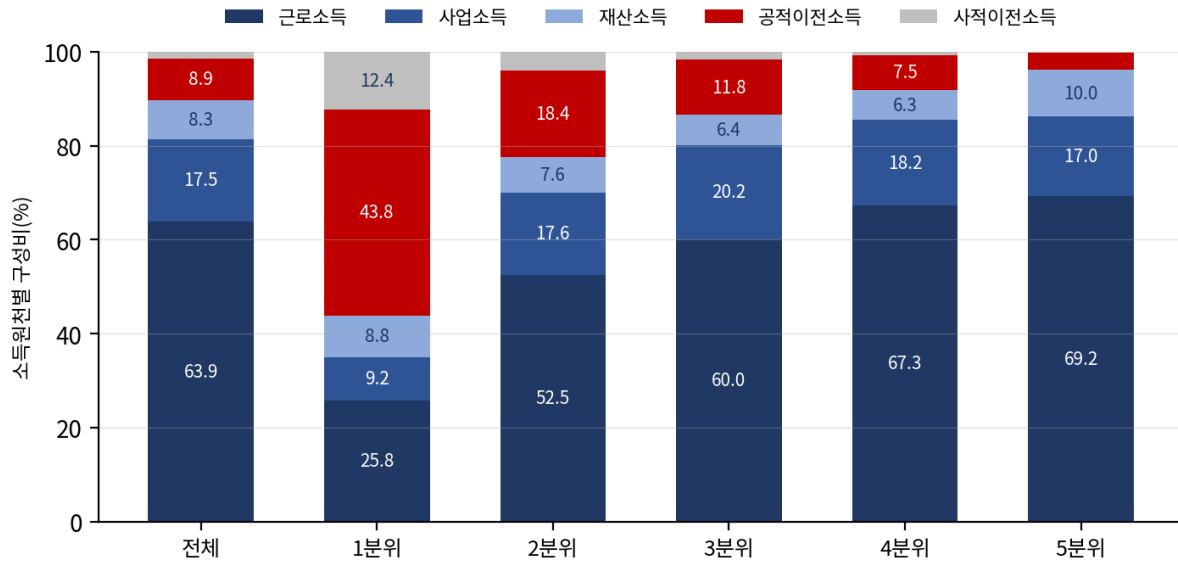
반면 [!] **유지노력 영역으로 집단 간 격차**는 은퇴연령 빈곤(OECD 최상위권), 장애 인구 빈곤(비장애의 2.5 배), 성별 임금(70.9%) 등 계층 간 격차가 소득 분위 개선과 별도로 지속되고 있다(SDG 1·5·8 상호참조).

종합하면 소득 분배의 흐름은 개선되었으나 집단 간 격차와 국가 간 불평등에 대한 대응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심층검토는 이 두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하위 40%의 더 빠른 성장(10.1.1). 2016~2024 년 가구 실질소득(2020 년 기준년 가격)은 전체 12.9% 증가한 가운데, 소득 1 분위(28.0%)와 2 분위(15.9%)의 성장률이 3~5 분위(11.5~12.1%)를 뚜렷하게 앞질러 하위 40%의 빠른 성장을 보여줬다. 그러나 성장률의 수렴이 격차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같은 기간 절대 소득액 기준으로 5 분위의 증가액이 1 분위의 증가액의 5 배를 넘어, 분위 간 격차는 확대되었다. 소득 구성에서도 1 분위 가구는 공적·사적 이전소득이 소득의 56.1%를 차지해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은 반면, 5 분위는 근로·재산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비 측면에서는 2019~2024 년 기준 1 분위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팬데믹 이전(2017 년) 수준과 비교하면 전 분위에서 소비 지출이 감소해 소비 여력의 회복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의료비의 경우 절대 지출액은 5 분위가 높지만 소비 중 비중은 1 분위(10.0%)가 5 분위(4.8%)의 두 배에 달하여, 저소득 가구의 상대적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구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전체
실질소득(2024, 만 원)	1,331	3,075	4,978	7,587	14,868	6,369
실질소득 성장률(2016~2024, %)	28.0	15.9	11.5	11.7	12.1	12.9
소득 중 공적+사적 이전소득 비중(2024, %)	56.1	22.3	13.4	8.2	3.8	10.3
소득 중 근로+재산소득 비중(2024, %)	34.6	60.1	66.4	73.6	79.2	72.2
소비지출 증가율(2017~2024, %)	-2.5	-8.2	-5.5	-0.5	-2.3	-3.3
소비 중 의료비 비중(2024, %)	10.0	7.6	6.4	5.4	4.8	6.1



[그림] 소득원천별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구성(2024년) —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원천별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https://kosis.kr>)

핵심 지표 ② 노동에 배분되는 몫(10.4.1). 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은 2011~2017년 56.5~57.4%에서 등락하다 2018년부터 상승해 2019~2024년 59~6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노동소득 비율(59.4%)은 자료가 확인되는 OECD 35개국의 평균을 상회하며 10위에 해당한다. 상위권은 스위스(70.6%), 벨기에(63.9%), 하위권은 아일랜드(31.3%), 멕시코(35.0%)가 차지한다[ILO].

핵심 지표 ③ 금융 시스템의 안정(10.5.1).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은 2011년 11.1%에서 등락을 거치며 2023년 14.7%에 이르렀으며, 바젤 III가 요구하는 기본자본(Tier 1) 국제 기준(6.0%)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OECD 평균(18.0%)에 못 미쳐 자료가 확인되는 36개국 중 하위권에 해당하며, 총 자산 대비 기본자본 비율(6.3%) 역시 OECD 평균에 못 미친다. 국제 규제 기준은 충족하나, 다른 OECD 국가 대비 자본 완충 수준은 낮은 편이다[IMF].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공적 이전의 재분배 효과

배경: 시장소득만으로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개선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25.8%에 불과하며, 고령·질병·돌봄 등으로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제약된 가구가 많다.

활동: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 지난 10년의 제도 확충은 공적 이전을 1분위 소득의 43.8%를 차지하는 최대 소득원으로 만들었다.

변화: 1분위 실질소득은 2016~2024년 28.0% 성장해 전 분위 중 가장 빨랐고, 1분위 공적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78.7% 늘었다(SDG 1 상호참조). 하위 40%의 평균 상회 성장이라는 세부목표 10.1의 성취는 이 재분배 확충 위에서 실현되었다.

시사점: 재분배 제도의 단계적 확충이 분배 개선으로 이어진 한국의 경험은 복지국가 확장기에 있는 국가들과의

동료학습 소재다. 남은 과제는 이전소득 의존을 시장소득 기회로 연결하는 것이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2024 년의 성장률 변화.** 2024 년 전년 대비 소득 성장률은 5 분위(2.1%)에서 가장 높았다. 8 년의 수렴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인지 일시적 변동인지는 세분화된 추이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
- **교육비 지출 격차.** 1 분위 가구의 연간 교육비 지출은 15 만 원(소비의 1.1%), 5 분위는 851 만 원(15.0%)이다. 소득의 격차가 자녀 세대의 기회 격차로 이전되는 이 구조는 계층 이동을 어렵게 하여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다.
- **난민 보호.** 국제정세와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구성에 따라 연도별 변동 폭이 큰 만큼(2014 년 시리아, 2018 년 제주 예멘 사례와 같이 내전·분쟁 등으로 특정 국가 출신 난민신청자가 일시적으로 증가), 특정 연도의 보호율을 기준으로 증감 추이를 단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제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 출신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그 보호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판단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집단 간 격차.** 소득 분위의 수렴과 별개로 은퇴연령 빈곤(66 세 이상 39.7%, OECD 최상위권(2022)), 장애 인구 빈곤(35.4%, 비장애의 2.5 배(2022)), 성별 임금(70.9%) 등 집단 간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SDG 1·5·8 상호참조). 이주민·난민 등에 대한 분리통계의 부족도 과제로 남아 있다.
- **자본 완충 수준.** 금융건전성은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만 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14.7%)과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6.3%)은 OECD 평균(18.0%·7.5%)을 밑돈다. 위기 시 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대응 여력 확충이 필요하다.

구분	2014	2018	2021	2023	2024
난민 신청자(명)	2,896	16,173	2,341	18,837	18,336
난민 인정자(명)	94	144	72	101	105
인도적 체류 허가(명)	533	507	49	125	101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대상은 국적과 통계의 경계에 있는 집단이다. **난민과 이주민**은 정책 접근성이 낮은 집단이며, 이들의 상황은 국내 통계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소득 분위의 개선이 닿지 않는 초고령·장애 인구의 격차와 전환 비용의 계층별 전가 역시 소외 요인이지만, 국적과 이주 지위에 따른

배제는 통계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한국의 SDG 세분화 통계에서 이주 상태별 분리는 취약한 항목 중 하나로, 난민, 이주민의 빈곤·고용·건강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집계되지 않는다. 세분화 통계의 확충은 이 목표의 향후 과제이자 보고서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소득분배의 개선을 보여주는 지표(노동소득 비율, 하위 40% 성장률)의 개선이 모든 집단에 고르게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성별 임금격차(70.9%, SDG 8)와 노년 여성의 빈곤(SDG 1)은 소득 분위별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 격차는 공적 이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으며,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저임금·비정규직에 집중되는 구조 자체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에너지·산업 전환의 비용이 부담금이나 세제의 형태로 조달될 경우 그 부담이 저소득층에 역진적으로 귀착될 위험이 있다(SDG 7-13). 따라서 전환 재원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소득계층별 부담 배분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불평등 대응에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양자원조 확대(세부목표 10.b)와 이주노동자의 송금 여건 개선(세부목표 10.c)이 함께 추진될 때 개도국의 실질적 자원 확보 효과가 커지며, 이는 SDG 17의 개발재원 이행 목표와 직접 연동된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국가 간 불평등의 축소는 이 목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한국은 양자원조의 31.5%를 최빈개도국에 배분하며(10.b, SDG 17 상호참조), 이주노동자의 본국 송금을 위해 송금 수수료 인하와 합법적 송금 경로를 지원한다(10.c). 무역에서는 WTO 합의에 따라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 관세 제도를 운용하여 시장 접근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10.a).

2026년 확정된 『제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은 '상생형 K-ODA'를 비전으로 삼아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과 민관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전략목표로 제시했다.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경험이 이 계획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난민 제도의 포용성 논의.** 난민 심사의 전문성·신속성 제고와 보호의 포용성 확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주민·난민 관련 분리통계 생산을 확충한다 — 심층검토 대상 목표로서 국제사회에 약속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개선 지점이다.
- **기회의 재분배.**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역량 투자 격차(15만 원 vs 851만 원)를 좁히는 공적 투자를 확대하여, 소득 수렴의 성과가 세대 간 이동성으로 이어지게 한다. (SDG 4 연계)

- **이전소득에서 시장소득으로.** 공적 이전의 성과를 유지하되, 저소득층의 고용·자산 형성 기회를 확충해 1 분위 근로소득 비중(25.8%)을 높인다.
- **전환기 불평등의 상시 감시.** 2024 년의 반전 신호(5 분위 최고 성장)와 산업·에너지·디지털 전환 비용의 계층별 귀착을 세분화 통계로 상시 모니터링한다.
- **충격 완충의 여유 확보.** 금융기관의 자본 완충을 OECD 수준으로 확충하고, 재정정책의 재분배 효과(10.4.2)를 정기 점검한다.

참고문헌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https://kosis.kr>, 2026.1.5. 인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난민종합통계('94 년~'25 년)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문화마을특구 특구현황,
(https://www.ansan.go.kr/global/common/cntnts/selectContents.do?cntnts_id=C0001007, 2026.8.12. 인출)
European Union Agency for Asylum, 2025, Latest Asylum Trends 2024 - Annual Analysis
ILO, Labour statistics for the SDGs(<https://ilostat.ilo.org/topics/sdg>, 2026.2.26. 인출)
IMF, IMF Data(<https://data.imf.org>, 2026.2.14. 인출)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3.13. 인출)

■ SDG 11 :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Goal 11 :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국민 대다수가 도시에 사는 나라에서 SDG 11 은 곧 국민의 일상에 관한 목표다. 최근 10 년(2015~2024), 한국 도시의 공기는 맑아졌지만 주거 여건의 지역·소득계층 간 격차는 더욱 뚜렷해졌다. 국가적 의제로 떠올랐던 미세먼지는 국내 저감 정책과 국외 유입 감소, 기상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24 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도시공원 일몰제(2020)를 전후해 1 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50% 이상 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2 년 기준 세 배 이상 높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경제활동 집중은 계속되었고, 주거 개선은 정체되는 가운데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 2016 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이 목표의 과제는 도시의 환경 개선 성과와 함께 주거·이동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B. 핵심 진단 : 4 분면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개선중 영역 ← 초미세먼지(11.6.2)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 수도권 주거 부담(11.1.1)	[X] 개선필요 영역

[^] **개선중 영역**은 초미세먼지로 2024 년 초세미세먼지 농도는 $16 \mu\text{g}/\text{m}^3$ 로 관측 이래 최저이고 '나쁨' 등급 발령 일수도 12 일로 가장 적었다. 국내 지표의 뚜렷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뒤쳐진 상황이다. [!] **유지노력 영역**은 수도권 주거 부담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24 년 3.8%로 전년보다 상승해 이전까지의 감소세가 멈췄다. 자가점유율의 소득계층 간 격차는 17.3%p(2006 년)에서 28.1%p(2024)로 벌어졌으며, 수도권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RIR 18.4%)은 타 지역을 크게 웃돈다[국립환경과학원; IHME; 주거실태조사].

종합하면 대기질 등 도시 환경 지표는 개선 추세이나 주거 부담과 소득계층 간 주거 격차는 확대되고 있어, 정책 과제는 도시 환경의 평균적 개선에서 주거 형평의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초미세먼지 농도의 개선(11.6.2).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오염도는 2015 년 $26 \mu\text{g}/\text{m}^3$ 에서 2024 년 $16 \mu\text{g}/\text{m}^3$ 로 낮아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강화된 대기환경기준($15 \mu\text{g}/\text{m}^3$)을 달성한 측정소 비율은 2023 년까지 30%를 넘지 못하다가 2024 년 48.3%로 뛰었고, '나쁨' 발령 일수는 12 일(2015 년 62 일), '매우 나쁨'은 0 일이었다. 초미세먼지 등급 구간이 2018 년 3 월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나쁨 일수 감소 폭은 더욱 의미가 있다.[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핵심 지표 ② 도시공원 면적의 확대(11.7.1). 1 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2011 년 7.6m^2 에서 2024 년 11.8m^2 로 55.2% 늘었다. 도시공원 일몰제(2020)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해소에 나선 것이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대규모 공원과 생활권 공원의 확충이 이어졌다[LX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

핵심 지표 ③ 이동권의 확장(11.2.1). 15 세 이상 인구 중 대중교통을 주 4 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의 94.2%가 20 분 안에 대중교통에 접근하며(10 분 내 57.2%), 접근 수단의 83.4%가 도보일 만큼 보행 기반 접근성이 높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여주는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2 년 12.8%에서 2024 년 44.4%(3 만 5,432 대 중 1 만 5,743 대)로 세 배 이상 늘었고 최근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국토교통부]. 자가점유율도 2024 년 58.4%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전 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배경: 2010년대 중반 미세먼지는 주요 국가적 환경 의제였다. 발전·산업·수송·생활 전 부문에 배출원이 흩어져 있어 단일 규제로는 풀 수 없는 문제였다.

활동: 대기권역별 배출총량관리제,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기술 진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까지 — 규제와 지원을 결합한 전 부문 저감 정책이 축적되었다.

변화: 오염도는 $26 \mu\text{g}/\text{m}^3$ (2015)에서 $16 \mu\text{g}/\text{m}^3$ (2024)로 낮아졌고, '나쁨' 일수는 62 일에서 12 일로 줄었다. 국외 유입 감소와 기상 여건도 함께 작용했지만, 2018년 기준 강화 이후 처음으로 측정소 절반(48.3%)이 연평균 기준을 달성한 것은 정책 축적의 결과다.

시사점: 발생원이 여러 부문에 분산된 도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문별 맞춤 정책을 병행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한국의 경험은,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는 도시·국가 간 동료학습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WHO 권고기준과의 격차 등 남은 과제는 E에서 별도로 다룬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주거 개선의 정체와 수도권 역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24년 3.8%로 전년 대비 0.2%p 반등하며 2018년 이래의 감소세를 멈췄다. 2006년 21.6%(도 지역)에 달했던 미달률이 5% 안팎까지 떨어지며 지역 격차가 거의 해소되었지만, 2016년부터는 수도권(4.4%)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된 역전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 **자가점유율의 계층 간 격차.** 전체 자가점유율은 최고치(58.4%)를 기록했지만 그 안에서 2014년과 비교하면 고소득층(74.8%)과 중소득층(63.6%)은 상승한 반면 저소득층(46.7%)은 소폭 하락했다. 고소득-저소득 격차는 17.3%p(2006)에서 28.1%p(2024)로 벌어졌다.
- **수도권 임차가구의 부담.**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수도권 18.4%로 광역시 등(15.2%)·도 지역(12.7%)을 크게 웃돌고, 변동 폭(2021~2024년 17.8~20.3%)도 커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이 밀집한 수도권 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 **대기질 개선의 남은 과제.** 역대 최저 오염도($16 \mu\text{g}/\text{m}^3$)도 국내 연평균 기준($15 \mu\text{g}/\text{m}^3$)을 충족하지 못하고 WHO 권고기준($5 \mu\text{g}/\text{m}^3$)의 세 배를 넘는다.
- **공원과 저상버스의 지역 격차.**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증가율은 2024년 1.6%로 2015년 이래 최저였고, 서울(4.7 m^2)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2011년(8.4 m^2)보다 오히려 줄었다. 저상버스 도입률도 서울(71.0%)과 울산(18.7%)·제주(22.5%) 사이에 세 배 이상의 격차가 있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대상은 같은 도시 안에서 주거·이동 여건의 격차를 겪는 집단이다. 수도권의 청년·임차가구는 소득의 5분의 1에 가까운 임대료를 부담하며 주거 안정성이 가장 낮고, **저소득 가구**는 2014년과 비교해 자가점유율이 유일하게 낮아진 소득계층이다. 전체 가구의 3.8%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며, 반지하·쪽방·노후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가구도 도시 곳곳에 남아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권은 지역에 따라 세 배 넘게 차이 난다. **생활권에 공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전국 평균 공원 면적의 증가가 체감되지 않는다. 도시 지표의 평균 개선과 함께 지역·집단별 편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가점유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동안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만 하락하였고, 고소득층과의 격차는 17.3%p에서 28.1%p로 확대되었다 — 자가 취득 기회 격차가 소득 격차를 따라 커지고 있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주거비 부담과 기반시설 격차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 감소라는 국토 구조 재편의 산물로, 공간적 불평등(SDG 10)의 가장 가시적인 형태이며 청년의 주거 불안은 그 격차가 세대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주거 빈곤(SDG 1)과 주거 정책의 접점이 여기에 있다.

도시는 폭염 사망과 호우 피해(SDG 13)가 집중되는 공간이자 이에 대응하는 그늘목·물순환·저류 인프라(SDG 6)가 설치되는 공간으로, 도시 계획과 기후 적응 정책의 통합 수준이 피해의 규모를 좌우한다. 대기질의 개선은 건강 성과(SDG 3)와,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SDG 7)은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직결된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한국의 도시화 경험 — 압축적 도시 성장과 그 부작용의 관리, 대기질 개선,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 은 빠른 도시화를 겪는 개도국들에 실용적 참조가 된다. 도시 기반시설 ODA(11.c)와 스마트시티 협력을 통해 개도국 도시의 계획·교통·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엔 해비타트의 새로운 도시의제(NUA) 이행에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 VLR의 국제 공유는 도시 외교의 새로운 층위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수도권 주거복지의 집중 대응.** 수도권 임차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RIR 18.4%)과 임대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반등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을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다.
- **주거 사다리의 복원.** 저소득층의 자가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여,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자가점유율 격차(28.1%p)의 확대 추세를 반전시킨다.

- **WHO 기준을 향한 대기질 관리.** 역대 최저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안주하지 않고, 수도권·충청권의 고농도 오염과 2 차 생성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안정적 달성을 넘어 WHO 권고기준에 단계적으로 다가간다.
- **생활권의 질과 형평.** 고밀 도시의 낮은 1 인당 공원면적(서울 4.7 m²)과 저상버스 도입률의 지역 간 격차(울산 18.7%)를 형평성의 관점에서 개선하고, 공원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성·접근성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대중교통현황조사; 저상버스도입현황(<https://stat.molit.go.kr>, 2026.2.16. 인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24; 환경부 보도자료(2025.2.11.)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https://kosis.kr>, 2026.2.16. 인출)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UN-Habitat, 2026, 2024-2025 Annual Report: National Urban Policy Programme, Phase Two (<https://unhabitat.org/2024-2025-annual-report-national-urban-policy-programme-phase-two>)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종합포털, 2026, K-City Network 계획수립형 사업 공고 (<https://smartcity.go.kr>, 2026.8.10. 인출)

■ SDG 12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Goal 12 :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제조업 국가에 순환경제는 환경 정책이자 자원 안보 전략이다. 지난 10 년(2015~2025)에는 두 가지 성과가 확인되었다. 하나는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자원을 덜 소비한 탈동조화(decoupling)의 확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 최상위권의 분리배출·재활용 문화이다. 종량제(1995)에서 시작해 생산자책임재활용,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법제로 이어진 30 년의 제도 축적이 이 성취의 토대다.

2023 년부터 한국은 재활용 통계를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로 쪼개어 공표하기 시작했고, 2025 년에는 국가자원생산성지표가 국가승인통계가 되어 국가자원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MC)을 공표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2024 년 기준으로 재활용률이 77.7%이지만 최근 3 년 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회수를 제외한 물질재활용률은 67.4%로 10.3%p 낮아진다. 2027 년 HLPF 심층검토 대상인 이 목표의 과제는 성장과 자원 소비의 탈동조화에 이어 물질 순환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B. 핵심 진단 : 4 분면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 자원 탈동조화(12.2.2)·도시폐기물 재활용(12.5.1)	[^] 개선중 영역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 전체 재활용률 정체(12.5.1)·식품폐기량 정체(12.3.1)	[X] 개선필요 영역 ← 유해폐기물(12.4.2)

[+] 양호·개선 영역은 자원 효율이다. GDP 당 국가자원소비량(DMC)은 2017 년 0.548kg/USD 에서 2024 년 0.486kg/USD 로 줄어 성장과 자원 소비의 탈동조화가 확인되었고,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21 년 기준 53.9%(UNEP 추정치)로 OECD 32 개국 중 3 위 수준이다. **[!] 유지노력 영역**은 전체 재활용률로 전체 재활용률은 77.7%(2024)로 높지만 2020 년부터 정체되어 있고, 2023 년부터 공표된 물질재활용률은 2023 년 68.5%에서 2024 년 67.4%로 감소하였다. **[X] 개선필요 영역**은 유해폐기물로 1 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첨단제조업 생산규모 확대,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2011 년 72.1 kg/인에서 2024 년 126.7kg/인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 가운데 재활용률도 2021 년(65.3%)에 정점을 기록한 후 정체되고 있는 반면, 매립률은 2021 년 이후 3 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2023 년 기준 물질재활용률(42.1%)은 OECD 평균(43.8%)을 밑돈다.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UN SDG Indicator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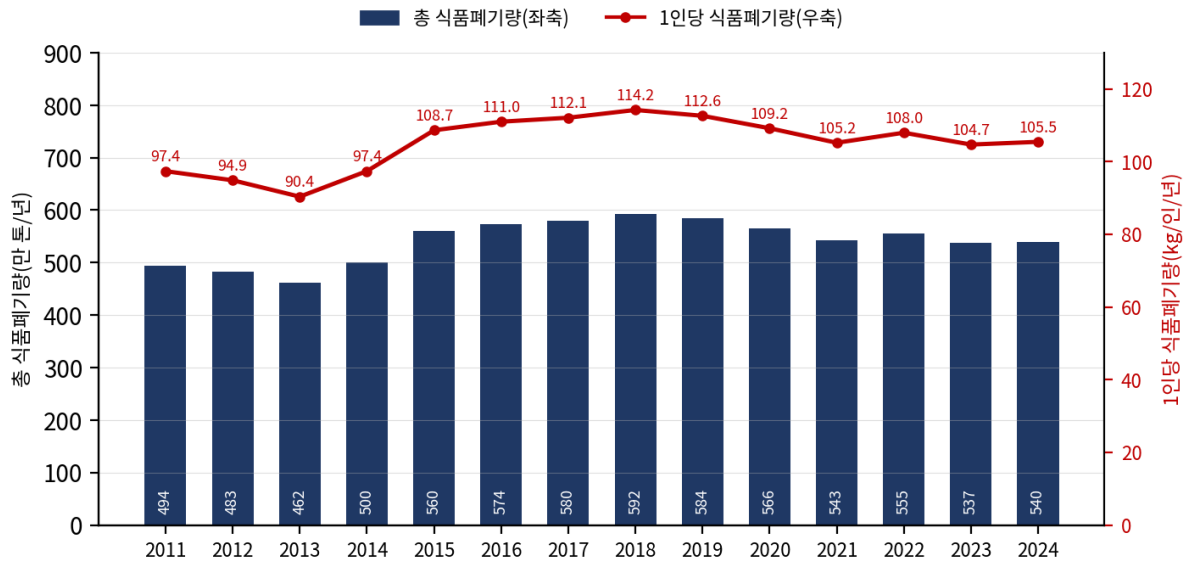
종합하면 자원 효율의 개선 추세는 뚜렷하나 재활용률이 정체되고 있어, 정책 과제는 재활용의 양적 확대에서 물질재활용 중심의 질적 전환으로 이동하고 있다.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성장과 소비의 탈동조화(12.2.2). 2017 년부터 2023 년까지 실질 GDP 가 18.5% 성장한 반면 국가자원소비량의 증가율은 3.6%에 그쳐 상대적 탈동조화가 나타났다. 1 인당 국가자원소비량(18.25 톤, 2024 UNEP 추정)은 OECD 평균(19.37 톤)보다 낮고, GDP 당 소비량(0.486kg/USD, 2024 UNEP 추정)은 OECD 평균(0.592kg/USD)보다 낮아 물질 사용의 경제적 효율이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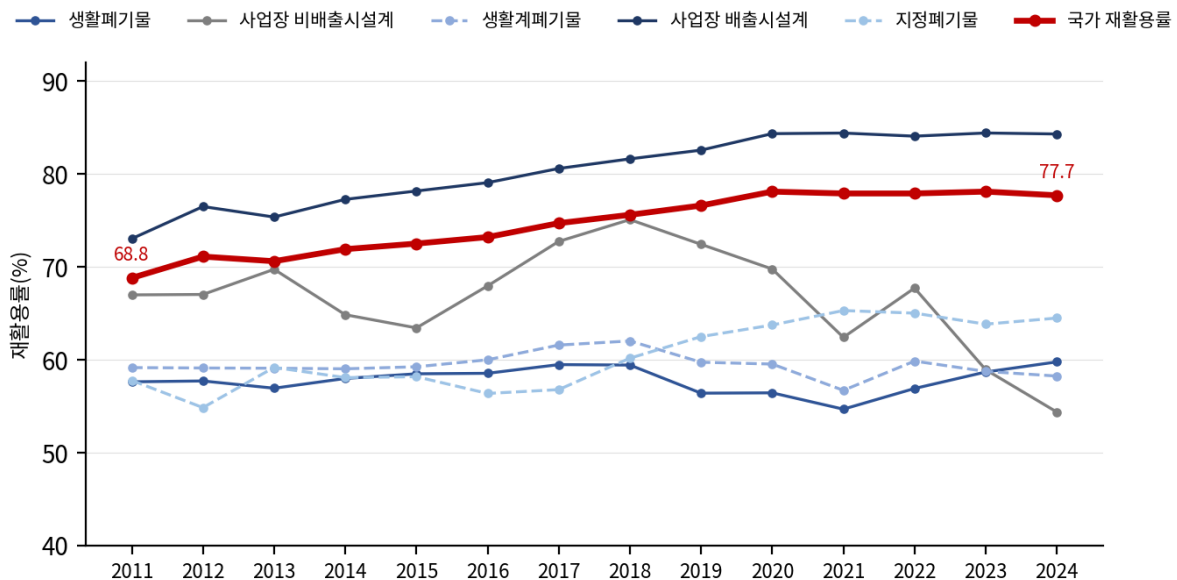
핵심 지표 ② 식품 폐기 감소 정체(12.3.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23 년 480 만 톤(91.1 kg/인)으로 2015 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가 2024 년 483 만 톤(91.68kg/인)으로 다시 소폭 상승하여 정체를 보인다. 비록 1990 년부터 시작된 감량정책과 종량제 도입, 2013 년 RFID 종량기기 도입 등 '버린 만큼 부담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OECD 평균값(136.6kg/인, 2022 UNEP 추정)보다는 낮은 수치(133.4kg/인)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감량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UN SDG Indicators Database].

본 보고서는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으로,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라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년)과 1인당 발생량(kg/인/년), 2011~2024년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6.8.1. 인출)

핵심 지표 ③ 세계 최상위 재활용과 측정의 진전(12.5.1). 생활·사업장·지정폐기물을 합산한 재활용률은 2024년 77.7%이고[KOSIS 국가통계포털], 도시폐기물 기준 재활용률은 OECD 32개국 중 3위이다(2021년 기준). 특히 2023년부터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분리한 통계가, 2025년에는 국가자원소비량이 국가승인통계로 공표되기 시작해 순환경제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할 데이터 기반이 갖춰졌다. 측정 체계의 개선도 이 목표의 성과에 해당한다.



[그림]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률과 국가 재활용률(2011~2024년)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6.8.1. 인출). 주: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포함한 재활용률이며 건설폐기물을 제외하고 산출.

구분(2024 년 기준)	전체 재활용률, %	물질재활용률, %	비고
전체 폐기물	77.7%	67.4%	2020 년부터 정체
생활계폐기물(발생 21%)	58.2%	46.1%	사업장 배출시설계 발생 폐기물보다 물질재활용 낮음
사업장 배출시설계(발생 73%)	84.3%	75.4%	물질재활용 최고
유해폐기물(발생 6%)	64.5%	42.3%	OECD 평균(43.8%) 하회

2023 년부터 도입한 재활용 분리통계를 통해 재활용의 양 뿐만 아니라 물질 순환의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18.6% 감량

배경: 인구 1 천만 규모의 서울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수거·처리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누적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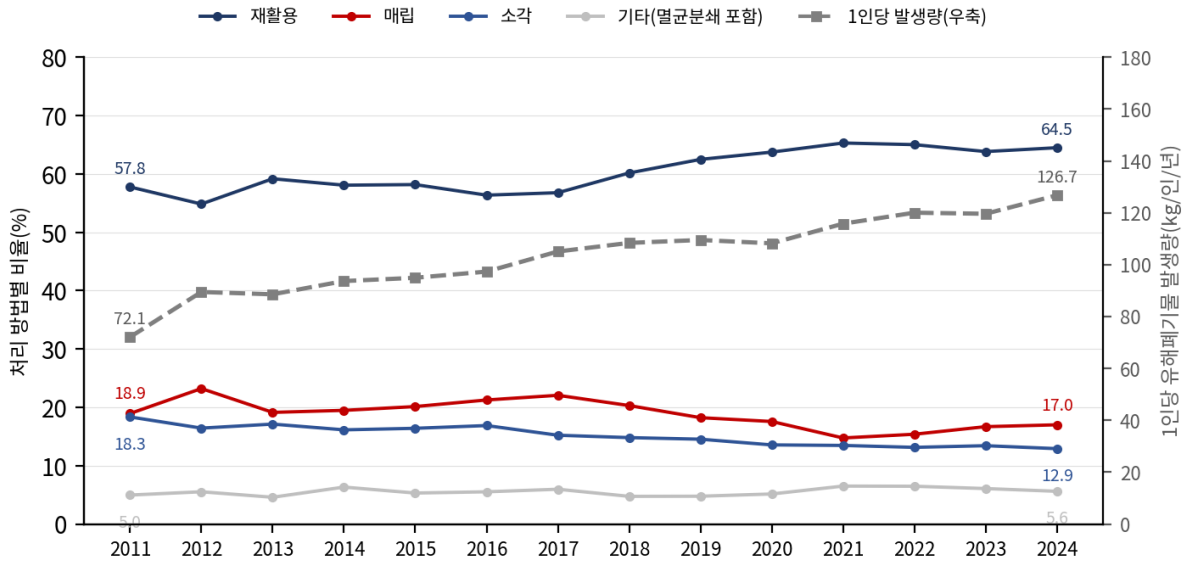
활동: 버린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 종량기기의 설치 확대, 가정·소형 음식점의 감량기와 탈수기 보급, 업종별 맞춤 감량 자문단 운영 — 가격 신호와 기술 지원, 컨설팅을 결합한 감량 정책이 축적되었다.

변화: 서울의 1 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2 년 대비 2024 년 21.7%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뚜렷한 감량을 기록했고, 2024 년 1 인당 발생량도 90.3 kg/인으로 전국 평균 93.6 kg을 크게 밑돈다.

시사점: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가 대도시의 소비 행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식품 폐기 감축(세부목표 12.3)을 고민하는 도시들과의 동료학습 소재다 — 남은 과제는 이 모델이 닿지 않은 농촌 지역(E)이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재활용률의 정체와 에너지회수 비중.** 전체 재활용률(77.7%)은 2020 년부터 증가를 멈췄고, 그중 10.3%p 는 물질로 되돌아가지 않는 에너지회수다. 특히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재활용률은 46.1%로 사업장 배출시설계(75.4%) 보다 낮아, 세계 최상위 수준의 분리배출 성과를 실제 물질 순환으로 연계하는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 **유해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첨단제조업생산규모 확대, 유해폐기물 관리 강화,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1 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13 년 사이 76% 늘어난(72.1→126.7 kg) 가운데 재활용률은 2021 년 이후 정체를 보이며, 매립률은 '21 년 이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등을 보였다. 2024 년 기준 물질재활용률(42.3%)이 OECD 평균을 밑돌아 순환경제 전환에 가장 약한 영역이다.



[그림] 유해폐기물의 처리 방법별 비율과 1인당 발생량(2011~2024년) —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6.8.1. 인출). 주: 유해폐기물에는 사업장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 포함.

- **식품 폐기의 도농 역전.** 2012년 대비 1인당 발생량은 시 지역에서 감소하거나 20% 이내에서 증가한 반면, 도 지역에서는 15~72% 증가하여 도시보다 농촌에서의 식량폐기 증가추세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광지역인 제주와 강원지역의 발생량은 각각 제주 96.3 kg/인, 강원 101.9 kg/인으로 전국 평균(93.6kg/인)을 웃돌아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한계를 드러낸다. RFID 중량기기 설치율과 감량 정책 실시율의 지역 차, 관광 체류인구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재활용의 지역 격차와 사각.** 생활계 폐기물 물질재활용률은 광주(59.5%)·서울(55.1%)·인천(52.2%)와 울산(29.8%)·대구(30.4%)·경북(37.7%) 사이에 두 배 이상의 격차가 있고, 학교·상업시설 등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분리배출 체계는 가정보다 촘촘하지 못하다.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발생비율이 높은 인천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55.7%인 반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재활용률은 46.9%에 그친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대상은 순환경제의 각 단계에서 부담이 집중되는 집단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지역의 주민은 도시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의 부담을 공간적으로 부담하며, 수거·선별·재활용 현장의 노동자는 순환경제의 실질적 수행 주체이면서도 작업 위험(SDG 8 상호참조)과 전환의 불확실성에 먼저 노출된다. **농촌 지역**은 식품 폐기 증가와 처리 인프라 부족이 겹치는 사각이며, 소규모 사업장과 소상공인에게는 순환경제 관련 규제 비용의 부담이 대기업보다 크다. 또한 오늘의 소비가 남기는 자원 고갈과 폐기물은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이다.

"재활용률 77.7% 가운데 물질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67.4%다 — 2023년부터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분리 공표하면서 순환경제 정책의 관리 기준이 명확해졌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자원 순환의 진전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온실가스 감축(SDG 13)과 해양·육상 오염의 저감(SDG 14·15)으로 이어지는 시너지가 크며, 음식물 폐기물 감축(세부목표 12.3)은 식량 시스템(SDG 2)의 효율을 함께 개선한다. 물 재이용(SDG 6)과 산업 공정의 자원 효율화(SDG 9)도 같은 방향의 연계다.

다만 순환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규제 이행 부담, 폐기물·재활용 산업 노동의 조건, 처리시설 입지 지역의 수용성이 공정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전환의 비용이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 물질재활용 중심의 질적 전환은 에너지회수의 위상 정립 등 에너지 정책(SDG 7)과의 조정을 함께 요구한다.

심층검토에서 제기할 논점: 첫째, 측정 체계의 정밀화 — 재활용 통계를 물질재활용과 에너지회수로 구분하면서 정책의 다음 과제가 확인된 한국의 경험은, 순환경제 지표의 국제 표준화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탈동조화의 다음 단계 — 상대적 탈동조화(GDP 당 감소)를 절대적 감축으로 잇는 경로 설계가 자원 다소비 제조업 국가들의 공통 과제라는 문제 제기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한국은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 논의에 참여하며 순환경제의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부산에서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협약 논의의 장을 제공한 바 있다. 종량제와 분리배출, 생산자책임재활용으로 이어진 30 년의 제도 경험과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기와 감량기 보급은 급증하는 폐기물 문제에 직면한 개도국 도시들과의 협력 자산이며, 폐기물 관리 ODA 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물질재활용 중심으로의 재편.** 한국의 뛰어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분리배출 체계를 바탕으로, 선별·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직매립금지 시행(2026) 등을 통해 기존 단순 매립되던 재활용가능자원도 회수 후 물질/화학적 재활용을 우선시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에너지회수 후 잔재물만 최종 처분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원칙을 공고화한다.
- **유해폐기물의 감축과 순환 복원.** 가파른 발생량 증가추세를 잡기 위해 공정 중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하며, 정제와 매립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업종별(화학 등) 물질재활용 기술·인프라 투자와 매립 저감 정책을 강화한다.

- **식품 폐기 절반 감축의 이행.** 세부목표 12.3(2030 년 1 인당 식품 폐기 절반 감축)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발생억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RFID 종량기기 보급 확대와 함께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감량유인을 확보한다. 또한 생산·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과채류, 조리 전 식재료 등)의 고품질사료자원화('25~)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플랫폼·식품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식품매장(음식점·마트·베이커리 등)에서 발생하는 판매 후 남은 제품, 소비기한 임박 식품 등 식품 재고 정보를 공유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플랫폼 기반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26.6~)'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순환 설계와 데이터의 완성.** 생산 단계의 순환 설계(재질 단순화·재생원료 사용)를 확대하고, 국가자원소비량·물질재활용 승인통계를 순환경제 정책의 상시 성과관리 체계로 정착시킨다.

참고문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https://kosis.kr>, 2026.8.11. 인출)

산업통상부, 「국가자원생산성지표」, 국가자원소비량(DMC) (<https://kosis.kr>, 2026.8.11. 인출)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6.2.12. 인출)

UNEP (1 인당 국내물질소비량 국제 추정치)

■ SDG 13 :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Goal 13 :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한국은 OECD 에서 다섯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국가로서, 기후 대응은 국제적 책임이자 산업구조 전환의 과제다. 지난 10 년(2016~2026)에는 감축이 시작된 한편 기후위기의 영향도 본격화되었다.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2018 년 배출 정점을 지나 감소 궤도에 올라섰으며, 2035 년 까지 순배출 53~61% 감축이라는 강화된 NDC 를 확정하고 파리협정이 요구하는 다섯 종의 보고 문서를 모두 제출했다.

같은 기간 기후위기의 영향은 통계로 확인되었다. 2024 년 여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전국 평균 25.6°C), 폭염 사망자는 두 해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했으며, 호우의 재산 피해는 2020 년대 들어 뚜렷이 늘었다. 이 목표의 과제는 감축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미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적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B. 핵심 진단 : 4 부문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개선중 영역 ← 온실가스 배출(13.2.2)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 기후재난 인명·재산 피해(13.1.1/11.5.2)	[X] 개선필요 영역

[^] 개선중 영역은 온실가스 배출로 총배출량(2022 년 7 억 2,429 만 톤)과 1 인당 배출량(14.0 톤)이 모두 OECD 5 위로 국제적 위치는 무겁지만, 2018 년 정점 이후 뚜렷한 감소 궤도에 있다(2023 년 7 억 720 만 톤, 정점 대비 -9.3%). GDP 가 성장하는 동안 배출이 줄어드는 탈동조화도 확인되었다. [!] 유지노력 영역은 기후재난 피해로 재난 사망률(2024 년 10 만 명당 0.24 명)과 GDP 대비 경제손실(2023 년 0.03%)은 OECD 에서 낮은 편이지만, 국내 추세는 명백한 악화다: 폭염 사망은 두 해 연속 역대 최고(85 명→108 명)를 경신했고 재산 피해는 2020 년 1 조 5,697 억 원(최고치) 이후 2022~2024 년 연 6,000~9,000 억 원대로 올라섰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OECD].

종합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전환의 신호와 기후재난 피해의 뚜렷한 증가가 병존하고 있어, 이 목표는 감축의 가속과 적응 체계의 강화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배출 정점을 지나 5 년째 개선(13.2.2). 2023 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 억 720 만 톤(CO₂eq)으로 전년 대비 2.1% 줄어, 정점(2018 년 7 억 8,014 만 톤) 대비 9.3% 감소했다. 실질 GDP 가 1.6% 성장하는 동안 배출이 줄어 GDP 당 배출량은 314.7 톤/10 억원으로 전년대비 3.6% 감소(2019 년부터 5 년 연속 감소), 2018 년 385 톤/10 억원 대비 18.3% 낮아졌다 — 성장과 배출의 탈동조화다. 총감축량 1,483 만 톤 중 70%는 전환 부문(-4.3%)이 이끌었는데, 원전·신재생 등 무탄소 발전의 확대가 그 동력이다. 건물 부문도 난방수요 감소로 -0.6%를 기록해 가장 높은 감축률을 보였다. 산림 등 흡수량도 4.1% 늘어 이를 반영한 2023 년 순배출량은 6 억 6,777 만 톤(-2.4%)이었다[2025 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핵심 지표 ② 강화된 목표와 완비된 보고 체계(13.2.1). 한국은 2035 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 년(7 억 4,230 만 톤) 대비 53~61% 감축하는 두 번째 NDC 를 2025 년 11 월 확정했다. 순배출량 기준 채택, 최신 산정 지침(2006 IPCC) 반영, 불확실성을 고려한 범위형 목표 제시가 특징이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50 탄소중립, 2020), 국가 적응계획(NAP, 제 3 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기후변화 적응보고서(ADCOM, 2023), 첫 격년투명성보고서(BTR, 2025.9) 제출까지 — 파리협정이 요구하는 다섯 종의 문서를 모두 갖춘 성실한 이행 당사국이다.

핵심 지표 ③ 낮게 관리되어 온 재난 손실(13.1.1/11.5.2). 예·경보 시스템의 발전으로 자연재난 실종·사망자는 1998 년 384 명(10 만 명당 0.82 명)에서 2004~2022 년 연간 최대 78 명(10 만 명당 0.15 명)까지 줄었고, GDP 대비 재난 경제손실 비율(0.03%, 2022 년)도 OECD 17 개국 중 10 위로 낮은 편이다 — 다만 2018 년부터 폭염 사망이 추가적으로 집계되기 시작하면서 이 성취는 새 위협 앞에서 다시 시험받고 있다(E).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파리협정 이행 보고체계의 완비

배경: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NDC 를 5 년마다 강화해 제출하고, 장기전략과 적응계획, 투명성 보고로 이행을 검증받는 상향식 체제를 도입하였다.

활동: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전략(2020), 2030 NDC(2021),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보고서(2023), 제 3 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이어 2025 년 첫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제출하고, 같은 해 2035 NDC 를 확정했다 — 순배출 기준과 범위형 목표라는 산정 체계의 고도화를 담았다.

변화: 파리협정이 요구·권고하는 5 종의 핵심 문서를 모두 갖춘 국가가 되었고, 감축 목표는 2030 년 40%에서 2035 년 53~61%로 상향되는 경로에 올랐다. 국내적으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이 약속의 법적 기반을 이룬다.

시사점: 투명성 체계에의 성실한 참여는 그 자체가 국제 신뢰 자산이며, 산정 체계 고도화의 경험은 BTR 작성 역량이 필요한 개도국(13.b)과의 협력 소재가 된다. 남은 과제는 이행의 속도다(E-I).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폭염 피해의 확대.** 폭염 실종·사망자는 2023 년 85 명, 2024 년 108 명으로 두 해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했고, 2018~2024 년 자연재난 인명 피해의 평균 68.7%가 폭염이었다. 2024 년 여름은 1973 년 관측 이래 가장 더웠고(25.6°C), 열대야 일수는 역대 1 위(20.2 일)였다. 2015 년 이래 없던 대설 사망(7 명, 2024 년)까지 발생하는 등 재난의 양상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 **산업 부문의 감축 정체.** 총배출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산업부문 감축률은 제 1 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제시된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해 왔으나, 총배출 비중이 가장 커서 2035 년 53~61% 목표 달성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 **불어나는 재산 피해.** 자연재난 재산 피해는 2015~2019 년 연 3,000 억 원대 이하였으나 2020 년 1 조 5,697 억 원(최고치)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2~2024 년에도 매년 6,000 억~9,000 억 원대로 올라섰고(2024 년 9,107 억 원), 그 중 60.5%가 호우다. 집중호우의 강도·빈도 증가에 대비한 물 인프라와 시설 안전이 과제다(SDG 6·11 상호참조).
- **재난의 지역 편차.** 2024 년 폭염일수는 밀양·합천이 49 일에 달한 반면, 대관령·백령도는 0 일로 극명하게 갈렸고, 서울의 열대야(39 일, 역대 1 위)는 도시 열섬의 심화를 보여준다. 전국 평균으로는 잡히지 않는 지역별 위험에 맞춘 적응이 필요하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기후위기의 영향은 집단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노인과 농업·건설 현장의 야외 노동자는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집단이며, 에너지 빈곤 가구는 냉방 비용 부담으로 대응에 제약을 받는다(SDG 7 상호참조). 반지하와 노후 주택의 **재난 취약 주거 거주자**에게 집중호우는 생존의 문제이며(SDG 11 상호참조), 고령화된 **농촌 지역**은 폭염 일수가 가장 긴 곳이자 대응 인프라가 가장 얇은 곳이다. 감축 측면에서는 석탄발전 지역의 노동자가 전환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적응과 감축 모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이 기후 정책의 핵심 과제다.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24년 여름 폭염 사망자는 10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피해는 노인과 야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감축의 최대 과제인 산업 부문의 탈탄소는 에너지 전환(SDG 7)과 산업 재편(SDG 9)을 거쳐 고용(SDG 8)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쇄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 전환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의 설계 — 이 2035 NDC 이행의 사회적 조건이다.

적응 영역에서는 재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구조(SDG 10)로 인해 기후 정책과 사회 정책의 결합이 요구된다. 폭염의 건강 영향(SDG 3), 호우와 물 인프라(SDG 6), 도시 열섬과 재난 대응(SDG 11), 식량 생산의 변동(SDG 2), 산림 흡수원과 생태계 기반 적응(SDG 14·15)은 기후 대응의 성과가 각 부문 정책에 나뉘어 있음을 보여준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개도국 기후 재원의 국제 거점을 제공하고(13.a, SDG 17 상호참조), 그린 ODA와 P4G 등 다자 플랫폼을 통해 개도국의 감축·적응 역량 강화(13.b)를 지원한다. 산정 체계를 고도화하며 첫 BTR을 제출한 투명성 이행 경험은 같은 의무를 앞둔 개도국들과의 실용적 협력 소재이며, 기후 재난 예·경보와 폭염 대응의 경험도 아시아 지역 협력의 자산이다. 기후 파트너십은 이 목표의 대외적 실천이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산업 부문 감축의 본격화.** 2035 NDC(53~61%) 달성의 핵심 부문인 산업 부문의 감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탈탄소 기술 투자·전환 지원을 집중하되, 고용·지역 충격의 공정한 관리를 병행한다.
- **폭염 적응의 체계화.** 노인·야외 노동자·농민 등 취약계층 중심의 폭염 보호 체계(작업 중지·쉼터·방문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 열섬과 지역별 위험 편차를 반영한 맞춤형 적응을 확산한다.

- **호우 시대의 인프라.** 재산 피해의 60.5%를 차지하는 호우에 대비해 물 인프라 정비와 재난 취약 주거의 안전을 강화한다(SDG 6·11 연계).
- **이행의 투명한 점검.** BTR 주기에 맞춘 부문별 감축 이행 점검을 정착시키고, 기후 재난 피해의 취약집단별 세분화 통계를 구축하여 적응 정책의 표적을 정밀화한다.

참고문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5 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https://www.gir.go.kr>, 2025.12.26. 인출)
행정안전부, 2024 재해연보; 기상청 (여름철 기온·폭염·열대야 통계)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관계부처 합동, 2025,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20,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LT-LEDS)
OECD,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2026.2.8. 인출)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11.6. 인출)

■ SDG 14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Goal 14 :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한국 바다는 지금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바다 자체의 물리적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관리 기준의 변화다. 물리적으로 해역 표층수의 산성화가 꾸준히 진행되는 가운데 수온까지 오르면서, 방어·삼치 같은 난류성 어종은 늘고 살오징어·멸치 같은 대중 어종은 줄어드는 어종 지도의 재편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해안쓰레기의 높은 비중을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해양 오염의 성격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연근해 자원량 감소와 어업 생산 위축으로 이어지는 생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관리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30x30 목표(2030 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0% 확보)와 BBNJ 협정 발효로 해양 보전은 국내 관리의 문제를 넘어 국제 규범 이행의 문제가 되었다. 지난 10 년(2016~2026) 한국은 이 흐름에 대응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확대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했으며, 2026 년 7 월에는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2 단계로 확대 등재되고 동아시아 최초로 BBNJ 협정을 비준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해양보호구역(MPA) 지정은 OECD 평균 대비 미진하여, 지정 확대와 관리 역량 강화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2028 년 부산에서 SDG14 이행 점검을 핵심 의제로 하는 제 4 차 유엔해양총회(UNOC-4)를 공동 개최하게 되어, 지난 10 년간의 제도적 축적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남은 과제를 짚어야 할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 목표의 과제는 변화하는 해양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과, 그 변화에 따른 비용이 어업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B. 핵심 진단 : 4 부문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불법어업 근절(14.6.1)	[^] 개선중 영역 ← 해양 보호지역(14.5.1)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 수산자원 변동(14.4.1)	[X] 개선필요 영역

[+] 양호·개선 영역은 불법어업 근절로 IUU 국제 규범 이행 수준은 2018 년 5 점 만점을 받았고, 원양어선 IUU 는 2022 년부터 한 건도 없으며, 국내 불법어업 단속도 1,953 건(2020)에서 931 건(2024)으로 줄었다[국가데이터처, 2026]. **[^] 개선중 영역**으로 해양 보호지역으로 해양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중 보호지역 비율(42.95%)이 OECD 32 개국 중 26 위로 평균(64.86%)에 미달하고[2026 이행보고서] 해양 면적 대비 비율은 2.58%(27 위)에 그치지만[UNEP-WCMC,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https://www.protectedplanet.net/en/thematic-areas/wdpa?tab=WDPA>, 2026.8.7. 인출)], 증가 속도(2004~2024 년 +15.35%p)는 OECD 평균(+16.44%p)과 비슷하다[국가데이터처, 2026]. **[!] 유지노력 영역**은 수산자원 변동이다. 북서태평양 해역의 지속가능 어업자원 비율이 90.0%(2004)에서 63.0%(2021)로 같은 기간 전 세계 비율 76.4%(2004)에서 64.5%(2021)에 비해 급감했고, 연근해 생산량은 2000 년대 116 만 톤에서 2024 년 84 만 톤으로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국가데이터처, 2026].

종합하면 국제 규범의 준수는 앞서가지만 보호지역의 확충과 실질적 생태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이행의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어, 정책 과제는 규범의 이행에서 자원과 생태계의 실질적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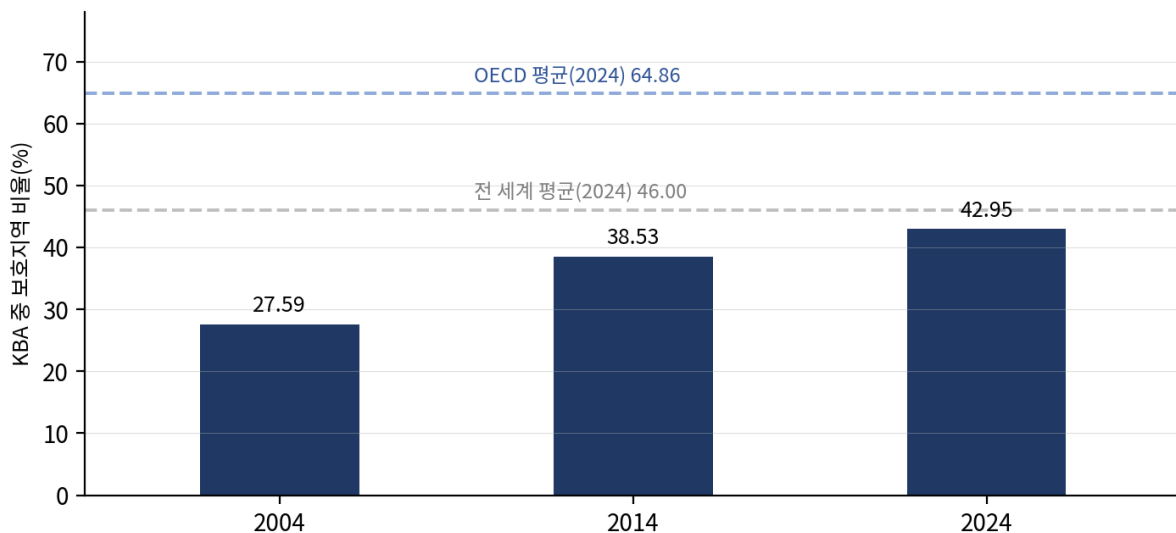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불법어업의 현저한 감소(14.6.1).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규범 이행 수준은 2018 년 5 점 만점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원양어선의 IUU 어업은 2022 년 이래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내 연근해 불법어업 단속은 2020 년 1,953 건에서 2024 년 931 건으로 줄었고, 외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도 2015 년 378 건에서 2020 년 이후 연 70 건 미만으로 급감했다[해양수산부, 연근해 불법 어업 단속 현황, (<https://www.mof.go.kr>, 2026.2.26. 인출); 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https://www.index.go.kr>, 2026.2.26. 인출)].

핵심 지표 ② 자원 관리 제도의 확대(14.4.1).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1999 년 4 개 어종·2 개 업종에서 2026/2027 년 19 개 어종·23 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6.30.)]. TAC 관리 대상종의 어획 비율을 2017 년 25%에서 2030 년 90%로 높이는 목표[해양수산부(2026.2.) 제 4 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 아래, 2017 년 304 만 톤의 연근해 자원량을 2031 년까지 최대지속가능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량(503 만 톤)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2026.6.)됨에 따라, 2030 년 7 월부터는 전체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TAC 를 확대할 예정이며, 소규모 어업인을 포함한 현장의 제도 수용성을 고려하여 준비(1 단계)-연습(2 단계)-정착(3 단계)의 단계별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지표 ③ 해양 보호와 국제 규범의 진전(14.5.1/14.c.1). 해양 KBA 중 보호지역 비율은 2004 년 27.59%에서 2024 년 42.95%로 점진적으로 늘었고(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9.18. 인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해양수산부, 2024.4)'에 따라 2025 년과 2026 년 연달아 1 천㎢ 이상 신규 해양보호구역을 1 개소씩 지정했다. 공해·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BBNJ 협정에는 2025 년 3 월 동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21 번째로 비준했다(협정은 2026 년 1 월 발효)[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3.20.)].



[그림] 해양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중 보호지역 비율 추이(2004-2014-2024 년) — 출처: UN SDG Indicators Database;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p. 148.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공해를 지키는 약속에 가장 먼저 서명하다 — BBNJ 비준

배경: 지구 바다의 64%는 어느 나라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公海)이며, 오랫동안 이 넓은 바다를 체계적으로 지킬 국제 규범이 없었다. 유전자원·보호구역·환경영향평가의 공백이 방치되어 왔다.

활동: 2023 년 6 월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BBNJ 협정이 채택되자, 한국은 2023 년 10 월 서명하고 2025 년 3 월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 전 세계 21 번째로 비준했다. 현재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을 준비 중이다.

변화: 협정은 2025 년 9 월 60 번째 비준으로 발효 요건을 채워 2026 년 1 월 발효되었다. 이제 여러 나라가 협력해 공해와 심해저까지 보호 범위를 넓힐 국제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시사점: 자국 연안을 넘어 지구 공유지(global commons)의 보전에 참여한 선제적 기준은 해양 다자주의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보여주는 사례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낮은 해양 보호지역 — OECD 하위권.** 해양 KBA 보호 비율(42.95%, 32 개국 중 26 위)은 OECD 평균(64.86%)에 크게 못 미치고, 해양 면적 대비 보호지역 비율은 2.58%로 육상(18.28%)보다도 낮은 27 위다. 이는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신규 보호구역의 지정이 기존 어업 활동 및 신규 해상풍력과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야 하고 지정 이후에도 관리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구조적 제약에 따른 결과다. 생물다양성협약의 2030 년 30% 목표까지의 거리가 멀다.
-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구성의 변화.** 살오징어는 2000 년대 중반 연 20 만 톤에서 2024 년 1 만 4 천 톤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멸치도 19 만 톤대에서 12 만 톤으로 줄었다. 반면 방어·삼치 등 난류성 어종은 늘어, 기후변화가 어종 구성 자체를 바꾸고 있다.
- **연근해 자원의 회복 지연.**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0 년대 연 151 만 톤에서 2020 년대 91 만 톤, 2024 년 84 만 톤으로 역대 최저다. 자원량 지수가 1990 년대 중반 이후 낮은 수준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남획으로 이미 줄어든 자원 기반 위에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 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회복 자체가 구조적으로 더뎠기 때문이다.
- **북서태평양의 공동 과제.** 한·중·일·러가 공유하는 북서태평양 해역의 지속가능 어업자원 비율은 90.0%(2004)에서 63.0%(2021)로 급감했다. 회유성 어종의 특성상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국제 공동관리가 절실하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는 두 가지 축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제도 이행 부담의 형평**이고, 다른 하나는 **자원·어업권 접근성의 형평**이다.

첫째, 제도 이행 부담의 축이다. TAC 등 관리 제도는 근해어업(10 톤 이상)에 비해 연안어업(10 톤 미만)의 영세한 개별·소형 어선업자가 상대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적어, 정부는 준비-연습-정착 3 단계로 순차 적용하며 이를 배려하고 있다. 이는 자원 관리 강화가 소규모 어업인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둘째, 자원·어업권 접근성의 축이다. 이는 경영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어업권 자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집단의 문제다. 어촌계 가입은 마을어장 접근의 전제조건인데, 전국 어촌계의 약 59%가 가입금·최소 거주기간 등 자격 요건을 두고 있어(가입금 100~300 만 원대가 가장 많고, 지역에 따라 역대 사례도 있음) 청년 귀어인이나 외부 정착 희망자에게는 실질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2026 년

「제 3 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서 어촌계 가입요건을 '가입 후 공동체 활동 의무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방성 제고를 추진 중이다. 같은 축에서, 내국인 선원의 고령화와 이탈 속에 2024 년 외국인 어선원(3 만 2,521 명)이 내국인(2 만 8,731 명)을 처음으로 넘어서며 어업의 실질적 노동력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여전히 사각에 있다. 약 5 만 명의 여성 어업인 역시 어로·양식 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에서 실질적 역할(추정 노동가치 연 4 조 4 천억 원)을 하면서도 그 기여가 통계와 정책에서 저평가되어 왔다.

이 밖에 대중 어종의 어획량 급감은 수산 가공·유통 종사자와 어업에 의존하는 어촌 고령 주민의 생계 기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도 이행의 부담과 접근의 격차 모두에서 그 비용이 취약 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해양 전환의 과제다.

"2024 년 외국인 어선원(3 만 2,521 명)이 내국인(2 만 8,731 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 어업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선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근로조건 개선은 과제로 남아 있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SDG 14 와 SDG 7(에너지)은 해양 공간을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구체적으로 충돌한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지정 대상이 연안에서 원거리 해역으로 옮겨 가고 있으나, 원거리 해역의 지정은 아직 초기 단계로 사례가 많지 않다. 한편 정부는 2030 년까지 해상풍력 보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어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원거리 해역을 포함한 여러 해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해양보호구역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원거리 해역에서 보호구역 후보지와 해상풍력 예정지가 겹칠 경우 해상풍력 예정지를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원거리 해역으로의 보호구역 확대를 더디게 할 우려가 있다. 결국 SDG 14(해양보호구역 확대)와 SDG 7.13(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후 대응)이 같은 해역을 두고 경합할 수 있는 구조로,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면 국가 해양공간계획을 통해 보호구역과 재생에너지 입지의 우선순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자원 관리의 강화와 식량·고용의 안정성 사이에도 단기 부담과 장기 시너지가 공존한다. TAC 확대와 어선 감척(14.4)은 단기적으로 소규모 어업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SDG 8(양질의 일자리)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원량이 최대지속가능생산량 수준으로 회복되면 안정적인 어획량 확보를 통해 SDG 2(식량안보)의 기반이 튼튼해진다. 정의로운 전환 차원의 소득 지원(F 참조)은 이 단기 부담을 완충하는 장치이자, SDG 14 와 SDG 2.8 의 시너지를 현실화하는 조건이다.

한편 갯벌·해조류숲과 같은 연안 생태계는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blue carbon)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갯벌 보전과 해양보호구역 확대(14.5)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넘어 SDG 13(기후행동)의 잠재적 감축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갯벌은 아직 IPCC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상 블루카본으로 공식 인증되지 않아, 실제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흡수량 측정·검증 방법론의 국제적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한국은 BBNJ 협정의 선제적 비준(동아시아 최초·세계 21 번째)으로 공해 보전의 국제 규범 형성에 앞장섰으며(14.c),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 규범(UNCLOS-PSMA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책임 있는 어업국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 ODA 를 통해 개도국·군소도서국의 수산자원 관리와 해양기술 역량 강화(14.a)를 지원하고, 북서태평양 공유 자원의 공동관리를 위한 역내 협력에 참여한다. 해양 파트너십은 이 목표의 대외적 실천이다.

SDG14 는 목표 문안 자체에 군소도서개발국(SIDS)을 명시하고 있다. 14.a 는 해양기술 이전에서 SIDS·최빈국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두며 14.7 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한 이들 국가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한국은 SIDS 가 아니지만 이 목표가 SIDS 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ODA 를 통한 기여가 곧 SDG14 이행의 일부다. 이는 「제 4 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26)이 강조하는 글로벌사우스 성장 지원 및 호혜적 파트너십 강화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키리바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 커뮤니티 개발을 비롯해 투발루 어촌특화개발사업, 사모아 기후변화대응 해양산성화 관측 고도화, 통가·바누아투·피지 대상 해양플라스틱 오염 저감사업 등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하면서도 대응 역량이 가장 제한적인 태평양도서국을 직접 겨냥한 지원이다.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사업은 어업 가치사슬에서 실질적이지만 저평가되어 온 여성의 역할을 개선하려는 시도다. 탄자니아 해양수산 위성활용센터 설립 지원은 한국이 보유한 해양 원격탐사·위성활용 기술을 개도국의 자원관리 역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자금 지원을 넘어선 기술 파트너십의 모델을 보여준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과 생물다양성협약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2030 년까지 30%로 늘리고, BBNJ 이행 국내 법령을 정비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의 관리를 뒷받침할 인력·예산을 함께 확충한다.
- **수산자원의 회복.** TAC 관리 대상 어획 비율을 2030 년 90%로 확대하고, 전자모니터링(EM) 도입과 미성어 보호로 연근해 자원량을 최대지속가능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자원량(503 만 톤) 수준으로 회복한다.
- **정의로운 수산 전환.** 자원 관리 강화와 감척 과정에서 소규모·영세 어업인의 소득과 어촌 공동체를 보호하는 지원을 병행한다.

- **기후 대응형 해양 관리.** 수온 상승에 따른 어종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자원 분포에 맞춘 적응적 어업 관리와 국제 공동관리를 강화한다(SDG 13 연계). 북서태평양 등 회유성 어종을 공유하는 해역에서는 한·중·일·러 등 역내 국가와의 공동관리를 강화한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26.2.26.), 제 4 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황(<https://www.index.go.kr>, 2026.2.26. 인출)
해양수산부, 연근해 불법 어업 단속 현황(<https://www.mof.go.kr>, 2026.2.26. 인출)
해양수산부(2023.12), 제 3 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
해양수산부(2024.4.),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해양수산부(2026.2.), 제 3 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해양수산부(2026.2.), 제 4 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3.20.), 한국 정부, 유엔에 「공해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비준서 기탁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6.6.30.), 내일도 풍요로운 바다를 위해, '26/'27 총허용어획량(TAC) 총 62 만 톤 확정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9.18. 인출)
UNEP-WCMC,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2026.8.7. 인출)

■ SDG 15 : 육상 생태계의 보호·복원·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토지황폐화 방지,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Goal 15 :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 halt biodiversity loss)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국토의 약 63%가 산림인 한국은 20 세기 후반 대규모 산림복구를 통해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러한 산림복구 경험은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의 회복 뿐만 아니라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다.

최근 산림정책의 과제는 이러한 산림복구 성과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적 연결성 확보 및 효과적인 보전지역 관리로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채택과 2030 년까지 육상·해양의 30%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는 30by30 목표에 따라 보호지역 뿐 아니라 OECM 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SDG 15.1.2 및 15.4.1 은 이러한 정책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생물다양성 핵심지역(Key Biodiversity Areas, KBA)이 보호지역과 얼마나 공간적으로 중첩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국제적으로도 KBA 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식별하고 공간보전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 지표는 생태계의 건전성이나 생물다양성의 질적 상태 자체를 직접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다. 따라서 KBA 중첩률과 함께 종·서식지 상태, 생태적 연결성, 관리효과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B. 핵심 진단 : 4 분면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생물다양성 주류화(15.9)-ODA(15.a)	[^] 개선중 영역 ← 자연자본·생태계 계정 및 모니터링 고도화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 제도적 기반의 현장적용 강화	[X] 개선필요 영역 ← KBA 의 보호지역 중첩률(15.1.2)

[+] 양호·개선은 생물다양성 주류화와 ODA 이다. 한국은 제 5 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자연자본·생태계 계정 구축을 추진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정책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ODA 역시 확대되고 있어 국제적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기여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KBA 와 보호지역·OECD 간 공간적 중첩률은 육상·담수·산악 생태계에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을 중심으로 보호지역의 대표성과 연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KBA 중첩률은 국가별 KBA 의 발굴·등재 범위 및 공간분포에 영향을 받으며, UN 도 많은 국가에서 KBA 가 아직 일부만 확인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OECD 평균과의 차이를 국가 간 생물다양성 보전성과의 직접적인 격차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생물다양성의 제도적 주류화(15.9.1). 한국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라 제 5 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3)에서 '사회 전 분야에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하는 실천 목표를 세우고,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기반의 국가 자연자본 계정과 생태계 계정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보호지출·환경조세 계정은 이미 이행 중이며, 물 계정(2024)과 생태계 계정(2025) 구축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자연을 국가 회계에 반영하는 흐름에 한국도 합류하고 있다.

핵심 지표 생물다양성 ODA 의 확대(15.a.1). 생물다양성 관련 ODA 는 2023 년 3 억 6,792 만 달러 수준으로 최근 3 년간 크게 늘었고, 2022~2023 년 양자 ODA 중 생물다양성 관련 비율은 약 7.2%에 달했다. 생물다양성 ODA 의 확대는 국제적 생물다양성 보전과 GBF 이행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에는 사업의 양적 확대와 함께 생물다양성 개선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 — 산림녹화의 성과라는 출발점. 이 목표의 평가를 위해서는 출발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20 세기 중반 전쟁으로 헐벗은 국토를 반세기 만에 숲으로 되돌린, 세계가 드물게 인정하는 국토녹화 성공국이다. 산림 면적과 임목축적은 세계적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이 경험 자체가 개도국 조림·산림 복원 협력의 자산이 되고 있다.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자연을 국가의 장부에 올리다 — 자연자본 계정과 생물다양성 주류화

배경: 숲과 강, 생태계가 주는 가치는 오랫동안 경제 통계 바깥에 있었다. 장부에 없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기 쉽다 — 생물다양성 손실의 구조적 원인이다.

활동: 한국은 GBF 실천 목표에 발맞춰 제 5 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3)을 수립하고, 유엔이 채택한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기반으로 자연자본·생태계 계정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환경보호지출·환경조세 계정 이행에 이어 물·생태계 계정 연구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변화: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법정 계획과 국가 회계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SEEA 를 부분 이행하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2014 년 54 개국에서 2024 년 94 개국으로 늘어난 흐름에 한국도 참여하게 되었다.

시사점: 자연자본·생태계 계정 구축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이러한 제도적 진전을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모니터링과 연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산림녹화를 통해 축적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의 보전, 서식지 연결성 확보 및 효과적인 관리 등 생태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산림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악 KBA 보호지역 중첩률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KBA 의 공간적 분포, 국내 보호지역 체계, 토지이용 특성 및 국가별 KBA 발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의 보전 대표성 제고.** 우리나라 KBA 와 보호지역 간 중첩률은 국제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향후에는 단순한 보호지역 면적 확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의 대표성, 연결성 및 관리효과성을 함께 고려한 공간보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은 OECM 등 다양한 보전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산악 생태계에 대한 공간보전 강화.** 산악 KBA 보호 비율은 다른 생태계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보호지역과 OECM 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호지역 간 연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산악 KBA 중첩률의 정체가 산악생태계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 상태지표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지정에서 효과적인 관리로.** GBF의 공간보전 정책은 면적 확대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보전과 관리를 강조한다. 따라서 보호지역과 OECM의 확대와 함께 보전목표 설정, 관리효과성 평가, 생태계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성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압력 — 외래종과 기후.**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이동과 외래침입종의 유입은 국내 생물다양성에 새로운 압력을 더한다. 멸종위기종 보호(적색목록)와 외래종 관리가 보호지역 확대와 함께 다뤄져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대상에는 지역사회와 생물종이 함께 포함된다.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의 편익·부담이 엇갈리는 **보호지역 인근의 지역사회**는 규제와 생계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한 당사자이며, '2030 로드맵'이 지역사회 상생을 전략으로 삼은 이유다. **산림·산촌에 생계를 의존하는 주민과 고령화된 임업 종사자**는 산림 정책의 전환에서 소외되기 쉽다. 멸종위기종은 스스로 이해를 대변할 수 없는 보호 대상이다. 국제적으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면서도 그 손실이 집중되는 개도국의 생태계와 원주민 공동체가 생물다양성 ODA(15.a)의 주요 대상이다. 오늘의 생물다양성 손실은 미래 세대에 이전되는 자연자본의 감소이기도 하다.

측정의 관점에서 이 목표의 LNOB는 '보이지 않는 종'의 문제다. 멸종위기종의 상태, 서식지의 연결성, 외래종의 영향 같은 질적 지표는 보호구역 면적 같은 양적 지표보다 측정이 어렵고 데이터가 성글다. 자연자본·생태계 계정의 구축(D)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다 — 세분화·질적 지표의 확충이 이 목표의 향후 과제(I)이자 보고서 전체의 데이터 과제와 이어진다.

"산악 KBA의 보호지역 지정 비율은 20.21%로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며, 산촌·임업 주민과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가 가장 지연되고 있는 영역이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이 줄어들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곧바로 부담이 되므로(SDG 13), 보호지역 확대와 흡수원 관리는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기후 정책의 실행 수단이기도 하다. 반면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OECM)의 확대는 개발 압력이 높은 국토에서 농지·산업용지의 확보(SDG 2)와 경합할 수 있어, 지역 단위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 도시에서는 생태축·도시숲의 복원이 열섬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도시(SDG 11)의 주민 체감 편익과 직결된다. 국제적으로는 생물다양성 ODA의 확대가 개도국의 GBF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SDG 17), 해양(SDG 14)과는 보호지역 지정 지표(KBA)를 공유하는 만큼 육상·해양 보호구역 정책을 함께 설계할 때 시너지가 커진다.

심층검토에서 제기할 논점: 첫째, 양과 질의 괴리 — 산림 면적(양)의 회복이 생물다양성 보호(질)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는 한국의 경험은, 녹화·조림 중심 정책을 펴는 국가들에 유효한 교훈이다. 둘째, 자연자본 회계 — 자연을 국가 장부에 올리는 SEEA 이행 경험은 GBF 목표 14(주류화)의 국제 이행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은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에 대응하는 개도국에 실증된 참조 사례다. 몽골 등지의 사막화 방지 조림 협력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한 역내 산림 협력은 산림 복원 경험을 공유하는 대표적 기여이며, AFoCO 사무국을 서울에 두어 아시아 산림 협력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급증한 생물다양성 ODA(2023 년 3.7 억 달러, DAC 7 위)는 개도국의 생태계 보전·복원을 지원한다(15.a·15.b, SDG 17 상호참조). 나고야의정서(유전자원 이익 공유)와 GBF 이행에 참여하며 생물다양성의 국제 규범 형성에도 함께하고 있다. 생태 파트너십은 이 목표의 대외적 실천이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생물다양성 중요지역 중심의 공간보전 강화.**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과 연계하여 보호지역과 OECM 을 지속 확대하되, 단순한 면적 확대를 넘어 KBA 등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의 대표성과 보호지역 간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한 공간보전 체계를 구축한다.
- **면적에서 관리효과성까지.** 보호지역과 OECM 의 확대와 함께 보전목표 설정, 관리계획, 모니터링 및 관리효과성 평가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성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 **제도에서 현장으로.** 자연자본 계정·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는 제도적 진전을 실제 서식지 복원과 멸종위기종 보호로 연결하고,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함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 **지역사회 상생형 보전.** 보호지역 확대가 인근 지역사회의 생계와 상생하도록 인센티브와 참여 구조를 설계하여, 정의로운 방식으로 보전을 확대한다.
- **생물다양성 ODA 의 질 제고.** 양적으로 확대된 생물다양성 ODA 가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발굴과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15.a).
- **모니터링과 회계의 완성.** 자연자본·생태계 계정의 이행을 완성하고, 멸종위기종·외래종·서식지 상태를 추적하는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여 양적·질적 성과를 함께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참고문헌

환경부, 2023, 제 5 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3,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국가데이터처, SDG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sdg>, 2025.8.20. 인출);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8.20. 인출)

UN Statistical Commission, 2025, Results of the 2024 Global Assessment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생물다양성 관련 ODA)

■ SDG 16 :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 보장,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포용적 제도 구축

(Goal 16 :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한국은 전쟁과 분단, 권위주의를 거쳐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확립해 왔으며, SDG 16은 이러한 경험과 현재의 과제를 함께 담는 목표다.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 경험은 이 목표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다. 지난 10년(2016~2026)의 제도적 성취도 뚜렷하다. 청탁금지법(2016)은 부패 경험률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었고, 국가기관의 대국민 소통은 개선되었으며, 인신매매방지법(2021) 제정으로 보호의 법제가 갖춰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민의 정치 효능감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제도의 청렴성 개선이 제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목표의 과제는 제도 개선의 성과가 모든 시민, 특히 여성과 저학력·저소득층의 신뢰와 참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B. 핵심 진단 : 4 부문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부패 감소(16.5)·낮은 살인율(16.1.1)·소통 개선(16.7.2)·디지털정부·규제정책 세계 1위(16.6)	[^] 개선중 영역
정체·악화	[!] 유지노력 영역 ← 정치 효능감 하락·취약계층 대상 범죄	[X] 개선필요 영역

[+] 양호·개선 영역은 청렴과 안전이다.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 경험률은 0.49%(2025)로 사상 최저 수준이고, 살인범죄 발생비(0.48 명/10 만 명, 2023)는 OECD 에서 두 번째로 낮으며, 의사결정이 포용적이라고 믿는 인구 비율(38.7%)은 OECD 35 개국 중 8 위로 영국·프랑스·독일보다 높다. 디지털·규제 거버넌스(16.6)도 같은 성과 영역이다 — OECD 디지털정부평가(DGI)에서 2019-2023-2026 년 3 회 연속 종합 1 위를 기록했고, 2024 년 규제정책평가(iREG)에서 2015 년 평가 시작 이후 처음으로 3 개 분야 중 2 개 분야(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와 투명성 지표에서 38 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I] 유지노력 영역은 정치 효능감**이다. 5점 만점에 2.9점까지 올랐던 효능감이 2024년 2.5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여성과 저학력·저소득층에서 일관되게 낮다. 살인의 감소세 정체(2021년 이후 0.54건)와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인신매매 대응의 사각도 같은 영역의 경고다[국민권익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경찰청; UN SDG Indicators Database].

종합하면 청렴과 안전 등 객관적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정치 효능감 등 제도에 대한 주관적 신뢰는 낮은 수준이어서, 이 목표의 과제는 제도의 정비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의 회복으로 이동하고 있다.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부패 경험률의 현저한 감소(16.5.1/16.5.2). 일반 국민의 공공기관 부패 경험률은 청탁금지법 시행(2016) 이후 현저히 줄어 2025년 0.49%다. 사업체 종사자의 부패 경험률은 2000년 약 25%에서 2023년 1.6%로 떨어졌고, 금품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36.4%에서 9.2%로 줄었다 — 사업체 종사자의 부패 경험률과 관련 인식은 장기적으로 크게 낮아졌다[국민권익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핵심 지표 ② 소통의 개선과 포용성의 국제적 위치(16.7.2). 국가기관의 대국민 소통 평가는 2013년 2.0점에서 2024년 2.3점(4점 만점)으로 개선되었다(중앙정부 2.3, 지방정부·지방의회 각 2.4). 의사결정이 포용적이라고 믿는 인구 비율은 2023년 38.7%로, 자료가 제공된 OECD 35개국 중 8위였다. — 스위스(58.2%) 등 최상위권보다는 낮지만 영국(19.8%)·프랑스(26.3%)·독일(28.9%) 등 서유럽 주요국을 웃도는 수준이다[사회통합실태조사; UN].

핵심 지표 ③ 낮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16.1.1). 살인범죄 발생비는 2011년 인구 10만 명당 0.85건에서 2024년 0.54건으로 37.0% 감소했다. 국제 비교(2023년 0.48명)로는 일본(0.23명)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낮다. 차별 경험률도 2019년 28.2%에서 2024년 14.3%로 절반이 되었다[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핵심 지표 ④ 인신매매 대응 법제의 체계화와 제도적 진전(16.2.2). 형법상 인신매매죄 신설(2013), 인신매매방지법 제정(2021), 제1차 방지 종합계획(2023~2027)과 피해자 식별 지표 고시로 예방·식별·보호·처벌의 종합 체계를 갖췄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2024)는 한국의 근절 노력을 1등급으로 평가했다.

핵심 지표 ⑤ 디지털·규제 거버넌스의 세계적 인정(16.6/16.7). 디지털정부와 규제정책 영역에서 한국의 제도 운영 역량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OECD 디지털정부평가(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2019년, 2023년에 이어 2026년에도 종합 1위(0.95점, 2위 호주와 0.07점 격차)를 차지했고, 특히 데이터 기반 정부 부문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 대상국 중 유일한 만점을 기록했다.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iREG)에서는 2015년 평가 개시 이후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2개 분야(법률·하위 법령 모두)와 신설된 투명성 지표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달성했다 — 다만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는 법률 3 위·하위법령 5 위로 시민 의견수렴은 상대적 과제로 남아 있다.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청탁금지법 시행 10 년

배경: 과거에는 접대와 청탁이 사회적 관행으로 통용되었다. 2000 년 사업체 종사자 4 명 중 1 명이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었다.

활동: 2016 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직무 관련성·대가성과 무관하게 금지하는 포괄적 규범을 세웠고, 공직사회와 민간의 접점 전반에 '주고받지 않는' 새 표준을 만들었다.

변화: 국민의 부패 경험률은 0.49%(2025)로, 사업체 종사자의 경험률은 1.6%(2023)로 떨어졌다. 금품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36.4%→9.2%)과 도움이 된다는 인식(79.4%→33.8%)도 함께 감소하여, 행위와 인식이 동시에 변화하였다.

시사점: 포괄적 반부패 입법이 한 세대 안에 사회적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반부패 제도를 설계하는 국가들과의 동료학습 소재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정치 효능감의 역대 최저치 기록.** '나 같은 사람도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 효능감은 2013~2019 년 2.7~2.9 점에서 2024 년 2.5 점(5 점 만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부패 경험률이 줄고 소통 평가가 개선되는 동안에도 효능감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제도의 개선이 자동적으로 신뢰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 **정치 효능감의 집단 간 격차.** 정치 효능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일관되게 낮고, 중졸 이하 학력층과 월 300 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서 뚜렷이 낮다. 제도 접근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신호이며, 국회의 대국민 소통(2.1 점, 기관 중 최저)도 대의 기능의 과제를 드러낸다.
- **살인 감소의 정체와 취약계층의 피해.** 살인 발생비는 2021 년 이후 0.54 건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대상 살인은 전체의 2.6%로 인구 비중(0.4%)의 여섯 배가 넘어, 취약계층에 폭력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차별의 이동과 복합.** 전체 차별 경험률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연령 차별의 무게중심이 청년(2020 년 20 대 이하 17.6%)에서 고령층(2024 년 60 대 이상 8.1% 증가)으로 이동하고 있고, 여성은 성별 차별(6.4%)과 연령 차별(5.7%)을 동시에 겪는다.
- **인신매매 대응의 사각.** 법제는 갖춰졌으나 국제 평가(TIP 2024)는 어업 분야 외국인 강제 노동 피해에 대한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2016~2020 년 연평균 646.6 건의 인신매매 등 범죄가 보고된 만큼, 법의 완성이 곧 보호의 완성은 아니다.

- **제도 설계와 체감의 격차.** 규제관리 제도 자체의 국제 평가는 세계 최고 수준(iREG 1 위)이지만, 기업이 실제 느끼는 규제 부담을 측정하는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에서는 2023 년 38 개국 중 20 위에 머문다. 제도의 설계가 현장의 체감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디지털 정부 서비스 역시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격차는 별도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이 목표의 LNOB 대상은 의사결정 참여와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이다. 정치 효능감이 낮은 여성과 저학력·저소득층은 의사결정이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며,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위험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폭력에 노출된다. 외국인 노동자, 특히 어선의 이주 선원은 인신매매·강제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고(SDG 8·10 상호참조), 아동은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의 38%를 차지한다. 연령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령층도 포함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가 닿지 않는 집단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0.4%)에 비해 살인 피해자 비중(2.6%)이 높게 나타난다 — 취약계층에 폭력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에너지·산업 전환과 시설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SDG 7·12·15)을 공론과 참여로 조정하는 민주적 절차는 전환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거버넌스의 품질이 다른 목표의 이행 속도를 좌우하는 것이다.

디지털 정부와 AI 의 확산(SDG 9)은 행정의 효율과 접근성을 높이지만, 디지털 소통의 확대가 디지털 약자의 정치적 소외를 키울 수 있다. 2025 년 제정되어 2026 년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AI 거버넌스와 안전·신뢰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뒷받침한다. 여성의 대표성과 정치 효능감(SDG 5), 차별의 해소(SDG 10)는 포용적 제도의 성과와 직결되는 지표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이 목표에서 한국의 주요 국제 기여는 민주주의 이행 경험의 공유다. 전쟁과 권위주의를 거쳐 시민의 참여로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헌정 질서의 위기를 평화적 참여로 회복한 경험은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되는 국제 환경에서 참조할 수 있는 사례다. 제도 면에서는 OECD 가 공인한 세계 1 위의 전자정부·디지털 플랫폼 정부, 규제혁신의 경험을 개도국 거버넌스 협력(전자정부 자문·연수, ODA)으로 공유하고,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대응에서 1 등급(Tier 1)

평가(TIP 2024)를 받았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다자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 **효능감의 회복 — 참여 통로의 재설계.** 여성·저학력·저소득층 등 정치 소외 집단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 통로(공론화·주민참여·디지털 참여의 접근성)를 넓혀 역대 최저의 정치 효능감을 반전시킨다.
- **대의 기능의 소통 개선.** 기관 중 가장 낮은 국회의 대국민 소통(2.1 점)을 끌어올리는 입법 과정의 투명성·시민 참여 확대를 과제로 삼는다.
- **취약계층 보호의 강화.**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예방·수사·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어업 분야 이주 노동자의 강제 노동 등 인신매매 사각에 대한 이행을 국제 지적에 맞춰 보완한다.
- **제도 신뢰의 데이터 기반.** 목표 16의 취약한 데이터 가용률을 보완하기 위해 폭력·차별·참여의 세분화 통계(성·연령·장애·이주 상태별)를 확충한다(SDG 17 연계).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https://kosis.kr>, 2025.9.8. 인출)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식실태조사(<https://kosis.kr>, 2025.9.21. 인출)

관계부처 합동, 2023, 제 1 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U.S. Department of State, 202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국가데이터처, 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2025.11.5. 인출)

OECD, 2023, 2023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https://www.oecd.org/en/publications/2023-oecd-digital-government-index_1a89ed5e-en.html, 2026.8.5. 인출)

OECD, 2026, Digital Government Outlook 2026(https://www.oecd.org/en/publications/digital-government-outlook_0496b2bc-en.html, 2026.8.4. 인출)

OECD, 2025,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5: Korea(https://www.oecd.org/en/publications/2025/04/oecd-regulatory-policy-outlook-2025_a754bf4c/full-report/korea_1a947798.html, 2025.12.10. 인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디지털포용법(2026.1.22. 시행)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24(<https://www.transparency.org/en/countries/south-korea>, 2025.12.10. 인출)

■ SDG 17 : 이행 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Goal 17 :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한국적 맥락 (National Context)

글로벌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한국은 2010 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 규모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사회의 SDGs 이행을 위해 2016 년 제 1 차 VNR 이후 지난 10 년은 공여국으로서 개발협력정책을 선진화하고, 개도국과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특히 SDG 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협력대상국 정부, 개발협력기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2022 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은 범정부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약속을 담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DC)의 창립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2011 년 제 4 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개최하고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GPEDC 의 여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개발효과성 의제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제 3 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은 2030 년까지 ODA 규모를 2019 년(3.2 조 원) 대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에 따라 2025 년 ODA 예산을 6.5 조 원으로 편성하여 이 목표는 조기에 달성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1;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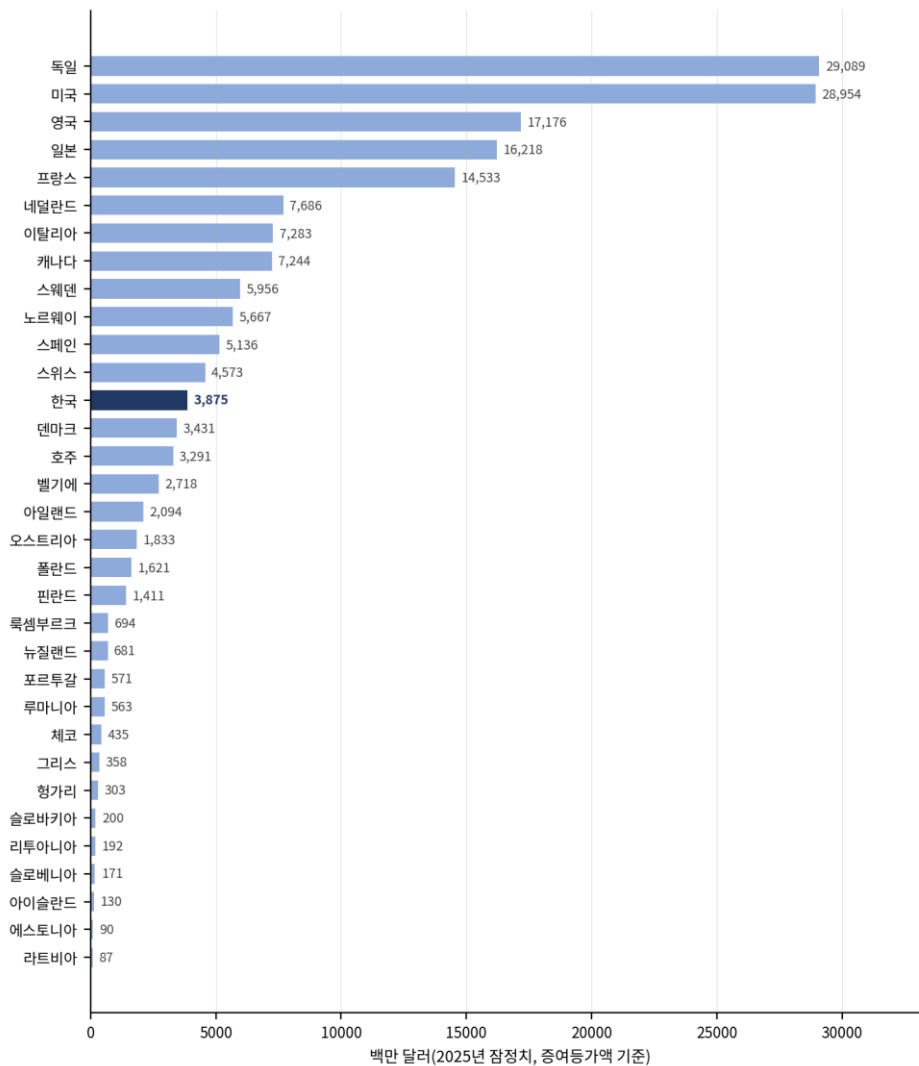
제 4 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이하 제 4 차 기본계획)은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 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적 가치실현, 호혜적 상생확대, 혁신적 개발이행, 통합적 체계구축의 4 대 전략목표와 12 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동 종합기본계획은 그동안의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내실화 및 투명성, 책무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민관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B. 핵심 진단 : 4 부문 (Core Diagnosis)

	OECD/국제평균 대비 양호	OECD/국제평균 대비 미흡
개선	[+] 양호·개선 영역	[^] 개선중 영역 ← 한국(ODA/GNI)
정체	[!] 유지노력 영역	[X] 개선필요 영역

[사] 개선중 영역으로 한국의 ODA 양적 규모는 GNI 대비 ODA 비율이 0.20%(2025 잠정치)로 DAC 평균(0.26%)과 UN 권고치(0.7%) 미만이나, DAC 가입(2010) 이후 지속적이고 뚜렷한 개선 추세이다. 절대 규모(38.7 억 달러)로는 DAC 32 개국 중 14 위인 반면 GNI 대비 비율은 22 위로, 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기여와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010 년 DAC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ODA 규모(2023 년 불변가격)는 2011 년 13.6 억 달러에서 2024 년 41.5 억 달러로 세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2025 년의 경우 39 억 달러(잠정치, 실질 가치 기준)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했으며, 이는 2024 년 대비 실질적으로 2.3% 감소한 수치이나 DAC 회원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2025 년에 1,743 억 달러에 달해 2024 년 대비 23.1%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사상 최대 연간 감소폭이며 2 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여, 국제적으로 ODA 양적 규모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출범 수준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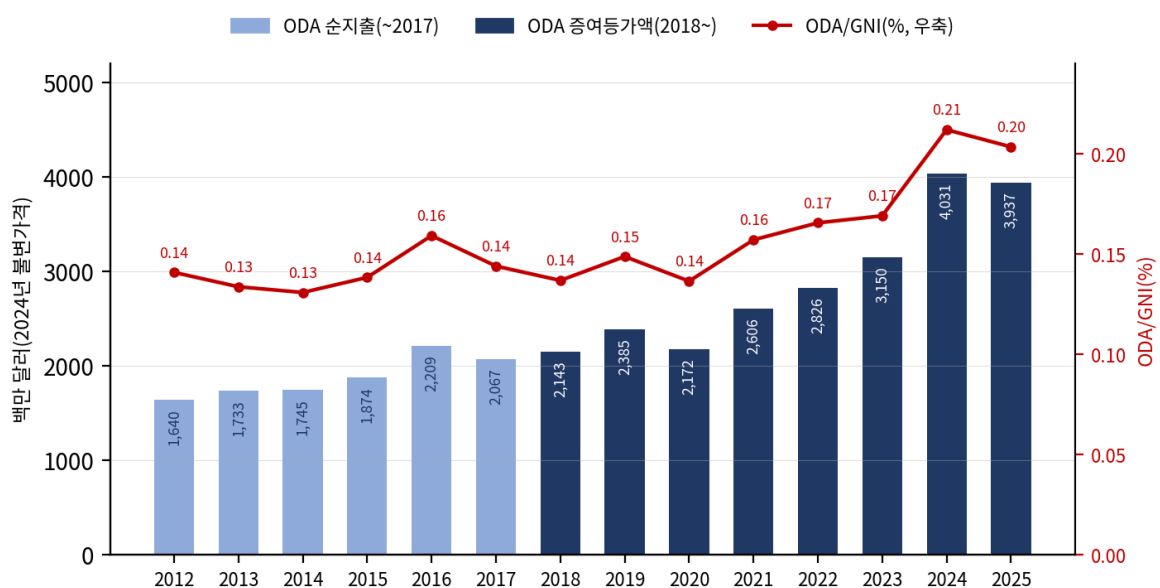
[그림] DAC 회원국의 ODA 지원규모 비교(2025 년, 잠정치, 증여등가액 기준, 백만 달러) — 출처: OECD DAC(2026), Prelimina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levels in 2025(<https://www.oecd.org/en/topics/policy-issue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oda.html>)

종합하면 국제사회의 ODA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국면에서 한국은 규모를 유지·확대해 왔으나 GNI 대비 비율은 국제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목표의 과제는 양적 확대의 지속과 재원 구성·파트너십의 질적 개선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의 양적 확대 성과를 토대로 한정된 재원을 전략 분야와 효과성 높은 사업에 집중하고, 사업 구조개편과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ODA의 질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기간 ODA 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되어왔으나, 2026년부터는 재정 여건과 개발협력의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통합적 성과관리 및 질적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저성과·소규모·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국가·분야별 전략과 개별 사업의 연계, 통합성과관리 및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C. 양적 성과 (Quantitative Performance)

핵심 지표 ① ODA 규모 및 GNI 대비 비율(17.2.1). ODA/GNI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이는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반영한다. 최근 5년간('20~'24년) 한국의 ODA 규모는 연평균 15% 증가하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연평균 증가율(6.9%) 대비 약 2.17 배를 기록하였다. 2024년 한국의 ODA는 4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6% 증가한 바 있으나, 2025년 다자 ODA의 감소로 개발협력 규모는 39.4억 달러(잠정치, 실질 가치 기준)를 기록하였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도 0.20%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0.01%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제 4차 기본계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및 기여 확대 요구, 한정된 재정상황, 주요공여국의 개발협력 재원 축소 동향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2030년 ODA 규모를 OECD DAC 32개국 중 13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림] 한국의 ODA 지원규모와 GNI 대비 비율 추이(2012~2025년; 2025년 잠정치) — 주: 2024년 불변가격, 2017년까지 순지출·2018년부터 증여등가액 기준. 출처: OECD(2026),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

핵심 지표 ② 취약계층 직접 지원의 급증. 취약성이 높거나 극도로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은 2024 년에 12 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한국의 총 양자 공적개발원조(ODA)의 34.6%를 차지한다. 이중 14.5%는 인도적 지원 형태로 제공되었는데, 이는 2023 년의 4.8%에서 증가한 것이다. 또한 19.3%는 평화 조성에 할당되었으며, 2023 년의 8.5%에서 증가했으나, 평화 조성 기여의 하위 범주인 분쟁 예방은 총 양자 ODA 의 2.8%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2024 년 한국의 양자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양자 ODA 약정액(25 억 달러)의 42.4%를 차지했다, 인도적 지원은 6 억 6,300 만 달러(양자 ODA 의 11%)였다.

핵심 지표 ③ 최빈개도국(LDC)·취약국 배분(17.2.1). 2024 년 한국은 국민총소득(GNI)의 0.06%를 최빈개도국(LDCs)에 지원했다. 한편 2024 년 총 양자 공적개발원조(ODA)의 39.5%를 하위 중소득국(LMIC)에 지원했으며, 최빈개도국은 한국의 총 양자 ODA(10 억 달러)의 28.1%를 지원받았다. 또한, 한국은 2024 년 총 양자 ODA 의 21.7%에 해당하는 7 억 7,560 만 달러를 내륙개발도상국에 지원했다.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 2026].

D. 질적 성과 : 사례 박스 (Qualitative Performance)

[Case] 아프리카 인적자원개발 협력 —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역량강화사업

배경: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인적자원개발(HRD) 역량 지원을 위해 한국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교육 품질과 TVET 교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현지 노동시장 수요와 TVET 프로그램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졸업생의 취업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활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르완다 전국의 모든 직업기술교육훈련 기관(8 개 폴리테크닉, 458개 기술고등학교, 158개 직업훈련원, 총 624개교) 대상으로 직업교육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사 역량강화를 지원하였다.

변화: SDG 4(양질의 교육), SDG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물론 르완다 정부의 국가개발전략인 Vision 2050, 교육분야 전략인 ESSP(Education Sector Strategic Plan)을 구현하고, 교육개선을 통해 TVET 학생의 취업 역량 개선에 기여하였다. 르완다 TVET 프로그램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연계 실시하고,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르완다 TVET 분야 최초 유상원조 사업으로 '르완다 기술인력개발센터 건립사업'을 지원하였다.

시사점: 한국은 지난 15 년간 직업훈련/교육 분야를 집중 지원해오며, 개별 직업교육훈련기관 단위에서 전국 직업훈련기관의 성과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등 르완다 직업교육훈련 분야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직업교육훈련 품질관리 결과물을, World Bank, UNESCO 등 타공여기관도 참고하는 등 르완다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E. 남은 과제 (Remaining Challenges)

- **ODA 양적 규모:** 한국의 SDG 17 이행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이나, 일부 영역에서는 국제권고 대비 격차와 후퇴 위험이 존재한다. GNI 대비 ODA 비율이 0.21%(2024)에서 0.20%(2025)로 낮아지고 있으며, UN 권고치(0.7%)의 3분의 1, DAC 평균(0.26%, 2025)의 4분의 3 수준이다. 특히 2026년 ODA 예산(확정액 기준)이 25년 대비 16.4% 감소하여 양적 규모가 경제수준 대비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 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재원의 전략적 집중과 사업의 질적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최빈개도국 지원:** 최빈국(LDCs)에 대한 지원은 2024년 GNI 대비 0.06%로 UN 권고(0.15~0.20%)에 미달하나, 이는 총 규모의 GNI 비율이 낮은 문제에서 발생한다. 다만, 현재 LDCs에 대한 배분 비중은 OECD 평균을 상회('21~'24년 양자원조 중 LDC 비중 한국 33.5%, OECD DAC 평균 19.7%)하며, 제 4차 기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배분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다.
- **빈곤 감소 분야 지원:** 한국은 양자 공적개발원조(ODA)의 5.2%(1억 8,640만 달러)를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a.1)에서 정의하는 빈곤 감소분야에 배정하였다. 이 지표는 기초 사회 서비스(예: 기초 보건 및 교육, 식수 공급 및 위생, 기초 사회 서비스를 위한 다분야 지원) 및 개발 식량 원조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또한 한국의 양자 ODA의 0.2%(750만 달러)는 사회 보호 지원에 사용되었는데, 빈곤감소 목적 ODA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성평등 지원:** 2023-2024년 기간 동안 한국은 심사를 거친 양자 공적개발원조(ODA)의 25.1%를 성평등 및 여성 권익 증진에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2021-2022년의 26.4%보다 낮은 수준이고, DAC 평균인 2023-2024년의 48.2%와 비교해도 미흡하다. 한국은 연평균 13억 달러 규모의 심사를 거친 양자 공적개발원조를 성평등 지원에 사용하여 양자 간 ODA 배정액 중 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은 비중은 2023-2024년에 3.3%에 불과하다. 이는 DAC 회원국 평균인 4.2%보다 낮다.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5.7%에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2023-2024년 DAC 평균인 21.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F.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NOB)

SDG 17의 LNOB는 최빈국뿐 아니라 군소도서개도국과 내륙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분쟁·재난으로 발생한 취약국과 분쟁지역의 난민·이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최빈국은 소득과 국내 저축 수준이 낮고 효과적인 국내 자원 동원이 어려워 외부 자원 의존도가 높고, 내륙에 위치하여 경제개발에 제약이 큰 내륙개도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과 함께 국제 사회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군소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2023년 5월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서 2024년 6월에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이 추진되었다. 2026년 9월에는 한-중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인프라·교역 확대를 위한 중아시아 내륙국가들과 협력기반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공동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취약국(fragile states)에 대한 지원도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서 개발,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왔다. 국제적으로 국가간 분쟁,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식량,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취약국가, 취약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UN은 '인도주의-개발-평화 넥서스(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를 발표하여 인도적 지원과 개발,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는 성과의 연결고리를 확정하였으며, 한국에서도 2017년 6월에 취약국 지원 전략을 수립하였다. 취약국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스템의 역량 강화와 국제사회의 분쟁 예방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간 분쟁과 기후재난 등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면서 인도적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협력을 위해서는 포용적 파트너십과 회복력 중심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G. 횡단 이슈 연결 (Cross-cutting Linkages)

파트너십은 다른 목표의 이행수단이 국경을 넘어 작동하게 하는 통로다. 기후재원·그린 EDCF·생물다양성 ODA(SDG 13·15)는 탈탄소 전환에서 개도국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수단이며, 과학기술·혁신 협력(SDG 9)과 AI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제협력(세부목표 17.6~17.8)은 기술 파트너십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송금과 최빈국 지원은 국가 간 불평등의 완화(SDG 10)와, 취약국의 평화 구축은 SDG 16과 직결된다. 국내적으로는 정책 일관성(세부목표 17.14)의 관점에서 개별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체계가 이행수단의 완성 조건이다.

H. 국제 기여 (Global Contribution)

한국은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2011)를 주최하여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였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2012)하며 기후재원 거버넌스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 등은 SDG 17 관련 다자협력 의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준다.

2023-2024 년 한국은 총 양자 공적개발원조(ODA, 35 억 달러)의 66%를 환경 및 리우 협약 지원에 할당하였으며, 이는 2021-2022 년의 48.6%에서 증가한 수치이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 39%보다 높은 수치이다. 심사 대상 양자 간 공적개발원조(ODA) 중 22%가 환경 문제를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이는 DAC 평균인 11.2%보다 높다. 총 양자 공적개발원조(ODA) 배분액(33 억 달러) 중 63%가 기후변화 전반에 집중되었으며(DAC 평균은 35.4%), 이는 2021-2022 년의 42.1%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은 2023-2024 년 기후변화 적응(49.2%)에 더 큰 비중을 두었으며, 적응에는 35.5%를 지원하였다.

I. 향후 방향 : ~2030 (Forward Direction)

한국은 제 4 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따라 ODA 를 단순한 자원 확대가 아니라, **전략성·효과성·포용성·혁신성**이 결합된 개발협력 체계로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AI·디지털 전환·과학기술 협력의 촉진:** 제 4 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국가협력전략(CPS)·분야별 전략 및 개별 사업이 일관되게 연계되도록 사업의 발굴·심사·조정 체계를 강화한다. 협력국의 개발수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외전략·강점을 함께 고려하는 제안형 ODA(수요기반 공동기획형)를 통해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재외공관과 현지 ODA 기관, 협력국 및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저성과·관행적·소규모 사업의 정비와 사업 간 연계·대형화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개발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ODA 강점인 경제인프라·서비스 지원은 유지하되, 2030 년까지 사회인프라, 재난회복력, 보건·교육, 식수·위생, 사회보호로의 균형을 더 넓혀 SD 17 이 SDG1·3·4·6·10·16 의 이행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
- **AI·디지털 전환·과학기술 협력의 촉진:** 제 4 차 기본계획에서는 I 활용을 새로운 중점 협력 분야로 포함하여 26 년 7 월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KOICA·EDCF·유관기관은 디지털 공공인프라, AI 기반 행정역량, 데이터 거버넌스, 디지털 교육, AI 안전·윤리 역량을 파트너국과 공동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격차가 큰 저소득국과 취약국에는 단순 장비 지원보다 현지 역량 강화, 규범 정립, 공공부문 실증사업, 여성·청년 대상 디지털 포용을 결합한 패키지형 지원이 적합하다.
- **민간재원 동원과 개발금융 활성화:** 제 4 차 기본계획이 강조하는 민관협력과 개발금융 강화에 맞춰, EDCF·EDPF·보증·혼합금융·공동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다만 민간재원 동원은 단순한 총액 확대보다, 기후적응·보건·물·위생·에너지전환·공급망 회복력처럼 공공성이 큰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성과지표를 동원액뿐 아니라 개발성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26), 제 4 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관계부처 합동(2026), '26 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국가데이터처(2026),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권율(2019),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추진과제: K-SDGs 수립과정과 추진체제 개선을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제 12 권 제 1 호. 99-131.

권율(2022), 「국제개발협력과 원조정책의 체계화」, 『미래정책 Focus』. 2022 년 겨울호 Vol. 3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권율(2024),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정책 추진현황과 과제」, 『예산춘추』, Vol. 74, 국회예산정책처.

권율(2024),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대응과제」, 『미래정책 FOCUS』, Vol. 4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권율(2025),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5』. 통계청 통계개발원.

권율 외(2025),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전략연구: 글로벌 사우스의 지역별 현황과 협력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29-02.

OECD (2026), Development Co-operation Profiles: Korea,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6), "ODA projections for 2026 and the near-term: Implications for vulnerable countries and sectors", OECD Policy Briefs, No. 5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7c74fa2-en>)

OECD DAC (2026), A historic decline in foreign aid: Preliminary 2025 ODA data.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data-explainers/2026/04/a-historic-decline-in-foreign-aid-preliminary-2025-oda-data.html>)

OECD DAC(2026),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https://www.oecd.org/en/topics/policy-issues/official-development-assistance-oda.html>)

제 7 장. 이행수단 (Means of Implementation)

7.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 (Financing)

정부 예산의 55.2%는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정부 총수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건전성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바젤 III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금융 여건은 지속가능발전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해서는 공공재정뿐 아니라 민간재원과 국제개발재원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후대응, 사회보장, 지역균형발전, 연구개발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녹색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재원의 참여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ODA 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GNI 대비 ODA 비율은 2024 년 0.21%로 높아졌으며, 양자원조 가운데 최저개발국과 취약국에 각각 30% 이상을 배분하였다. 생물다양성 관련 ODA 는 2023 년 3 억 6,792 만 달러로 확대되어 OECD DAC 32 개 회원국 중 7 위 규모를 기록하였다.

'26 년 2 월 수립된 제 4 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2030 년까지 ODA 규모를 2019 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개발금융도 녹색전환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재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공공·민간·국제개발재원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연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7.2. 과학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

과학기술과 혁신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GDP 대비 5.3%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인구 1 천 명당 연구원 수도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혁신 역량은 감염병 대응, 재난 조기경보, 온실가스 감축 기술, 디지털 교육 등 SDG 이행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이 **포용적인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남은 과제이다.** 여성 연구원 비중은 증가 추세에도 23.7%에 머물러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역량의 차이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혁신 기반의 격차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뿐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성별·기업 규모·지역 등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AI·디지털, 기후·에너지 등 새로운 기술을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기술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격차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성과 포용성, 안전성과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혁신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7.3. 데이터와 이행역량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데이터는 SDGs 의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적인 이행수단이다. 대한민국은 국가데이터처를 중심으로 SDGs 관련 지표를 관리하고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국가 차원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LNOB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인 국가 수준뿐 아니라 성별, 연령, 소득, 장애, 지역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자료와 조사통계의 연계, 새로운 데이터 활용,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등 통계 기반의 확충은 지속가능발전의 상호연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데이터와 통계 역량을 국내 정책에 활용하는 동시에 통계역량 강화와 데이터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SDG 이행에도 기여하고 있다.

7.4. 파트너십과 국제협력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참여하는 한편, 국가 간 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을 확대하는 것도 지속가능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행수단이다.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6 년 9 월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숙의공론장을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숙의공론화 매뉴얼을 마련하여, 참여자 구성, 숙의 과정의 설계·운영, 결과 정리 등 숙의공론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VNR 작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참여와 협력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시민사회,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지속가능발전의 우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 과정을 통해 보고서 작성 과정의 투명성과 포용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국제적으로는 ODA 와 개발금융을 비롯하여 기술·데이터·정책 경험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기구,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협력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경험과 논의를 국내 이행에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주체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과정에 참여하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국내외 협력과 상호학습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 8 장. 변화하는 이행환경과 새로운 과제 (New and Emerging Challenges)

2015 년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채택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였다. 기후위기의 심화와 에너지 전환, AI·디지털 기술의 확산, 인구구조의 변화, 국제질서와 공급망의 재편은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도 지역과 산업, 세대와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의 정책과 제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 한편, 기술혁신과 새로운 협력방식은 SDGs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2030년까지 SDGs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목표별 성과와 남은 과제뿐 아니라 **변화하는 이행환경과 그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주요 이행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장에서 향후 이행방향을 제시한다.

8.1. AI 전환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AI 와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은 생산성 향상과 산업혁신뿐 아니라 보건, 교육, 복지, 재난 대응, 환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데이터와 AI 를 활용한 정책 분석과 공공서비스의 고도화 역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시에 기술 변화는 노동시장과 직무구조의 변화,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역량의 차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책임성 등 새로운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 AI 와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전력과 자원 수요 등 환경적 영향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AI·디지털 전환은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넘어 **기술의 편익과 전환에 따른 영향이 사회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과제**이다. 기술혁신이 기존의 격차와 결합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격차와 배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8.2. 기후변화의 심화와 전환 환경의 변화

기후위기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회복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기후위험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농업과 물관리, 산업과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여러 SDG 의 이행과 직접 연결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진전도 지속가능발전의 이행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에너지와 산업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존 산업과 고용,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전환의 속도와 영향은 산업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뿐 아니라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특히 기후위험에 대한 노출과 대응역량, 전환에 따른 영향이 집단과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8.3. 인구구조와 지역사회의 변화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의 지역 간 이동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속가능발전의 여러 영역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는 노동시장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고령화는 의료·돌봄과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킨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별로도 다르게 나타난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교육·의료·교통·돌봄 등 생활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제공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반면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주거와 교통, 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 문제를 하나의 영역에 국한하여 보기보다 **고용, 복지, 교육, 주거, 지역발전 등 여러 SDG 와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가 세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8.4. 경제, 사회적 격차와 양극화

경제·사회 전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 고용, 주거, 교육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격차는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격차는 개별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역과 세대, 가구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에너지 전환 등 새로운 이행환경은 기존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형태의 격차를 가져올 수 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역량,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 지역별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의 차이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결합하여 서로 다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양극화는 소득이나 자산의 차이에 국한하기보다 **경제·사회적 기회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평균의 개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계층·세대별 격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8.5.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다자협력의 과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 에너지·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은 지속가능발전의 국제적 이행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가 간 경제활동과 생산·소비가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한 국가의 정책과 소비가 다른 국가의 경제·사회·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변화 역시 국내 산업과 에너지, 물가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나타나는 SDGs 성과뿐 아니라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영향과 국제적인 상호의존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 감염병, 디지털 전환 등 국경을 넘어서는 과제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국내 SDGs 이행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제 9 장. 결론 및 향후계획 (Conclusions and Next Steps)

이번 VNR 은 2015 년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채택 이후 대한민국의 SDGs 이행과정을 돌아보고, 그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제도와 추진체계를 발전시키고 경제·사회·환경의 여러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이행 점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반도 확대해 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목표와 지표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목표별 이행 수준과 개선 속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지역과 계층, 세대에 따라 성과가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 영역도 남아 있다. 또한 제 8 장에서 살펴본 국내외 이행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과제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2030 년까지의 SDGs 이행에 새로운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30 년까지 남은 기간에는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행이 더딘 분야와 격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변화하는 이행환경에 대응하면서 SDGs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과 점검을 이어갈 것이다.

9.1. 2030 년까지의 이행 방향

2030 년까지는 목표별 이행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행이 상대적으로 더딘 분야와 변화하는 이행환경이 가져오는 새로운 과제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LNOB)을 바탕으로 전환 과정의 영향을 살펴보고, 경제·사회·환경의 상호연계와 목표 간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VNR 에서 확인한 목표별 성과와 남은 과제, 제 8 장에서 살펴본 변화하는 이행환경을 종합하여, 대한민국은 다음의 방향을 중심으로 2030 년까지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2030 년까지의 이행방향	주요 내용
① 포용적인 AI·디지털 전환	AI·디지털 기술을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활용하면서 접근·활용역량의 격차, 안전성과 책임성, 환경적 영향을 함께 고려
②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적응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산업 전환이 지역·산업·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
③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세대의 지속가능성 강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른 지역·세대별 영향을 살펴보고, 생활서비스 접근성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
④ 격차 완화와 사회적 포용 강화	소득·자산·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격차와 복합적인 취약성을 살펴보고 LNOB 관점에서 사회적 포용 강화
⑤ 국제적 책임과 파트너십 강화	국내 지속가능발전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개발협력, 기술·데이터·정책 경험의 교류와 다자협력 강화

9.2. 후속 점검과 정책 환류

이번 VNR 은 보고서의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책과 이행과정에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 VNR 작성 과정에서 확인한 성과와 남은 과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향후 지속가능발전 이행과 점검에 활용해 나갈 것이다.

첫째, **국가지속가능성평가와 SDGs 관련 지표·통계를 활용하여 목표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관련 정책과 계획을 검토·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둘째,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검토와 이행 과정에서 참고**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참여와 소통을 이어간다.

셋째, **지방정부의 지역검토(VLR), 시민사회의 독립적인 평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이행 경험과 평가가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검토 과정에서 공유·논의될 수 있도록 연계**를 확대해 나간다.

넷째, **세분화된 통계와 데이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가 평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집단과 지역별 격차와 이행 사각지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다.

이러한 점검과 환류를 통해 **VNR 에서 확인한 성과와 과제가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이행과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9.3. 국제사회와의 협력

2030 의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감염병, 디지털 전환 등 국경을 넘어서는 과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경제와 공급망의 상호의존성도 높아지고 있어 국내의 지속가능발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개발협력을 비롯하여 기술·데이터 및 정책 경험의 공유,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를 통한 다자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SDGs 이행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발전과 지속가능발전 이행 과정에서 축적한 **성과뿐 아니라 시행착오와 남은 과제**도 함께 **공유함으로써 상호학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내 SDGs 이행을 충실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내 이행과 국제협력이 서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선순환**을 이어갈 것이다.

9.4. 2030 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논의

국제사회에서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2030 년 이후의 지속가능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점차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우선 2030 년까지 SDGs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면서,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참여해 나갈

것이다.

향후 논의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산업 전환, 인구구조 변화, AI·디지털 전환 등 **2030 년 이후에도 지속될 구조적 변화가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도 정의로운 전환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LNOB)은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가지속가능성평가와 데이터 기반 이행점검, 중앙·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향후 유엔을 중심으로 2030 년 이후 지속가능발전 체계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다.**